

2018. 4. 26



Geopolitical Strategy Report (II)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전망

They all have DREAMS.

리서치센터

유승민 Chief Strategist 02 2020 7024 strategist.you@samsung.com

신뢰에 가치로 답하다 삼성증권



They all have DREAMS.

백두혈통을 명분으로 3대째 정권을 물려 받은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1984~)에게는 꿈이 있다. 단순한 ‘세습’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인민들에게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2022년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16년 7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국가전략 비전으로 제시했던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완성’을 바로 이 때 과시하고자 한다. 祖父 김일성(1912~1994)의 110주년(4월)과 父親 김정일(1942~2011)의 80주년 생일(2월)이 있는 해이자, 조선노동당 창당 77주년(10월)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거래 상대방인 트럼프에게도 꿈이 있다. 연방의회의 중간선거가 올해에 있고, 대통령 재임선거가 2020년에 예정돼 있다. 전쟁이 아닌 평화는 미국의 지도자에게 최고의 정치적 업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지난 해 10월 <북한 핵 위기에 대한 小考: 종착점이 머지 않은 만다린 피쉬(Mandarin fish)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7년 말~2018년 초 사이에 빠르게 대화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미국은 이에 응할 것으로 보았다. 예상은 적중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1차적 목적은 ‘생존’이다. 그 다음은 핵을 레버리지로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번 보고서의 핵심 주제는 ‘경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북한은 ‘비핵화’라는 큰 고비를 넘어서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의 상황전개 속도는 기대를 넘어선다. 하지만 상징적 의미가 큰 정상급 대화와 달리, 실무적 단계에서 북핵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경제적 효익이 금융시장에 전달되는 것 역시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 가변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가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해 아직은 흐릿한 윤곽만을 그려 볼 따름이다.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경제통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북한을 둘러싼 경제협력, 개발 그리고 개방 등이 본격적·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남·북, 미·북 간의 양자 협상에서 다자간 협상의 틀로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 초입에 겨우 들어서기 시작했다.

목차

I. 빨라진 한반도 시계와 논점

- I-1. 남·북, 미·북 정상회담 성사의 배경 4
- I-2. 문재인 정부의 '경제통일, 한반도 신경제 지도' 15
- I-3. 지정학적 위험 완화와 금융시장 영향 등 35
- I-4. 비용 논쟁과 위험요인 57

II. 북한 핵 위기와 경과

- II-1. 북한의 경제·핵 병진 노선의 역사와 배경 70
- II-2. 한반도 불신의 시대 끝날 것인가 80

III. 북한 경제의 이해와 대북 제재

- III-1. 북한의 경제 현황 91
- III-2.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107

IV. 참고 자료

129



I. 빨라진 한반도 시계와 논점

I-1. 남·북, 미·북 정상회담 성사의 배경

I-2. 문재인 정부의 '경제통일'과 '한반도 신경제 지도'

I-3. 지정학적 위험 완화와 금융시장 영향 등

I-4. 비용 논쟁과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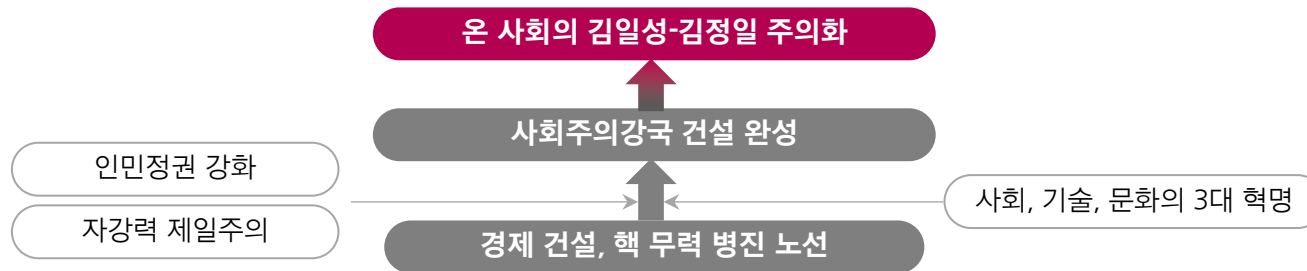
- ▶ **사회주의 강국건설 완성:** 지난 2011년 급작스런 김정일의 사망 이후, 아들 김정은은 불안한 상태로 정권을 넘겨 받았다. 그는 이후 3년간의 국상을 치르고 정적을 숙청한 뒤, 2016년에 7차 조선노동당대회를 열었다.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넘어서 이를 ‘완성’한다는 원대한 국가전략비전을 제시하고, 경제와 핵의 병진노선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 ▶ **북한 국가 핵무력의 완성(?):** 일국의 핵 무력 완성은 핵 폭탄 제조능력과 더불어 이를 수송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하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RBM과 ICBM의 완성은 이뤄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저들은 국가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핵을 레버리지로 미국 등 전세계와 대화하겠다는 우회적 의사표명이다.
- ▶ **북한이 대화로 전환한 이유:** 미국이 주도하는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은 유례가 없었던 수준이다. 민생과 관련 깊은 영역까지 제재 대상이 확대됐으며, 소극적이던 중국까지 동참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강도의 제재가 지속된다면, 수년 내 북한에서 외환위기 발발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이 대화로 전환한 모든 이유는 아니다.
- ▶ **김정은, 2022 프로젝트 본격화:** 김정은은 2022년 개최가 예상되는 제 8차 당대회까지 경제·핵 병진노선의 성과를 과시하고자 한다. 주요국 정치 일정을 잘만 활용하면 자신들에게도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8년에 중간선거가 있고, 2020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역시 집권 후반기 한반도의 안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2022년 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
- ▶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 북한은 출구론적 해법, 병렬적 해법, Gradual approach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입구론적 해법, 일괄 타결, Big deal 등을 고집하고 있다. 특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접점이 없어 보인다.
- ▶ **실리와 명분:** 그럼에도 남·북과 미·북 정상이 만날 이유는 충분하다. 북한과 미국 모두 명분이 있고, 실리 또한 확보할 수 있다. 때문에 현실적 문제로 북한의 비핵화 실현에 시간이 필요한 측면을 미국도 인정한다. 따라서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조속한 단계별 비핵화 등에 합의 정도가 있다면 성공적이다. 여기에 불가역적인 조건 등을 추가하게 된다면 더욱 금상첨화이다.

김정은의 국가 비전 - 사회주의강국 건설 '완성'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국가 전략 방향

- ▶ 핵 무력 강국 건설 + 경제 강국 건설 → 사회주의 강국 건설 '완성'
- ▶ 2018년 4월 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 - '핵 시험, ICBM 시험발사 중지 결정 (경제·핵 병진노선 포기로 해석은 무리)'

북한 7차 당대회 (2016년) - 주요 노선



정치사상강국 건설	군사강국 건설	과학기술, 문명 강국	경제강국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과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 강화 •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 강화 • 인민대중제일주의 철저히 구현 • 자주정치, 청년 중시 •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투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과 당중앙의 유일적 영군체계 확립 강화 • 자립적 국방공업, 혁명공업 강화 발전 • 총대 중심, 군사중심 기풍 확립 • 전 인민적, 전 국가적 방위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강국 건설의 기관차 역할, 첨단돌파전 • 우주과학기술 발전 • 중요 부문 기술공학, 기초과학분야 강화 • 전면과학기술 인재화 • 교육개혁, 교육체계 완비 • 현대적 문화정서생활기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 (새 세기 산업혁명) •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 실현 •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철저 수행 • 내각책임제,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 실시, 대외경제 확대 발전

달라진 김정은 신년사

2018년부터 경제재건에 전력할 것임을 표명

- ▶ 지난 해 11월 국가 핵 무력 완성 선언
- ▶ 올해부터는 경제적 자립 강화 및 열악한 민생 개선을 목표로 제시

2017년 1월 신년사

(중략) 첨단 무장장비 연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이적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발적으로 이룩됨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위력한 군사적 담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중략) 우리는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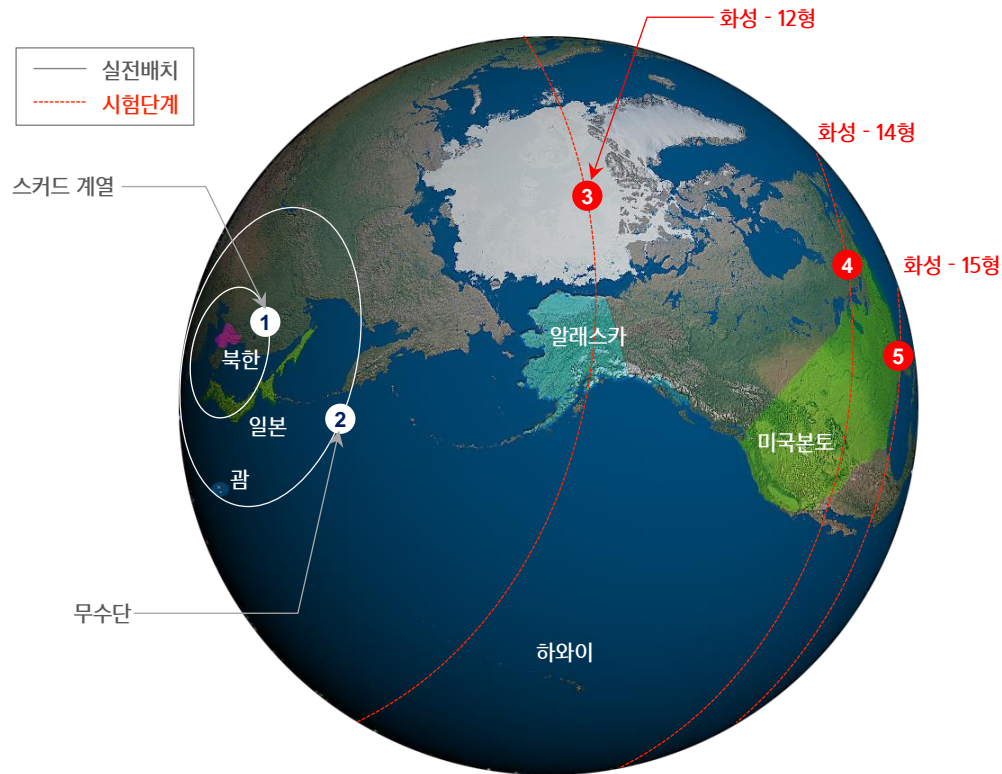
2018년 1월 신년사

(중략) 2017년은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사에 불멸의 이정표를 세운 영웅적 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였습니다. (중략) 지난해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입니다. (중략) 공화국 핵무력 건설에서 이룩한 역사적 승리를 새로운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 공세를 벌여나가야 합니다. (중략)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 경제전선 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심 과업**은 (중략)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 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 핵 무력을 완성했나?

핵 무력 완성은 핵 능력과 더불어 '미사일 능력'이 필수

▶ 수 차례 ICBM, IRBM 발사 불구 대기권 재진입 기술, 종말 유도기술 등 未확보



탄도 미사일 종류	명칭	최대 사거리
① 단거리	KN-02	140Km
	화성-5호(스커드B)	300Km
	화성-6호(스커드C)	500Km
② 준중거리 (MRBM)	무수단(스커드ER)	1,000Km
	노동	1,300Km
	북극성-2형	2,000Km
③ 중거리 (IRBM)	대포동-1호	2,500Km
	화성-12형*	5,000Km
④-⑤ 대륙간 (ICBM)	화성-14형*	10,000Km
	KN-08*	12,000Km
	대포동-2호*	13,000Km
	화성-15형*	15,000Km

참고: * 추정 사거리
자료: 국방부, 주요 언론

그럼에도 북한이 대화로 전환한 이유

미국 주도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 효과

- ▶ 과거와 다른 강력한 제재로 장기화 시 북한경제 실질적 타격 불가피 (112~117pg 참고)
합법적인 수출, 특히 민생과 관련 깊은 영역까지 제재 대상 확대
(ex.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5호. 광물, 수산물 뿐 아니라 섬유제품 수출도 금지)
북한에 대한 투자, 노동력 송출, 원유 및 정유제품 수입 등 제재
- ▶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참여
- ▶ 일각에서는 현 수준의 제재 지속 시, 수년 내 북한의 외환위기 발발 가능성 지적

'사회주의 강국건설 완성' 노선 상 전략적 전환

- ▶ 서구사회 경험한 김정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선택
- ▶ 2022년에 사회주의 강국건설 '완성' 선언을 위한 전략적 시간표 가동 (다음 페이지 참고)

김정은의 '2022 프로젝트' 가동 본격화

리더십을 증명하고 안정적인 장기적 집권 체제 구축 바라는 김정은, 주요국 정치 일정 활용

- ▶ 2022년 개최가 예상되는 제 8차 당대회까지 경제·핵 병진노선 성과 도출 → 김정은 장기 집권 구도 구축
-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연임선거 등 앞두고 있어 북핵 이슈에 대한 해결 가능성 높다는 판단
- ▶ 중국 시진핑 주석, 집권 후반기 한반도 안정 확보 필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20주년 (10월 8일) - 1차 핵실험 11주년(10월 9일) - 6차 핵실험 (9월 3일) -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11월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올림픽 참가 - 남·북, 미·북 대화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당 창당 75주년 (10월) - 북·미 코뮤니케 20주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탄생 80주년 (2월) - 김일성 탄생 110주년 (4월) - 제8차 노동당대회 (?) <p>; 경제·핵병진 정책 성공 선언</p>
	핵 무력 완성	협상을 통한 제재 해소 - 정권 안정, 경제 재건			성과 과시, 김정은 장기 집권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의회선거 (=중간선거,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6대 대통령, 연방의회 선거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의회선거 (=중간선거, 11월)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차 공산당대회 (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차 공산당대회 (10~11월)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6월) - 개헌투표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대 대통령 선거 (3월)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미정)

참고: 위 내용은 당사의 의견이며, 지난 해 10월 보고서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음

Top down 방식으로 문제 해결 시작

당초 전망은 3단계 이후에나 남·북, 미·북 정상 회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협상 속도 올려 비핵화와 보상과정도 앞당기려는 전략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젠다	대결에서 대화로 전환	평화공존체제 기반조성	평화공존체제 성숙	평화공존체제 완성
비핵화 단계	핵 동결 예비협상	북핵 동결	북핵 불능화	비핵화 완성
주요 논쟁점	북한 핵·미사일 시험 일시 중지 선언	非핵화 목표 확인 (핵물질 생산중단), 미래 핵 중단 (IAEA 감시)	현재 핵 중단 (북핵 시설 신고, 폐쇄·불능화, 핵무기생산중단, IAEA 감시)	과거 핵 제거 (북핵 폐기, NPT 복귀)
정치 이벤트	남·북/미·북 정상 회담	한반도 평화 선언 등	다자간 정상회담 개최, 평화체제 잠정조치, 예비협정 체결	2+2 한반도평화협정 체결
미·북 관계	미·북 접촉 본격화	미·북 수교협상 개시, 대북제재 완화	미·북 상호연락사무소 개설	미·북 수교, 대북제재 철폐
한·미 관계	한·미 연합훈련 조정	한·미 연합훈련 축소	미군 역할·규모 조정, 전시작전 통제권 이전	유엔사 해체
경제 협력	인도적 지원 재개	경제제재 일부 완화, 구호지원 확대, 경수로제공논의, 관련국 경험 추진	남북러, 남북중 에너지 수송망 연결	북한 국제금융·경제기구 가입, 경제제재 전면 해제, 경수로제공

참고: 국립외교원, 통일연구원, 통일부, 삼성증권

표면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은 현격한 입장 차이

북한 : 출구론적 해법, 병렬적 해법, Gradual approach

- ▶ 단계적, 행동 對 행동 해결 구상
- ▶ 상호 조율된 조치에 의한 동시행동

미국 : 입구론적 해법, 일괄 타결, Big deal

-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주장
- ▶ 단계별 목표
 - (1단계) 2018년 후반 (연방 의회 중간 선거 전후) 목표 : 북한 핵 동결
 - » 영변 핵시설 동결 및 검증
 - » 워싱턴 및 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 (2019년 상반기)
 - (2단계) 2020년 중반 (46대 연방 대통령 선거 이전) 목표 : 한반도 비핵화 완료
 - » 북한 핵시설 폐기, 핵탄두 해체 (제3국 이전 후 해체 방식)
 - » 북미 대사관 상호 설치, 북미 수교를 의회가 보장 (가칭 '북한관계법' 제정)
 - » 인권, 생화학무기에 대한 추가 요구 없음

북한 '생존전략' vs. 미국 '세계전략'의 충돌

협상 이후 북한 핵의 장기적인 핵 폐쇄-봉인-불능화 실행으로 갈 것인가?

- ▶ 북한,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ICBM 기술 확보 전 단계에서 일단 중단
6차례 핵실험으로 소위 '다중화, 규격화, 소형화, 병기화' 등은 도달
IRBM~ICBM급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은 논란
- ▶ 그러나 '국가 핵 무력' 완성 선언하며, 핵 유예(모라토리엄) 선언 단계로 직행

미국, '세계 전략' 차원에서 협상 접근

- ▶ 동맹국들의 북한 미사일 우려를 우선 완화할 필요성 미국도 인식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완성은 미국의 안보 제공에 의심 일으킴 →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의 脫 동조화 야기 가능성
- ▶ 한반도에서 미국 영향력 포기 불가
미래 중국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북한의 최종 '비핵화'가 핵심

북한의 비핵화는 비현실적 목표인가?

- ▶ 북한 사회주의헌법에서 '핵 보유국' 명시(2012년)로 아직은 핵 포기 불가
'사회주의 강국 건설완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인 '경제·핵 병진노선'
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미래에 대한 보장 수단으로 핵 인식
제7차 당대회(2016년)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 주의화'를 노선으로 채택

그럼에도 남·북과 미·북 정상에 만나는 이유

- ▶ 북한은 실리 챙기고 미국은 명분 확보

예상 도출 성과 = 북한 비핵화 선언 + 조속한 단계별 비핵화 (+ 불가역적 조건 추가)

- ▶ 현실적으로 기술적 문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현에 시간 필요한 측면을 미국 인정
- ▶ 다만, 과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미래 약속 未이행에 대한 페널티 명기 예상

남·북/미·북 정상 회담 이후

- ▶ 북한 실천적인 비핵화와 NPT 체제 복귀 등 필요

I. 빨라진 한반도 시계와 논점

I-1. 남·북, 미·북 정상회담 성사의 배경

I-2. 문재인 정부의 '경제통일'과 '한반도 신경제 지도'

I-3. 지정학적 위험 완화와 금융시장 영향 등

I-4. 비용 논쟁과 위험요인

문재인 정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경제통일’



Summary

-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5대 기조는 ‘한반도 평화 구축, 북한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비정치적 교류사업 추진’ 등이다. 이 중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과거와 다른 통일 지향적인 ‘경제통일’ 과 연결하여 중요한 주제이다.
- ▶ **경제통일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경제통일’ 구상은 남북관계 개선과 경험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는 그랜드 플랜이다. 특히 ‘신경제지도’는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방경제와 연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3대 벨트는 ‘①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②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③ DMZ 환경·관광벨트’ 등이다.
- ▶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험벨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여러 가지 장점 많아서 최우선으로 추진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남북한의 수도권 포함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동북 3성 중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랴오닝성과 연결하는 교통·물류 인프라 건설을 추진한다.
- ▶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계획이다. 동해권 주요 관광지구 개발, 극동 러시아 지방 천연가스 공급 가스관 건설 사업, 그리고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된 천연자원의 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기타 벨트에 비해 한국 정부와 주변국들의 투자 동참이 필요할 전망이다.
- ▶ **DMZ 환경·관광벨트:**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을 목표로 한다.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가 있는 경제적 개발 보다 평화와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태 환경 보호사업과 평화·생태 관광 거점 육성 등이 거론되는데, 정치적 상징성이 커 다른 벨트보다 의외로 빨리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 ▶ **재원조달:** 프로젝트에 따라 재원 조달 경로는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성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협력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민간참여 프로젝트는 수익성에 따라 정부, 민간의 재원 분담 조달이 가능하다. 재원 이슈 때문에 프로젝트 별로 ‘중요도’와 ‘우선순위’ 높을수록 사업실현 가능시기는 ‘후기’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 (2018년 4월 27일)

3차 정상회담의 3대 의제

- ▶ ① 한반도 비핵화, ② 군사적 긴장완화(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③ 남북관계 진전

미·북 회담 성공을 위한 배경 조성

- ▶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
종전 선언, 적대적 관계 종식 등 표명
- ▶ 미·북 회담에서 논의될 구체적 이행방안 사전 협의 및 합의
- ▶ 남·북 협력 방안 모색

향후 다회적(多回的), 다층적(多層的) 회담으로 확대 타진

- ▶ 양자(남·북, 북·미)회담 정례화
- ▶ 다자 채널 구축
3자(남,북,미), 4자(남, 북, 미, 중), 6자(남, 북, 미, 중, 일, 러) 등 대화 채널 구축
주요국 passing 우려 완화 및 향후 관련국 협력 구도 구축 목적

1~2차 vs. 3차 남·북 정상회담 비교

과거에 비해 실질적 협상 성과 도출 가능성 높아짐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가능성 기대

구분	1차 (2000년 6월 13~15일, 평양)	2차 (2007년 10월 2~4일, 평양)	3차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북한 핵 개발 정도	개발 초기 단계 (플루토늄)	개발 본격화 단계 (플루토늄+고농축우라늄)	개발 완성 단계 (플루토늄+고농축우라늄, ICBM)
주요 의제	통일원칙, 통일 방안, 인도주의 문제, 경제/사회문화교류 및 협력	상호 체제 인정/존중, 긴장완화, 평화체제 전환, 인도주의 문제, 경제/사회문화교류 및 협력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예상
한국 정부 임기	중반	후반	초반
합의 성격/내용	기본방향 제시, 후속회담에서 실천사항 협의	구체적 사항 합의	새로운 방향 설정 예상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예상 성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합의

- ▶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 / 비핵화 프로세스 약속 /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
- ▶ 통일방안 논의 - 남북 경제통합을 우선 추진

남·북 기본협정 체결

- ▶ 남북 합의문의 법적 구속력 확보 - 국가재정 투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 양측 정부 교체와 무관한 정책 지속성 확보 - 국회 비준 통하여 합의의 신뢰성 및 실천 가능성 담보

남·북 대화의 정례화 및 대화 분야 확대

- ▶ 대화 정례화: 외생 변수에 영향 받지 않고 대화 지속
- ▶ 대화 분야 확대: 군사, 인도주의, 사회문화 분야 등으로 대화, 교류 확대
- ▶ 대화 체계화: 정상급, 고위급, 분야별 실무회담 등 상설화 및 제도화

선도사업 선정, 구체적 일정 제시

- ▶ 이산가족 상봉 / 스포츠 문화 행사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핵심 기조: 제재와 대화 병행, 한국의 주도적 역할

5대 정책 기조

- ▶ 한반도 평화 구축
- ▶ 북한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비핵화
- ▶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 비정치적 교류사업 추진

4대 제안 (문대통령 취임 이후)

- ▶ 이산가족 상봉 개최 (실현 예상)
- ▶ **평창 동계 올림픽 북한 참가 (실현)**
- ▶ **남북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진행 중)**
- ▶ **남북 정상회담 포함한 남북 대화의 재개 촉구 (실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개념

- ▶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는 그랜드 플랜
- ▶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이루는 경제통일 과정

배경 및 의의

- ▶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 시급
- ▶ 북방경제권으로 경제영토 확장
- ▶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 변화 유도 위한 실질적 접근 필요
- ▶ 새로운 차원의 남북 경협 모색

비전 및 목표와 원칙

- ▶ **비전: 한반도 경제통일과 북방경제시대 개막**
- ▶ 3대 목표: ①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② 북한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 ③ 남북한 평화공동체 기반 조성
- ▶ 4대 원칙: ① 정경 및 민관 분리, ② 포괄적 호혜주의, ③ 국제규범 준수, ④ 국민적 합의 기반

한반도 신경제지도 - 3대 평화 벨트 구축

(1)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2)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3) DMZ 환경·관광벨트



참고: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안으로 일부 명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변경 예상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한반도 신경제지도 - 요약

주요 내용

▶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 추진

3대 벨트	부문	예상 프로젝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내용 :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 확대 개발 ● 평양, 남포, 신의주 경제특구·산업단지 개발
	교통·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 남·북·중 육상운송로 연결 ● 남포항, 해주항 현대화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및 송배전망 현대화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내용 :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러 가스관 건설 ● 수력발전소 현대화 및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천 자원 특구 개발
	교통·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원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DMZ 환경·관광 벨트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 금강산, 칠보산 등 동해안 관광지구 개발 ● 원산, 함흥, 청진, 나진·선봉 등 주요 도시 경제특구·산업단지 개발
	내용 :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DMZ 환경·관광 벨트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하천 공동관리 ●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생태평화공원 및 문화 교류 센터

자료: 통일부, 통일 연구원, 삼성증권

한반도 신경제지도 -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주요 내용

- ▶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험벨트 건설

특징

- ▶ 장점 많아서 최우선 추진 예상
- ▶ 남북한의 수도권 포함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음
- ▶ 중국 동북 3성 중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랴오닝성과 연결

주요 프로젝트

- ▶ 제조업 중심 경제특구 산업단지 개발
개성공단의 확대개발이 출발점 될 전망
기타 평양, 남포, 신의주 등에서 새 경제특구 건설
- ▶ 주요 산업지구, 남북한 수도권, 중국 랴오닝성 연결 교통·물류 인프라 건설
경의선 철도, 도로의 공동 이용 및 개보수*
전력 개발 및 송배전망 현대화

*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



자료: 국토지리원,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주요 내용

- ▶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특징

- ▶ 서해안 벨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 발전 및 경험 여건 불리

주요 프로젝트

- ▶ 동해권 주요 관광지구 개발: 금강산, 원산, 칠보산 등
- ▶ 에너지 자원분야 사업
 - 장기적 프로젝트이나 대규모 사업(다만 에너지 가격 변동성 걸림돌)
 - 극동 러시아 지방 천연가스 공급 가스관 건설 사업
- ▶ 천연자원 매장 지역 개발 (30pg 참고)
 - 단천지역 특구 지정 (마그네 사이트, 아연, 납 등 매장)
- ▶ 교통·물류 인프라
 - 경원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 나진, 선봉 거점으로 중국, 러시아와 연계 수송망 확충
 - 주요 항만 현대화: 원산, 함흥, 청진
 - 주요 산업지구 등 공급 전력 개발



자료: 국토지리원,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 DMZ 환경 · 관광 벨트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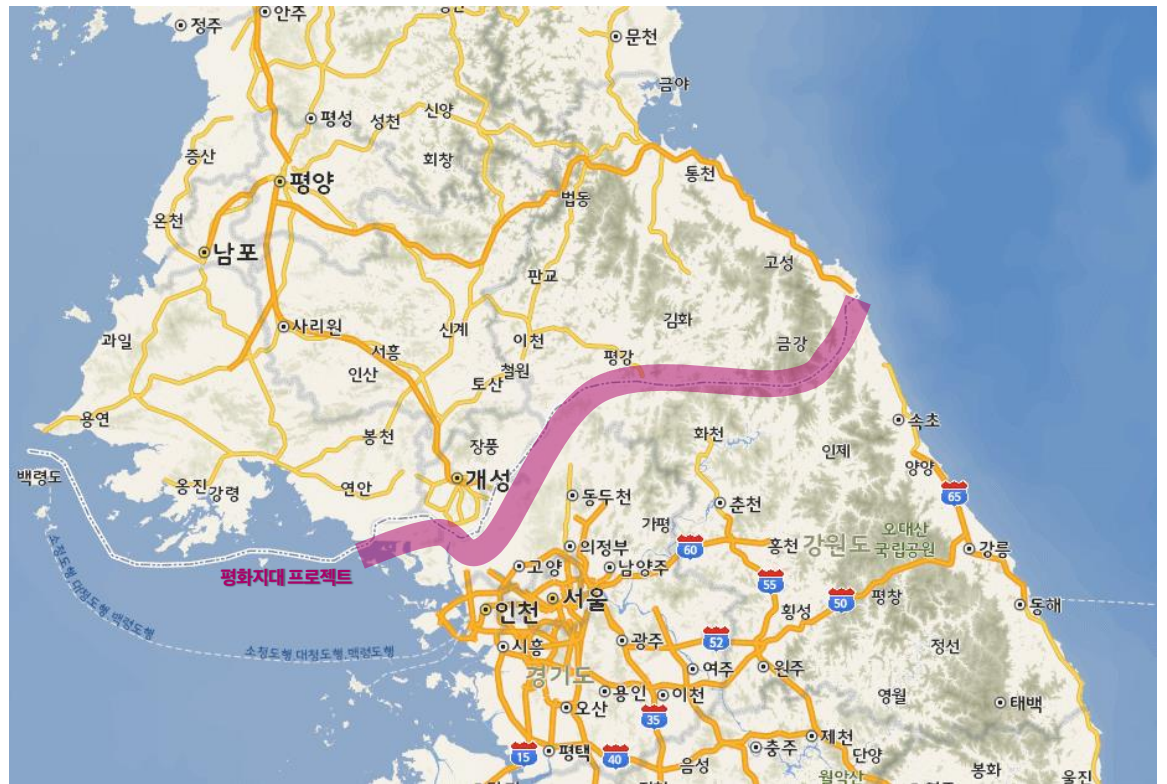
- ▶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특징

- ▶ 경제적 개발 보다 평화와 환경에 초점

주요 프로젝트

- ▶ 생태 환경 보호사업
공유하천 공동 관리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 ▶ 평화 · 생태 관광 거점 육성
세계생태평화공원 개장
문화 교류센터 건립



자료: 국토지리원,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 프로젝트의 자원조달 주체

자원조달 주체 및 형태

▶ 한국 정부, 한국 민간, 북한 자체 등에서 조달 가능

구분	조달 형태
한국 정부	남북 협력 기금*, 국채 발행, 예산 확충 및 전용, 각 부처 개발기금 활용, 세금 (목적세≒통일세)
한국 민간	각종 기금, 민자유치, 이해관계자 출연, 컨소시엄 형태 투자 (PF), BTO 및 BTL**, 재산권에 대한 권리 매각
북한 자체	해외 차관(남한 또는 주변국의 지급보증 필요)***, 토지 및 노동력 제공

* 2018년 3월말 현재 3,134억원
 (경제교류협력보합 100억원, 경협기반/무상 2,480억원, 경협기반/용자 200억원, 형제교류협력대출/용자 250억원, DMZ 생태평화 안보관광지구개발 104억원, 자료: 통일부, 주요 언론)
 ** BTO: Build-Transfer-Operate, BTL: Build-Transfer-Lease
 *** 11pg 표 참고, 4단계 비핵화완성 이후부터 가능

한반도 신경제지도 - 프로젝트 성격 별 자원조달 경로

프로젝트에 따라 자원 조달 경로는 달라질 것

- ▶ 공공성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협력 필요*
- ▶ 민간참여 프로젝트는 수익성에 따라 정부, 민간의 자원 분담 조달 가능

프로젝트	내용	자원조달
인프라 건설	도로신설 및 개보수, 철도 신설과 개보수 및 복선화, 항만 개보수 및 현대화	정부재정, 국제금융기구, 일부 구간 민자 유치
	공항 정비	정부재정, 민자유치
	발전소 건설, 송전망 건설 및 개보수	민자유치, PPP
	통신망 구축	민자유치
산업단지 건설	개성공단 2차 개발, 기타 특국 개발	정부재정, 민자유치
관광개발	북한 내 관광지 개발	민자 유치

참고: * 11pg 표 참고, 4단계 비핵화완성 이후부터 가능

한반도 신경제지도 - 주요 프로젝트 별 종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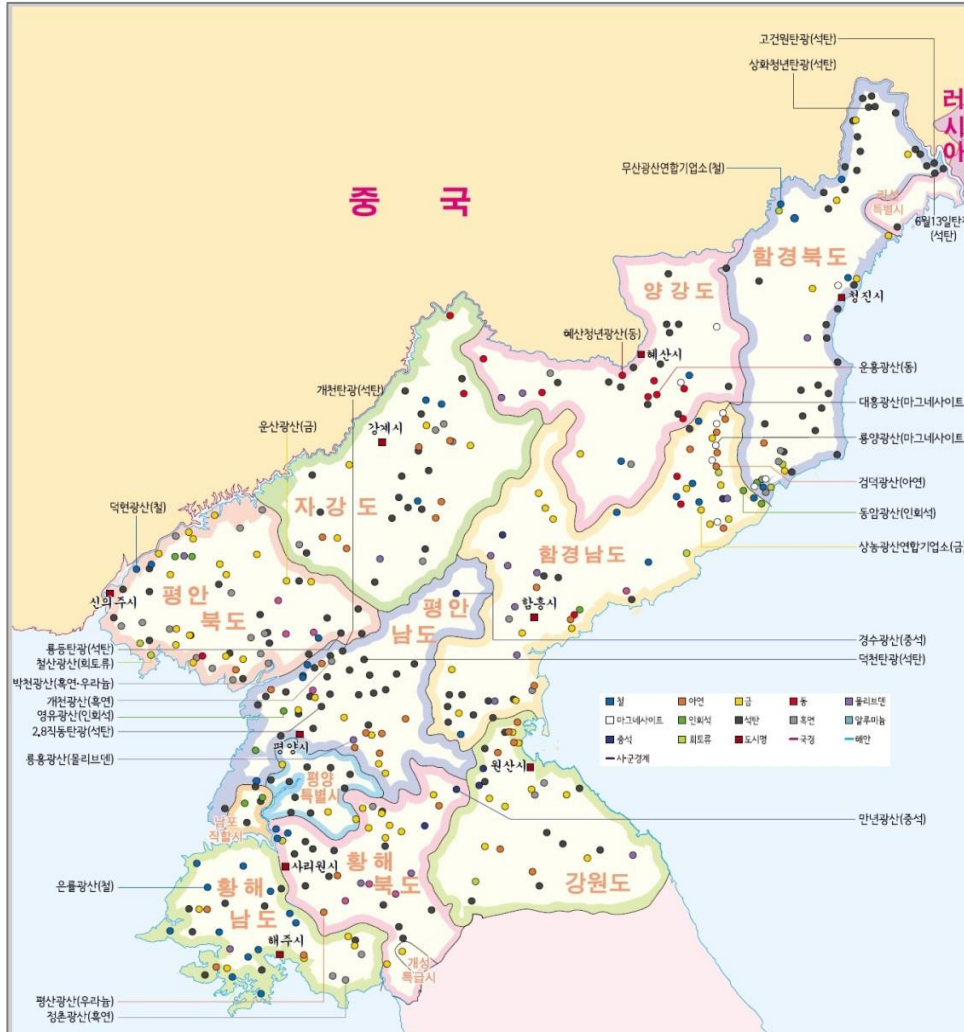
‘중요도’와 ‘우선순위’ 높을수록 사업실현 가능시기는 ‘후기’로 밀림

▶ 남북 및 관계국의 신뢰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신경제지도	프로젝트	참여주체 간 신뢰필요 수준	한국 정부 재정부담 수준	참여자	사업 실현 가능 시기
서해안 벨트	신의주-단둥	중	중	다자	중기
	평양-남포	중	중	남북	초기
	개성-해주	중	중	남북	초기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 회랑	상	상	다자 (국제기구 포함)	후기
동해권 벨트	설악-금강-원산	상	상	남북	초기(시범적)
	함흥-부전고원	중	하	남북	초기
	신포-단천	중	중	남북	초기
	나선-청진-하산	상	중	다자	중기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 회랑	상	상	다자 (국제기구 포함)	후기
DMZ 벨트	평화지대	상	상	양자	후기

자료: 국토연구원 '한반도 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 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 (2015년)'에서 발췌하고 삼성증권이 의견 반영하여 조정

(참고) 북한의 주요 자원과 매장량



자료: 북한지하자원넷, 북한자원연구소, USGS, BP

광종	기준품위	단위	매장량	전세계 매장량 대비 (%)
금	금속기준	톤	698	1.29
은	금속기준	톤	6,356	1.12
철	Fe 63.5%	억톤	24.7	1.45
아연	금속기준	천톤	27,425	11.92
동	금속기준	천톤	4,235	0.54
망간	금속기준	천톤	2,989	0.44
니켈	금속기준	톤	147,638	0.20
마그네사이트	광석기준	억톤	15	19.23
석회석	광석기준	억톤	44	n/a
석탄-갈탄	각급	억톤	179	5.54
석탄-무연탄	각급	억톤	41	0.50

자료: 작측 자료를 기준으로 전세계 매장량 대비 비율은 삼성증권이 추정

(참고)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분류	이름	면적 (km ²)	지정일	주요기능
경제특구	나선경제특구	470.0	1991년 12월	첨단기술산업, 국제물류업, 장비제조업, 무역 및 중계수송, 수출가공, 금융, 서비스
	신의주국제경제지대	132.0	2002년 9월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 개발
	황금평·위화도경제특구	28.2	2010년	정보, 관광문화, 현대농업, 경공업
	금강산경제특구	100.0	2002년 11월	국제관광지
	개성경제특구	66.0	2002년 11월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 개발
경제개발구	압록강경제개발구	6.6	2013년 11월	농업, 관광휴양, 무역
	신평관광개발구	8.1	2013년 11월	유람과 탐승, 휴양, 체육, 오락
	송림수출가공구	2.0	2013년 11월	수출가공, 창고보관, 화물운송
	만포경제개발구	3.0	2013년 11월	농업, 관광휴양, 무역
	위원공업개발구	3.0	2013년 11월	광물자원 및 목재, 농토산물 가공
	현동공업개발구	2.0	2013년 11월	정보산업, 경공업
	흥남공업개발구	2.0	2013년 11월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재, 기계설비
	북청농업개발구	3.0	2013년 11월	과수 및 과일종합가공, 축산업
	청진경제개발구	5.4	2013년 11월	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생산
	어랑농업개발구	4.0	2013년 11월	농축산기지, 농업과학연구단지
	온성서관광개발구	1.7	2013년 11월	외국인 대상 관광개발
	혜산경제개발구	2.0	2013년 11월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와우도수출가공구	1.5	2013년 11월	수출지향형 가공조립
	은정첨단기술개발구	19.0	2014년 7월	IT 첨단기술 산업단지
	강령국제녹색시범지대		2014년 7월	녹색산업기술 연구개발, 유기농 작물, 수산물 가공 위주 공업개발구
	청남공업개발구		2014년 7월	
	속천농업개발구		2014년 7월	
	청수관광개발구	37.7	2014년 7월	혁명사적지, 과수원 관광단지 등
	진도수출가공구		2014년 7월	수출가공, 무역, 창고보관업 등
	경원경제개발구		2015년 10월	
무봉국제관광특구	84.0	2015년 4월	백두산 연계관광 등 (中 화룡시 공동개발)	

자료: 언론 보도

(참고) 과거 남북 주요 경제협력 사업 경과 (1)

개성공단 (2000 ~ 2016년. 현재 중단 상태)

- ▶ 2016년 2월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 상태
- ▶ 중단 직전까지의 개발 진도율은 대지 면적 5%, 업체 수 6%, 고용 인력 15% 수준 (전체 계획 대비)
- ▶ 2015년 기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남북 교역은 27억 달러로, 남북한 총 교역 및 상업적 거래의 99% 차지

관광 (1998 ~ 2008년. 현재 중단 상태)

- ▶ 금강산 관광: 1998년 11월 개시.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
- ▶ 개성 관광: 2007년 12월 시작. 2008년 11월 중단
- ▶ 백두산 관광: 2008년 5월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으나(2007년 11월 합의서에 서명),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진전 없음

운송 (2000 ~ 2008년. 현재 중단 상태)

- ▶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합의
- ▶ 2003년: 경의선과 동해선의 군사분계선 상 철도궤도 연결, 경의선 도로 차량 임시 통행, 동해선 도로를 통한 금강산 육로 시범 관광
- ▶ 2007년: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 시범운행, 10월 정상회담에서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합의 및 공동현지조사
- ▶ 2008년: 북한의 12. 1 조치*로 사업 중단

* 금강산 남측 관광객 피격사건(2008. 7) 이후 남측이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자 북측이 취한 남북 간 육로통행 및 북한 내 체류 관련 제재 조치

(참고) 과거 남북 주요 경제협력 사업 경과 (2)

나진-하산 프로젝트 (2006 ~ 2016년. 현재 중단 상태)

- ▶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연결하는 54km 철도 개보수, 나진항 현대화, 화물터미널 건설과 화물열차와의 연계 등 복합물류시설 사업
- ▶ 국내 민간 3개사(POSCO, 현대상선, 코레일)가 북·러 합작사 '나선콘트랙스'의 러시아 지분 일부를 매입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POSCO: 러시아와 북한 간 유연탄 수송망 확보
현대상선: 해상 운송
코레일: 철도 운영
- ▶ 수 차례 현지 실사와 3차례의 시범 사업 (2014년 11월, 2015년 4월, 2015년 12월)
- ▶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북제재 국면 진입으로 보류된 상황

광역두만강개발계획 (1992년 ~ 현재)

- ▶ 두만강 하류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교통·에너지·관광·환경 등 개발과 투자유치를 도모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사업
- ▶ 1992년 두만강유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으로 시작: 중국 옌지·북한 청진·러시아 나훗카의 삼각지역
- ▶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로 명칭 변경: 사업지역을 한국의 동해안 지역·북한의 나선 경제무역지대·중국의 동북 3성·내몽고자치구·몽골 동부·러시아 연해주와 하바롭스크까지 확대
- ▶ 2009년 북한 탈퇴
- ▶ 현재 4개 회원국(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과 1개 관찰국(일본)이 참여하여 운영 중

(참고) 남한의 과거 대북 지원 내역

정부 지원*

연도	내용	지원방식	규모(억원)
1995	쌀 15만 톤	직접지원	1,854
1996	분유, 기상자재 등	UN 경유	24
1997	옥수수, 분유, 의류 등	UN 경유	240
1998	옥수수, 밀가루	UN 경유	154
1999	비료 11.5만 톤	직접 지원	339
2000	비료 30만 톤	직접 지원	978
2001	내의, 옥수수, 비료 등	직접 지원, WFP, WHO	975
2002	비료, 말라리아 방역	직접 지원, WFP, WHO	1,140
2003	취약계층 지원 등	직접 지원, WFP, UNICEF	1,097
2004	의약품, 비료 등	직접 지원, WFP, WHO	1,313
2005	수해응급구조 등	직접 지원, WFP, UNICEF	1,360
2006	영·유아 지원 등	직접 지원, WFP, UNICEF	2,273
2007	구제역, 식량 지원 등	직접 지원, WFP, WHO	1,983
2008	영·유아, 의료 지원 등	WHO, UNICEF, 국제백신연구소	438
2009	의료인력교육 등	직접 지원, WFP, WHO	294
2010	신종플루, 수해 지원	민간단체 기금 지원	204
2011	영·유아, 의약품 지원	UNICEF	65
2012	백신 및 의료교육	국제백신연구소	23
2013	보건 및 영양 지원	WHO, UNICEF	133
2014	보건 및 영양 지원	WHO, WFP	141
2015	보건, 의료인력 지원	UNICEF, WFP	140
2016	의료장비 등	민간단체 기금 지원	1
합계			15,569

참고: * 식량차관은 제외

민간 지원

연도	내용	지원방식	규모(억원)
1995	담요 8천 매	국적 경유	2
1996	밀가루, 분유, 식용유	국적 경유	12
1997	옥수수, 감자, 라면 등	국적·적십자 경유	182
1998	약품, 분유, 젓소 등	적십자 경유	275
1999	옥수수, 약품, 비료 등	적십자·독자 창구	223
2000	감귤, 의류, 설탕 등	적십자·독자 창구	387
2001	옥수수, 설탕, 분유 등	적십자·독자 창구	782
2002	의류, 의료장비 등	적십자·독자 창구	576
2003	의류, 생활용품 등	적십자·독자 창구	766
2004	농자재, 의약품 등	적십자·독자 창구	1,558
2005	밀가루, 의약품 등	적십자·독자 창구	779
2006	밀가루, 수해 복구 등	적십자·독자 창구	709
2007	의료소모품, 감귤 등	적십자·독자 창구	909
2008	의류, 양모장 자재 등	적십자·독자 창구	725
2009	식량, 온실자재 등	적십자·독자 창구	377
2010	연탄, 말라리아 방역	적십자·독자 창구	200
2011	분유, 두유, 의약품 등	독자 창구	131
2012	밀가루, 수해 지원 등	독자 창구	118
2013	영양뺑재료 등	독자 창구	51
2014	영양식, 농자재 등	적십자·독자 창구	54
2015	진료소자재, 모뎀 등	적십자·독자 창구	114
2016	영양뺑재료, 조제분유 등	독자 창구	2
합계			8,931



I. 빨라진 한반도 시계와 향후 논점

I-1. 남·북, 미·북 정상회담 성사의 배경

I-2. 문재인 정부의 '경제통일'과 '한반도 신경제 지도'

I-3. 지정학적 위험 완화와 금융시장 영향 등

I-4. 비용 논쟁과 위험요인



- ▶ **국가신용등급 상향 가능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지정학적 위험을 중요한 국가 신용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 해 하반기에는 북핵 위기로 3대 신평사 모두가 한국 신용등급의 잠재적인 하락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로 향후 한반도에서 '구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의 하락이 나타난다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가능성도 제시한 바 있다.
- ▶ **MSCI 선진지수 편입:** 지정학적 위험 완화와 MSCI 선진시장 편입의 연관성은 낮다. MSCI Barra는 선진시장지수 편입 기준으로 시장 접근성, 시장 규모, 경제 발전 정도 및 지정학적 환경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선진시장 격상 여부와 관련하여 지정학적 위험을 거론한 것은 지난 2008년이 마지막이며, 이후는 이 조건을 크게 강조하지 않고 있다.
- ▶ **Korea Discount 축소:** 선행 연구에 의할 때 'Korea discount'는 '신흥국 할인 + 한국 고유 할인' 요인으로 구성된다. 신흥국의 할인은 '얕은 시장의 깊이, 낙후된 회계 관행, 부적절한 시장 개입, 부패' 등이 이유이다. 한국 고유 할인은 '안보 위협, 정치적 불안' 등이 원인이다. 실제 북핵 위기가 심화된 2017년 이후 한국의 신흥국 대비 할인이 더 커졌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정착될 경우 이는 크게 축소될 것이다.
- ▶ **남북 경협, 위험 하락/기회 증가:**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한편 남한은 인구노령화에 따른 저성장 구조가 고착되며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의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환경 변화와 남한의 필요성 증대로 과거에 비해서 남북 경협의 위험은 줄었고, 기회요인은 늘었다.
- ▶ **남북 경협을 위한 당장의 조건:** UN 제재가 해제되어야 북한과의 정상적 거래와 투자 가능할 것이다. 즉 당사국과 북한의 핵 협상 개시 이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와 이를 토대로 제재 해제 필요하다. 때문에 제재 해제 이후를 대비하여 사전 준비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주가 반응은 향후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선별할 필요가 있다.
- ▶ **남북 경협을 위한 미래의 조건:** 북한에 대한 본격적, 지속적 투자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북 연계 교통 인프라 및 북한 내부 인프라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 교역 및 투자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장벽도 제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비준이 필요한 '남북경제협력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 교역에 대한 무관세 적용, 운송, 통행의 안전과 편의 최대한 보장, 금융거래 채널도 확보되어야 한다.

지정학적 리스크 ‘구조적 하락 시’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예상

3대 국제 신용평가사는 지정학적 위험을 중요한 국가 신용평가 기준으로 제시

- ▶ 지난 해 북핵 위기로 국제 신평가 3사 모두 한국의 잠재적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지적
- ▶ 단기적인 이벤트보다 ‘구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하락 여부를 더 주목

	S&P Global (2017. 8. 18)	MOODY'S (2017. 10. 18)	FitchRatings (2017. 10. 12)
신용등급 및 전망	AA (안정적) 유지	AA2 (안정적) 유지	AA- (안정적) 유지
북한 리스크	한반도 내 지정학적 긴장감 높으나 직접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 낮음 그럼에도 북의 도발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평가를 악화시키는 요인	북한 관련 불확실성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 충돌 시 한국 신용등급에 큰 영향 현재까지는 경제/금융시장 영향 미미	최근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 고조 직접 충돌 없어도 기업/소비심리 저해 그러나 북한 리스크는 예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새로운 것은 아님 미사일 시험 발사 및 공격적 언행과 실제 전쟁 가능성은 별개
경제 여건	재정/대외건전성 및 성장세 견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협조체계 긍정적 다만 높은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약할 가능성	민간소비/설비투자/수출 등 견조 신정부 경제정책 추진 긍정적 가계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 기업지배구조 개선, 재벌개혁 등 주목	수출 호조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불안 해소 새 정부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에 초점, 내수 진작에 기여 양호한 대외건전성은 큰 장점

자료: 각 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 (투자등급 기준, 2018년 4월 현재)

구분	등급	Moody's	S&P	Fitch
투자 등급	AAA(Aaa)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AA+(Aa1)	영국(-)	미국	홍콩
	AA(Aa2)	한국 , 프랑스, 홍콩	한국 , 영국(-), 벨기에, 프랑스	영국(-), 프랑스
	AA-(Aa3)	대만, 칠레, 벨기에	중국(-), 대만	한국 , 대만, 벨기에
	A+(A1)	중국, 일본, 사우디	일본, 아일랜드, 칠레	중국, 칠레, 사우디
	A(A2)			일본(-), 아일랜드
	A-(A3)	말레이시아, 멕시코(-),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사우디	말레이시아
	BBB+(Baa1)	태국	멕시코(-), 태국, 스페인(+)	태국, 스페인(+), 멕시코(-)
	BBB(Baa2)	필리핀, 이탈리아(-), 스페인(+)	필리핀	이탈리아
	BBB-(Baa3)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자료: 기획재정부

(참고)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평가 기준

S&P Global

- 지정학적/정치적 위험
- 소득 및 경제 구조
- 경제 성장 전망
- 재정정책 여력 및 유연성
- 정부부채 부담
- 민간부문 부채 부담
- 인플레이션 등 통화부문의 안정성
- 대외 부채 부담 및 외환보유 여력

MOODY'S

- 부패방지능력 및 기업투명성
- 정부 효율성
- 법치주의와 규제 질(quality)
- 경제 성장 전망
- 인플레이션 등 통화부문의 안정성
- 무역 개방 정도
- 정부 재정 건전성
- 외환시장의 개방성

FitchRatings

- 정치적 안정성
- 산업환경의 건전성과 금융 위험
- 거시경제정책의 유연성과 신뢰성
- 경제 성장 전망 및 안정성
- 재정 운영의 유연성
- 공공부문 대내/외 부채 부담
- 경제적 충격에 대한 내구성
- 대외 부채 부담 및 외환보유 여력

자료: World Bank, Economics and Finance, Fitch Ratings

(참고) S&P Global의 한국 지정학적 위험 평가 (2017년 8월)

지정학적 리스크를 향후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지적

- ▶ 한국경제가 자신들의 기대보다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경우 경제적 번영과 회복이 더욱 향상될 수 있으므로 국가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음
- ▶ 반면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이 '한국의 경제, 재정, 대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 무력 충돌은 북한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한반도에서 큰 무력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
- ▶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향후 2년 간 북한 리더십 교체(2011년) 이후 관찰된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 ▶ 다만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우발 채무가 한국의 안정된 경제성장을 완화시킨다고 언급함으로써 북핵 리스크가 신용등급 판단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

한국이 강력한 제도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북한의 주기적인 도발은 한국에 대한 제도적 평가를 제한하는 안보 위험이라고 명시
- ▶ 한반도 갈등이 때때로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왔으나 한국은 강력한 제도로 파급효과를 관리해왔으며 지난 10년 간 지속가능한 재정과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밝힘

(참고) Moody's의 한국 지정학적 위험 평가 (2017년 10월)

지정학적 리스크를 전체 등급을 좌우하는 '4대 세부지표' 중 하나로 다룸

▶ 총평 산정을 위한 세부지표

강점(Economic strength, Institutional strength, Fiscal strength), 이벤트 리스크에 대한 민감성(susceptibility to event risk), 정부 유동성 리스크(government liquidity risk), 은행부문 리스크(banking sector risk) 등을 제시

▶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위 4개 지표 중 '이벤트 리스크에 대한 민감성'에 해당

지정학적 리스크는 향후 신용등급의 상승 또는 하락을 좌우하는 첫째 요인

▶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요인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a material reduction of geopolitical risks)

구조개혁 신속 이행 및 지속 성장 기반 구축, 가계부채 감소 등 제시

▶ 한국 신용등급 하락요인

군사적 충돌 또는 북한 정권붕괴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 구조개혁 퇴행으로 인한 장기 성장세 약화, 공기업 부채 또는 기타 우발채무 등 정부재정 악화 등 지적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군사적 충돌'과 '북한 정권붕괴'를 언급

▶ 신용등급 전망 부분에서 군사적 충돌(military conflict)로 인해 정부와 정부재정의 기능, 결제 시스템이 손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신용도에 미칠 영향은 이러한 충돌이 얼마나 지속되고 강렬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힘

(참고) Fitch의 한국 지정학적 위험 평가 (2017년 10월)

지정학적 리스크를 'Key Rating Drivers' 中 부정적 요인의 하나로 선정

- ▶ 한국의 강력한 대외 재정 및 거시경제 성과는 긍정적 평가
북한과의 긴장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geopolitical risk related to the tens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생산성을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
- ▶ 한반도의 오랜 교착 상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등급 산정 시 계속해서 비중을 두고 있다'고 명시

지정학적 리스크를 신용등급 상향요인이자 하향요인으로 동시에 언급

- ▶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요인
지정학적 리스크의 구조적 완화
정부·국영기업 부채를 개선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전략 실행
가계 대차대조표의 악화가 없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
- ▶ 한국 신용등급 하락 요인
경제지표와 안보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한반도 긴장 강화
예상치 못한 공공부문 부채 급증
한국경제 모델이 도전을 받을 정도의 중기 GDP 성장 부진을 하향요인으로 선정

지난 해, 지정학적 리스크의 심각성 판단. 다만 전쟁은 피할 것(will be averted)으로 진단

지정학적 위험 완화와 MSCI 선진시장 편입 연관성 낮음

MSCI Barra의 선진시장지수 편입 기준

- ▶ 시장 접근성 (Market accessibility)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개방의 정도, 시장 및 기업의 성장성, 시스템의 효율성
- ▶ 시장 규모 (Company and security minimum size and liquidity)
기업 및 유가증권의 규모, 유동성, 기업의 수 등
- ▶ 경제 발전 정도 및 지정학적 환경 (Sustainable characteristics of advanced economies and levels of geo-political risk)
경제적 환경과 정치적 안정성을 현재의 선진 시장 수준과 비교하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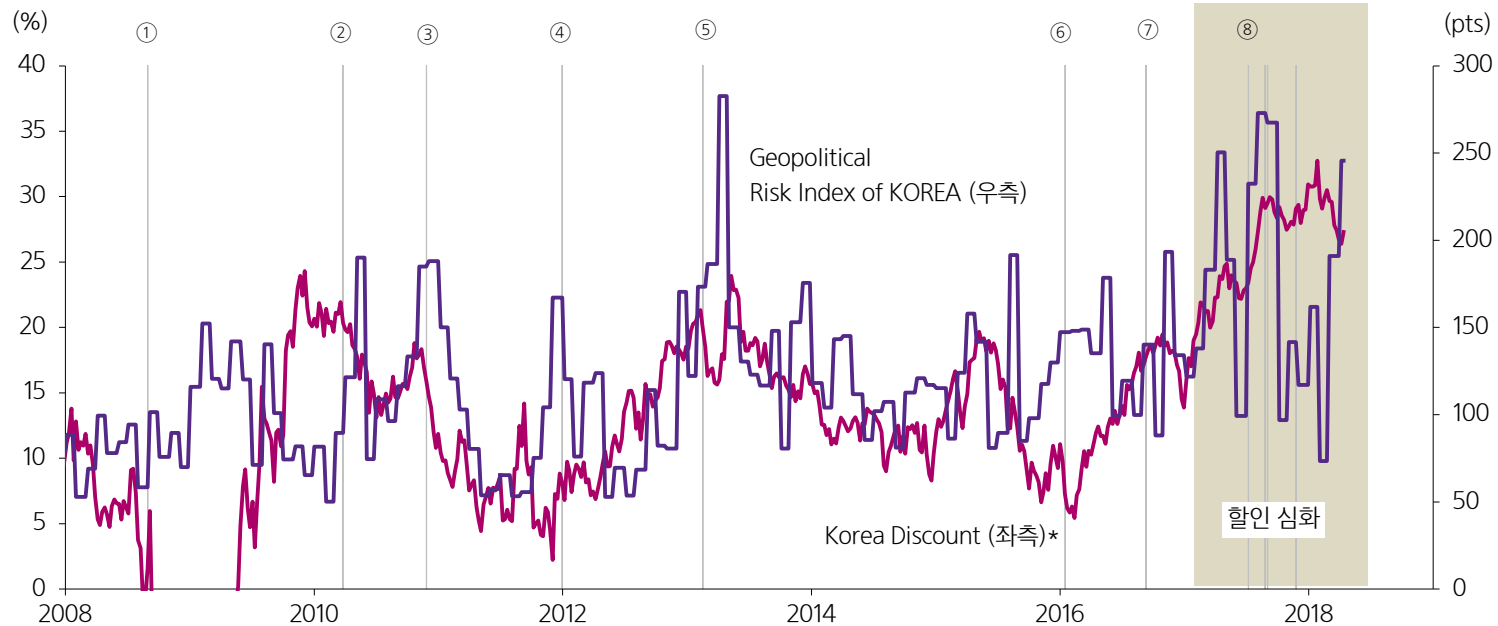
한국의 선진시장 격상 여부와 관련하여 지정학적 위험을 거론한 것은 2008년이 마지막

- ▶ 2008년에도 실제 선진시장 편입 여부에 대한 예비평가보고서는 당초 언급과 달리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논의 전혀 없었음
- ▶ 이후 한국이 MSCI 선진지수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로는 경제발전 정도, 시장 규모, 시장 접근성 등만을 지속적으로 언급

주식시장의 'Korea discount' 완화에 기여할 것

선행 연구에 의할 때 Korea discount는 '신흥국 할인 + 한국 고유 할인' 요인으로 구성

- ▶ 신흥국 할인은 '얕은 시장의 깊이, 낙후된 회계 관행, 부적절한 시장 개입, 부패' 등이 이유
- ▶ 한국 고유 할인은 안보 위협, 정치적 불안 등이 원인 - Korea Discount 는 신흥국 대비로 판단이 적절
북핵 위기가 심화된 2017년 이후 한국의 신흥국 대비 할인 더 커짐 (P/E 기준 과거 대비 약 10%pt 더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될 경우 한국 시장 할인 점진적으로 축소 예상



참고: * Korea Discount는 MSCI EM 대비 MSCI Korea의 P/E 할인율, 주요 이벤트는 ① 북한 핵 불능화 선언 (2008년 8월), ② 천안함 피격 (2010년 3월), ③ 연평도 포격 (2010년 10월), ④ 김정일 사망 (2011년 11월), ⑤ 3차 핵실험 (2013년 2월), ⑥ 4차 핵실험 (2016년 1월), ⑦ 5차 핵실험 (2016년 9월) ⑧ 화성-14형 발사, 화성-12형 정상각 발사, 6차 핵실험, 화성-15형 발사 (2018년)
자료: FRB (Caldara and Iacoviello),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참고) 2017년 이후 글로벌 대비 한국 주식시장 할인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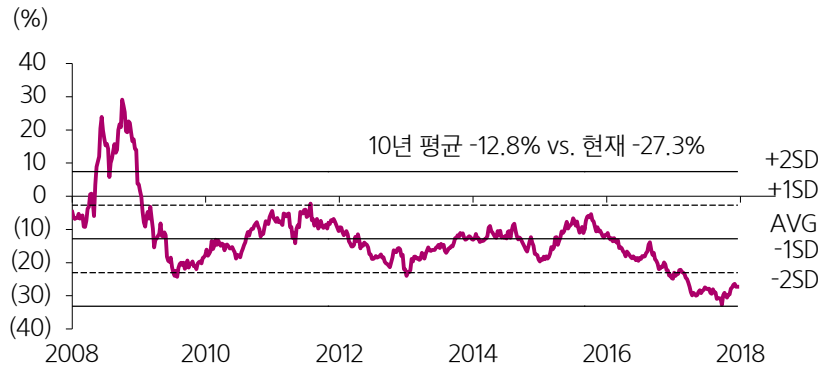
선진시장 대비 한국 프리미엄: MSCI Korea 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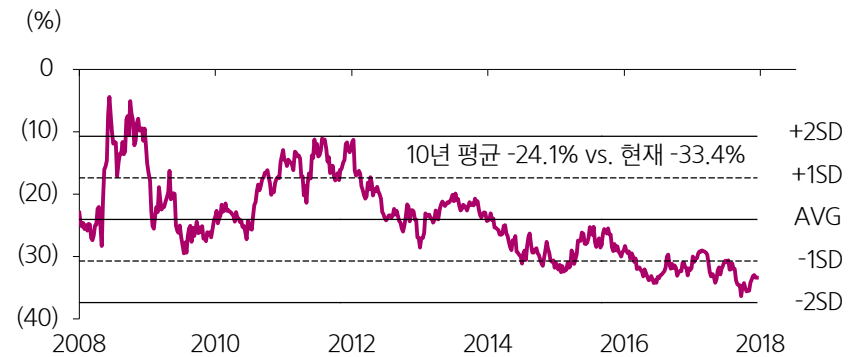
선진시장 대비 한국 프리미엄: MSCI Korea P/B



신흥시장 대비 한국 프리미엄: MSCI Korea P/E



신흥시장 대비 한국 프리미엄: MSCI Korea P/B



참고: 12개월 예상 기준
자료: WiseFn,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참고: 12개월 이익 기준
자료: WiseFn,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남북 경협 - '투자 위험' 하락, '기회 요인' 증가

북한의 환경 변화, 남한의 필요성 증대

- ▶ 북한 -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의 시장화 급속히 진전, 핵 개발 과정에서 경제난 심화 등 변화
- ▶ 남한 - 인구노령화에 따른 저성장 구조 고착,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의 필요성 증대

구분	북한	남한
북한의 시장화 진전	시장 경제 질서에 대한 북한 정부, 기업, 주민의 이해 수준 제고됨	과거는 북측의 시장경제 질서 이해 부족이 중요한 사업 불확실성 → 완화 중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취약한 내수 기반	시장화로 민간부문 자산 축적 중, 내수기반 과거 대비 강화	북한 내수를 대상으로 한 경협사업 가능성 높아짐
북한 경제의 분권화 강화	지방 행정단위, 개별 기업별 의사결정 권한 및 책임 확대 → 지방예산제 강화, 지방 상업은행 설립, 지방급 경제개발구 설립	경협 파트너 (창구)다변화의 실현 가능성 높아짐
남한의 구조적 저성장	북한의 반복적 군사 도발, 핵 개발 등 남한에 대한 위협, 신뢰 관계 구축 어려운 태도	남북 경색 지속으로 교류 중단, 경제 활로 모색, 위기 탈출 위한 대안으로 북한 주시

남북 경협 - 투자 재개의 현재 걸림돌

UN 제재가 해제되어야 정상적 거래와 투자 가능

- ▶ 당사국과 북한의 핵 협상 개시 이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와 이를 토대로 제재 해제 필요
당장은 UN 제재 등으로 경협이 어려우나, 제재 해제 이후를 대비하여 사전 준비 필요
- ▶ 때문에 최근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주가 반응은 향후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선별할 필요

구분	제재	시행	내용
UN 회원국과 북한 간 금융거래를 금지*	안보리 결의 2270호 제 32, 33, 35항 안보리 결의 2321호 제 31, 33항	2016년 3월	금융 채널 봉쇄로 각종 거래의 실무적 어려움 크며, 거래비용 과다하게 발생할 가능성
對 북한 무역에 대한 공적, 사적 금융지원 금지	안보리 결의 2321호 제 32항	2016년 11월	보험, 대출 등 남북 경협을 위한 정부 지원 불가능. 남북 경협의 정치적 리스크를 감안할 때, 정부 지원 없이 기업 차여 불가
북한산 광물, 기초금속 및 수산물 거래 전면 금지	안보리 결의 2371호 제 9~11항 (위 결의 2270호, 2321호 관련 조항 강화)	2017년 8월	상품성이 있는 주요 북한생산물 제외하고 남북교역 성사 어려움

참고: * 인도적 및 외교적 목적 제외

남북 경험 - 투자 확대와 미래 걸림돌

남북 연계 교통 인프라 및 북한 내부 인프라 대대적 확충 필요

- ▶ 초기에는 불가피 남한의 투자 필요
- ▶ 북한의 핵 폐기 이후 국제 기구 등에서 차관 도입 가능

남북 교역 및 투자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장벽 제거

- ▶ '남북경제협력협정' 체결 필요 - 국회 비준
- ▶ 남북 교역에 대한 무관세 적용 (일부 품목은 예외)
- ▶ 운송, 통행의 안전과 편의 최대한 보장
- ▶ 남북간 직간접 금융거래 채널 확보
- ▶ 기업인 상호 방문, 체류, 통신 자유
- ▶ 대북 투자기업의 경영권, 재산권의 제도적·정치적 보증

(참고) 과거 남북 경제 협력 사업과 중단시기

상호간 신뢰부족과 미국의 역할 부재

- ▶ 남북 차원의 경제협력 시도 있었으나, 신뢰부족으로 지속되지 못함
- ▶ 지속성, 안정성 담보할 미국의 불참

구분	중단시점	협력 중단 이유
금강산 관광	2008년 7월	남한 관광객 피격 사건
일반물자 교역, 위탁가공 교역, 투자사업	2010년 5월	천안함 사건, 5.24조치(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 사업 일시 중단	2013년 4월	북측 일방적 사업 중단 선언
개성공단 사업 전면 중단	2016년 2월	북한 4차 핵실험

자료: 통일부, 삼성증권

(참고) 남북 경협 관련주 - 개성공단 관련 기업

- ▶ 최근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주가 반응은 향후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선별할 필요
- ▶ 아래 관련주는 언론 등에서 언급된 기업들 소개. 당사의 투자 의견과 무관

개성공단 관련기업	코드	시장	업종	시가총액	내용
태광산업	A003240	KOSPI	소재	1,385	구 개성공단 입주업체. 석유화학/섬유 생산 업체
쿠쿠홀딩스	A192400	KOSPI	경기관련소비재	619	구 개성공단 입주업체. 전기밥솥 생산업체
자화전자	A033240	KOSPI	IT	325	구 개성공단 입주업체. 전자부품 제조업
신원	A009270	KOSPI	경기관련소비재	225	구 개성공단 입주업체. 의류잡화 OEM 생산업체
남광토건	A001260	KOSPI	산업재	197	건설업체, 개성공단 건설에 참여
제이에스티나	A026040	KOSDAQ	경기관련소비재	182	개성 협동화 공장법인에 100% 출자. 주얼리 및 잡화 생산업체
인디에프	A014990	KOSPI	경기관련소비재	177	구 개성공단 입주업체. 여성복, 신사복 등 생산 의류업체
좋은사람들	A033340	KOSDAQ	경기관련소비재	176	구 개성공단 입주업체. 언더웨어, SPA등 의류업체
태평양물산	A007980	KOSPI	경기관련소비재	168	구 개성공단 입주업체. 의류OEM, 식품 생산, 부동산 임대업
보성파워텍	A006910	KOSDAQ	산업재	161	구 개성공단 입주업체. 전력산업 기자재 생산
재영솔루텍	A049630	KOSDAQ	IT	153	구 개성공단 입주업체. 핸드폰 부품, 광학부품 등 생산업체
인지컨트롤스	A023800	KOSPI	경기관련소비재	107	구 개성공단 입주업체.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참고: 시가총액 순으로 정렬
자료: 주요 언론

(참고) 남북 경협 관련주 - 대북 송전 / 비료 지원 관련 기업

- ▶ 최근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주가 반응은 향후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선별할 필요
- ▶ 아래 관련주는 언론 등에서 언급된 기업들 소개. 당사의 투자 의견과 무관

대북송전 관련기업	코드	시장	업종	시가총액	내용
한국전력	A015760	KOSPI	유틸리티	22,276	한전 포함 산자부 산하 8개 기관이 대북사업 진행
제룡전기	A033100	KOSDAQ	산업재	284	변압기 제조 및 판매업체
광명전기	A017040	KOSPI	산업재	165	수배전반,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제조, 판매업체
제룡산업	A147830	KOSDAQ	산업재	161	통신선 지지용 지중케이블보호판 한전에 납품
이화전기	A024810	KOSDAQ	산업재	159	전원공급장치, 전력변환장치 생산업체
선도전기	A007610	KOSPI	산업재	138	산업용 플랜트에 사용되는 발전, 송변전, 배전설비장비 생산
세명전기	A017510	KOSDAQ	산업재	128	전철선로용, 송전, 배전, 변전선 가설용 금구류 제조, 한전 납품
서전기전	A189860	KOSDAQ	산업재	48	고/저압 수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사업

비료지원 관련기업	코드	시장	업종	시가총액	내용
남해화학	A025860	KOSPI	소재	810	복합비료, 화학제품 생산전문업체
이지바이오	A035810	KOSDAQ	필수소비재	425	곡물 경작, 사료, 사료첨가제, 가축 등 농축산 전문업체
카프로	A006380	KOSPI	소재	362	유안비료, 질황안비료 등 제조
KG케미칼	A001390	KOSPI	소재	330	친환경 미생물 사용, 선충 방제 비료 개발
농우바이오	A054050	KOSDAQ	건강관리	235	종자 육종, 육성 연구 제반사업
경농	A002100	KOSPI	소재	157	농약 제조, 판매사업
팜스토리	A027710	KOSDAQ	필수소비재	121	양돈 배합사료, 축산물 유통
효성오앤비	A097870	KOSDAQ	소재	88	유기질비료 생산, 판매업체
조비	A001550	KOSPI	소재	83	복합비료 등 생산하는 비료 전문업체

참고: 시가총액 순으로 정렬,
자료: 주요 언론

(참고) 남북 경협 관련주 - 남북 철도 / 가스관 관련 기업

- ▶ 최근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주가 반응은 향후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선별할 필요
- ▶ 아래 관련주는 언론 등에서 언급된 기업들 소개. 당사의 투자 의견과 무관

남북철도 관련기업	코드	시장	업종	시가총액	내용
현대로템	A064350	KOSPI	산업재	1,547	철도 부문사업 전문업체
대아티아이	A045390	KOSDAQ	IT	218	철도 신호제어 시스템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 전문업체
현대정보기술	A026180	KOSDAQ	IT	131	철도통합정보시스템 등 SOC시스템 솔루션업체
리노스	A039980	KOSDAQ	경기관련소비재	110	열차무선 통신분야 영위
중앙오션	A054180	KOSDAQ	산업재	108	철도차량용 전동기 OEM 업체를 100% 흡수합병
대호에이엘	A069460	KOSPI	소재	97	현대로템의 1차협력업체
우원개발	A046940	KOSDAQ	산업재	89	철도공사, 지하철 공사 등 다수 이력 보유
특수건설	A026150	KOSDAQ	산업재	57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공간, 지하철 등 수출/시공 이력
푸른기술	A094940	KOSDAQ	IT	57	역무자동화 사업 영위, 중국 등 수출 이력보유

가스관 관련기업	코드	시장	업종	시가총액	내용
동양철관	A008970	KOSPI	소재	138	강관 생산업체
대원전선	A006340	KOSPI	산업재	125	전선/광케이블 전문업체. 러시아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증서 취득
대동스틸	A048470	KOSDAQ	소재	83	열연코일, 구도용 강판, 내후성강, 열연특수강, 강화용 강판 등 취급 철강업체
화성밸브	A039610	KOSDAQ	산업재	60	액화석 유공밸브 제조업체. 러시아, 미국 등 수출주
디케이락	A105740	KOSDAQ	산업재	58	밸브 관련 제품 생산, 공급, 수출
조광HI	A044060	KOSDAQ	산업재	57	산업용 특수자동밸브 제조업체
하이스틸	A071090	KOSPI	소재	55	배관용, 구조용강관 등 취급 튜브제조 전문업체

참고: 시가총액순으로 정렬
자료: 주요 언론

(참고) 남북 경협 관련주 - 금강산 관광 / DMZ 개발 관련 기업

- ▶ 최근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주가 반응은 향후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선별할 필요
- ▶ 아래 관련주는 언론 등에서 언급된 기업들 소개. 당사의 투자 의견과 무관

금강산관광 관련기업	코드	시장	업종	시가총액	내용
현대건설	A000720	KOSPI	산업재	4,928	금강산 관광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업체
현대엘리베이	A017800	KOSPI	산업재	2,375	현대상선 지분 보유, 금강산 관련 사업권을 가진 현대아산의 최대주주
현대상선	A011200	KOSPI	산업재	1,501	금강산 관광사업의 핵심기업. 금강산 유람선 운항사업 진행 경력
에머슨퍼시픽	A025980	KOSDAQ	경기관련소비재	647	금강산 관광지구에 리조트 보유. 레저시설 개발 및 건설, 운영업체

DMZ 개발 관련기업	코드	시장	업종	시가총액	내용
대명코퍼레이션	A007720	KOSDAQ	경기관련소비재	365	강원도 고성에서 골프장, 리조트 운영. IT, 유통, 레저, 호텔, 스키장 등 영업
이월드	A084680	KOSPI	경기관련소비재	203	강원도 고성 호텔, 리조트 보유.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퍼스텍	A010820	KOSPI	산업재	183	감시경계로봇을 한화테크윈과 공동개발
유진로봇	A056080	KOSDAQ	경기관련소비재	170	DMZ 인근 지뢰 탐지 및 제거 관련 기대. 군사로봇 포함 각종 로봇 전문 업체
일성건설	A013360	KOSPI	산업재	95	통일교내 북한과 연계하고 있는 평화자동차와 관련
모헨즈	A006920	KOSDAQ	산업재	92	자회사 덕원산업이 강원도 일대 레미콘사업 영위
자연과환경	A043910	KOSDAQ	산업재	77	하천 재정비, 친환경 방조제, 도로절개지 복원 등 친환경부문사업

참고: 시가총액 순으로 정렬,
자료: 주요 언론

(참고) 남북 경협 관련 주요 일지 (1971~2003)

시기	내용
1971. 8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971. 9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총 25차 실시 (~1972. 8)
1972. 8	남북적십자 본회담 총 7차 실시 (~1973. 7)
1972. 11	남북조절위원회 총 3차 실시 (~1973. 6)
1984. 9	북한, 우리 측에 수해 물자 지원
1984. 11	남북경제회담 총 5차 실시 (~1985. 11)
1988. 7	노태우 대통령,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7.7 선언) 발표
1988. 10	남북 물자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 발표
1989. 1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첫 방북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 체결)
1989. 3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설치
1989.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
1990.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법률 제정
1991. 12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1992. 2	남북 간 위탁가공 교역 시작
1992. 9	남북기본합의서 제 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 부속합의서 채택
1994. 11	제 1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참고: * 정식명칭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시기	내용
1995. 6	대북 식량지원 15만 톤 실시
1996. 9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남한의 대북지원 및 투자 동결
1998. 4	제 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1998. 6	정주영 명예회장 1차 소떼 방북,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 합의
1998. 10	정주영 명예회장 2차 소떼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
1998. 11	금강산관광선 금강호 첫 출항
1999. 2	현대그룹, 남북 경협전담사 (주)현대아산 설립
1999. 6	당국 차원의 대북 비료 지원 최초 실시
2000. 6	남북 최초 정상회담 개최 (6.15 선언)
2000. 10	대북 식량차관 최초 실시
2000. 8	현대-北 아태위원회, 개성공단 6,612만㎡ 개발 합의서 체결
2002. 9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2002. 11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3. 2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식 및 금강산 시범 육로관광
2003. 6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2003. 8	남북 4대 경제협력 합의서* 발효

참고: * 투자보장, 이종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절제

(참고) 남북 경험 관련 주요 일지 (2004~2016)

시기	내용
2004. 1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4. 6	개성공단 시범단지 준공
2004. 12	개성공업지구 첫 제품 생산
2005. 12	연간 남북 교역 규모 10억 달러 돌파
2006. 11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1만명 고용 돌파
2007. 1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 1억 달러 달성
2007. 5	남북 열차 시험운행 실시
2007. 10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8. 7	관광객 박왕자(53)씨 북한군 총격에 사망.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2008. 11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 5억 달러 돌파
2008. 12	북한, 남북육로통행 제한 등 조치
2009. 8	북한, 남북육로통행 제한 등 조치 해제
2010. 5	천안함 사건으로 개성공단 제외한 남북교역·교류 중단 발표 (5. 24 조치)
2010. 8	경협 기업 대상 남북협력기금 대출
2010. 10	북한 수해 지원
2010. 11	연평도 포격 도발로 수해 지원 중단

시기	내용
2011. 4	북한,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사업 독점권 취소 일방 발표
2012. 1 ~ 12	남북협력기금 2차 대출 및 긴급운영경비 무상 지원
2012. 1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5만 명 돌파
2012. 9	대한적십자사 수해 지원 제의했으나 북한이 거절
2013. 1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 20억 달러 달성
2013. 4	개성공단 잠정 중단. 북한 근로자 철수
2013. 9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소
2014. 2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1차 현지 실사
2014. 7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2차 현지 실사
2014. 11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1차 시범 운송
2015. 4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2차 시범 운송
2015. 8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 복원 기공식
2015. 6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
2015. 10	개성 만월대 출토 유물 특별전시회 (서울·개성)
2015. 11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3차 시범 운송
2016. 2	한국, 北 도발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vs 北, 개성공단 군사통제구역 선포

(참고) 개성공단 사업 일지

시기	내용
2000. 8	현대아산-북한 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2. 8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성공단 착공 추진 합의
2002. 11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3. 6	개성공단 1단계 개발 착공식
2004. 4	통일부, 1단계 100만평(3.3km ²) 협력사업 승인
2004. 6	시범단지 15개 기업 입주계약 체결
2004. 12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2005. 9	1단계 본 단지 1차 24개 입주기업 선정 및 계약 체결
2007. 5	한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7. 6	1단계 본 단지 2차 183개 입주기업 선정 및 계약 체결
2008. 11	누적 총 생산액 5억 달러 달성
2009. 5	북한, 개성공단 관련법규 및 계약 무효 선언
2009. 6	남북한, 1~2차 개성 실무회담
2009. 7	남북한, 3차 개성 실무회담
2010. 5	천안함 침몰로 개성공단 제외한 남북교역·교류 중단 발표 (5. 24 조치)
2010. 7	북한 근로자 총 임금 지급액 1억 달러 달성

시기	내용
2010. 9	누적 총 생산액 10억 달러 달성
2011. 12	누적 총 생산액 15억 달러 달성
2012. 10	북한, 개성공단 8개 기업에 총 16만 달러 과세 일방 부과
2013. 3	북한, 최고 존엄 훼손 시 개성공단 폐쇄 언급
2013. 4	김양건 북한 대남 담당 비서,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 발표
2013. 5	한국 측 근로자 잔류 인원 전원 귀환
2013. 6	북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당국회담 제의했으나 결렬
2013. 7	남북 실무회담 개최 (개성공단 정상화 인식 공유)
2013. 8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5개항 정상화 합의)
2013. 9	개성공단 재가동
2014. 4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 방문
2014. 5	세계한인무역협회 및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 방문
2014. 6	독일 바늘업체, '그로쓰 베커르트' 영업점 설치 (외국 기업 최초)
2014. 8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 행사 요원 7,000명에 단체복 제공
2014. 10	공동 의류브랜드 SSBRO, 첫 홈쇼핑에서 매진 판매
2016. 2	한국, 北 도발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vs 北, 개성공단 군사통제구역 선포



I. 빨라진 한반도 시계와 향후 논점

I-1. 남·북, 미·북 정상회담 성사의 배경

I-2. 문재인 정부의 '경제통일'과 '한반도 신경제 지도'

I-3. 지정학적 위험 완화와 금융시장 영향 등

I-4. 비용 논쟁과 위험요인



- ▶ **북미 협상 성사 이후 단기적 논쟁:** 지정학적 위기 관리 비용의 추가 부담이 이슈가 될 수 있다. 미·북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대신, 통상 측면에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요구도 더욱 강화가 예상된다. 또한 주한 미군 주둔 규모 축소 가능성과 한국의 추가 국방비 지출도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지난 해 전쟁 우려 당시와 비교한다면 감내 가능한 비용이다.
- ▶ **북미 협상 성사 이후 중장기 영향:**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정착될 경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는 긍정적이다. 부수적으로 북한의 인력, 자원 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익도 기대된다. 또한 북한 입장에서는 장기적 체제 안정을 위해 ‘결국’은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북한의 미래 위협인 한국의 북한 흡수통일 정책을 대체할 평화체제 구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 ▶ **통일세 논란:** 과거부터 통일을 대비한 재원 마련 논란이 있었다. 3가지 방식이 논의되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인상이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직접세 대비 적으나, 역진적 구조로 서민층에 불리하다는 비판이 있다. 둘째, 소득세/법인세율 인상이다. 과거 통독 과정에서 택했던 방식이다. 셋째는 지난 1990년 12월 폐지된 방위세 부활 주장이다. 일부 기존 세액의 세목에 가산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 ▶ **만약 미·북 협상이 실패하면(1):** 미국은 전면적으로 제 3자 제재(secondary boycott)를 단행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등이 동참하지 않고 미국이 제재를 할 경우 무역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일본 등 미국 동맹국의 제재 자동 참여로 중국과 갈등이 최악 진입할 것이다. 이는 전세계적인 리세션을 유발할 수 있다.
- ▶ **만약 미·북 협상이 실패하면(2):**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예방공격 어려워 역설적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이 전쟁 발발에 제동을 걸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협상 실패 시, 미국 정치 일정과 부정적 여론이 주변국의 압력보다 더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는 북한과 미국이 협상 성공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밖에 없는 역설적 이유이다.

북·미 협상 성사 경우 향후 비용과 영향

부정적 영향 - 대체로 단기적

▶ 지정학적 위기 관리 비용 추가 부담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의 입장 반영하는 대신, 통상 측면에서 양보 요구 가능성 (ex.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 강화)

▶ 북·미 협상 과정에서 주한 미군 주둔 규모 축소 가능성

주한미군 축소될 경우 전력 공백 방지를 위한 한국의 국방비 부담 증가 (미국 산 무기 구입, 국방 예산 증대)

긍정적 영향 - 대체로 중장기적

▶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될 경우, 지정학적 불확실성 크게 하락

▶ 북한의 인력, 자원 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익 기대

장기적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해 '결국' 한국의 동의 필요

▶ 북한의 과거 위협 - 국제사회의 제재

▶ 북한의 현재 위협 -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 북한의 미래 위협 - 한국의 북한 흡수 통일 정책

북·미 협상 최종 단계에서 한국의 통일 정책 변경 요구

장기적으로 남북한 독립국가 공동체 모색할 전망

미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예상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총 2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이 절반 가량 부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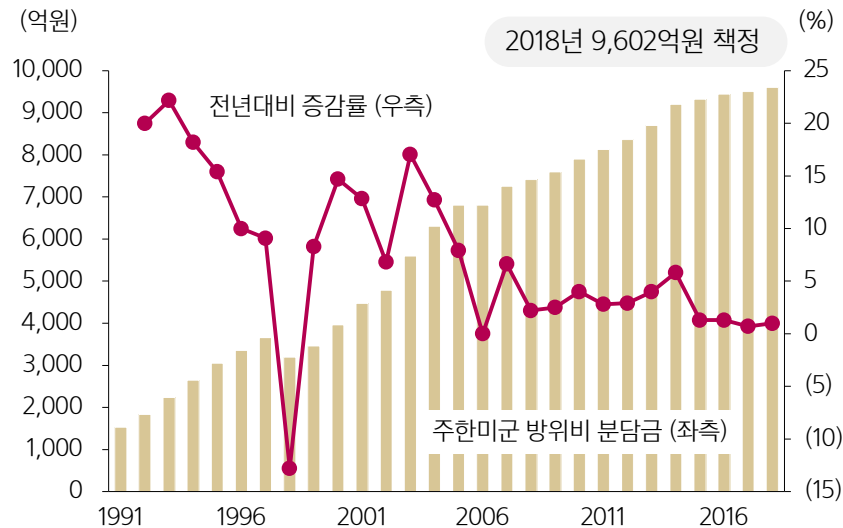
▶ 기존 방위비분담금 협정(2014년 체결)은 2018년 말로 종료 → 2019년 이후의 분담 비중 협의 시작

미국 측은 북한의 위협 증가와 THAAD 비용 등을 이유로 분담금 인상 요구 가능성

한국 측은 GDP 대비 부담 수준, 불용액 누적* 등을 근거로 방어 가능

*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에 따르면 책정된 방위비 분담금 중 사용하지 않고 축적된 금액이 6,223억 원에 이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자료: 국방부, 외교부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수준: 타 국가와의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독일
GDP (조달러)	1.15	5.98	3.37
국방예산 (억달러)	290	594	404
방위비분담금 (억달러)	7.8	38.2	5.2
GDP 대비 (%)	0.068	0.064	0.016
국방예산 대비 (%)	2.7	6.4	1.3
정규군 (명)	655,000	247,450	196,000
미군 (명)	28,500	36,700	50,500
미군 비중 (%)	4.4	14.8	25.8

참고: 2012년 기준
자료: 외교부, 국방부, 예산정책처

주한미군 축소 시, 한국 자체 방위비용 증가 가능성

주한미군의 총 가치에 대한 다양한 평가

- ▶ 인원: 한국군에 배정된 예산 규모에 주한미군의 인원 수 비중을 적용하면 약 1조원 부담
- ▶ 장비: 주한미군 운용 장비(예비 탄약 포함)의 경제적 가치는 23 ~ 36조 원 (한국의 한 해 국방예산과 맞먹는 수준)
- ▶ 전력: 평시 및 전시 증원전력을 포함한 전투력의 경제적 가치는 153 ~ 467조 원

병력 대체비용 추정

구분	한국군에 배정된 국방예산		주한미군 병력 수 비율 (한국군 대비)		유지비용 (대체비용)
육군	13.5조 원	×	3.3%	=	4,431억 원
해군	5.4조 원	×	0.8%	=	413억 원
공군	6.3조 원	×	13.6%	=	8,520억 원
합계					1,3조 원

평시 전력의 경제적 가치

구분	한국군에 배정된 국방예산		주한미군 전투력 비율 (한국군 대비)		주한미군 전투력의 경제적 가치
육군	13.5조 원	×	12.5%	=	1.7조 원
공군	6.3조 원	×	16.7%	=	1조 원
합계					2.7조 원

장비 대체비용 추정

연구	주한미군 운용 장비의 경제적 가치
국회 국정감사자료 (2008)	36조 원
통일연구원 (2003)	35조 원
한국국방연구원 (2003)	24조 원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	23조 원

전시 증원전력의 경제적 가치

연구	증원 전력의 경제적 가치
통일연구원 (2003)	464조 원
국방대학원 (2011)	150 ~ 400조 원

참고: 국방예산 금액은 2011년 기준
자료: 국방대학원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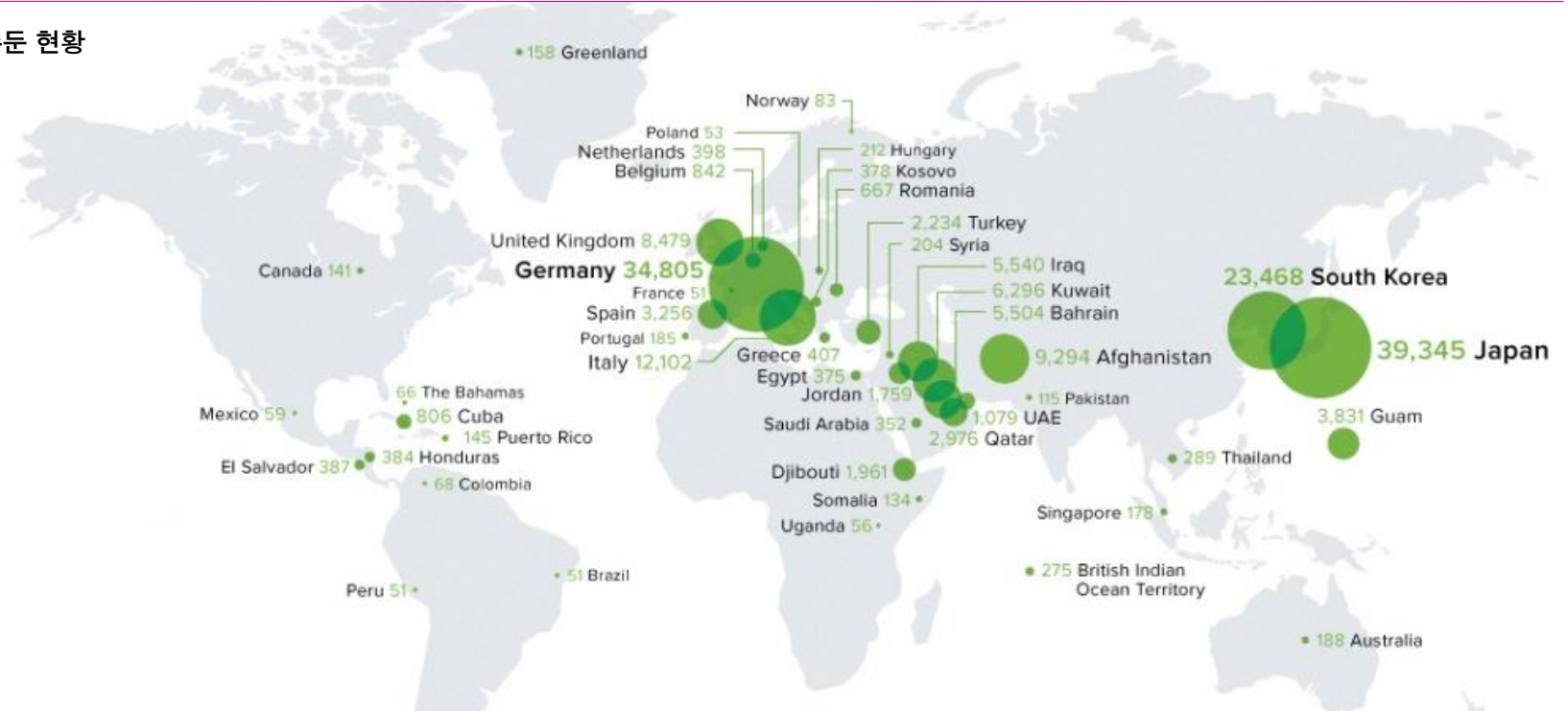
참고: 국방예산 금액은 2011년 기준
자료: 국방대학원 재인용

(참고) 미국 국방예산과 한국 방위 비용

미군의 해외 방위 전력 중 11.7%가 한국에 주둔

- ▶ 2018년 미국의 국방예산 총 6,400억 달러 중 650억 달러가 해외 방위 비용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Budget)
- ▶ 2015년 기준 해외 주둔병력 199,485명 중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23,468명 (11.7%)

미군의 해외 주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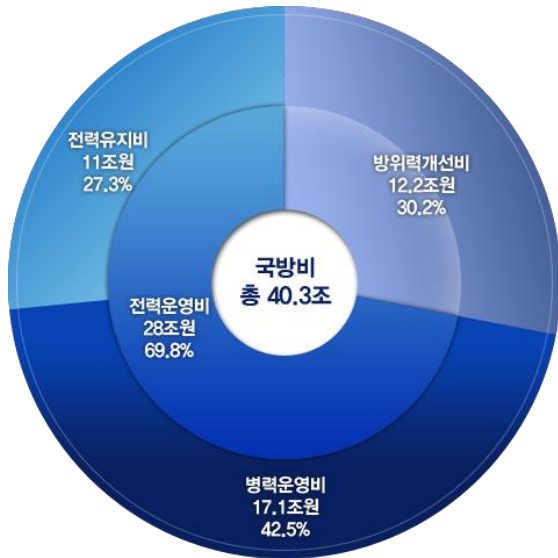
자료: visualcapitalist.com

문재인 정부, 국방예산 증액

정부 방침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현재 연간 약 40조 원 수준에서 2022년 60조 원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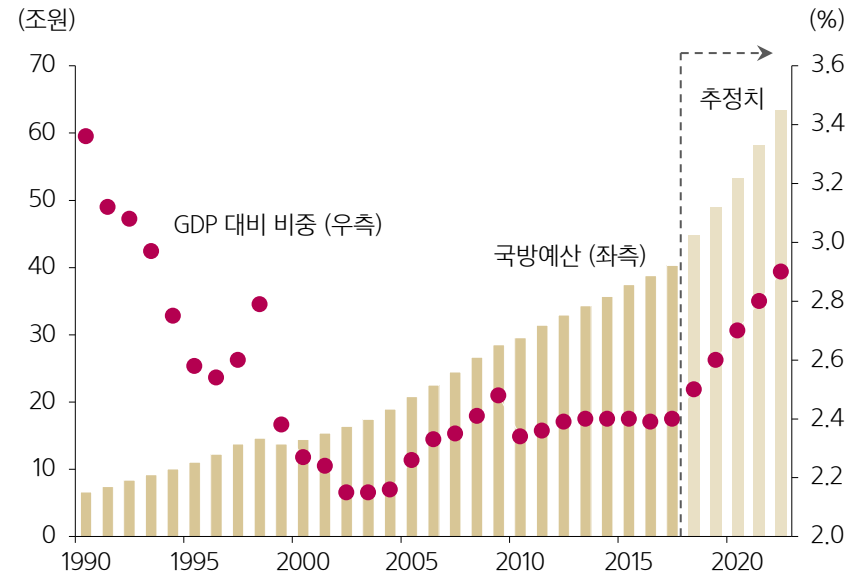
- ▶ 정부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 2.4%를 임기 내 2.9%까지 인상할 계획
- ▶ 향후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을 연 0.1%p씩 5년 동안 늘린다면, GDP 증가분까지 고려 시 2022년 국방예산 60조 원 상회 예상

2017년 국방예산: 40.3조원 (GDP 대비 2.4%)



참고: 일반회계 기준
자료: 국방부

국방예산 규모: 추이와 전망



참고: 2018년 이후 GDP 전망치는 IMF 수치, 2022년까지 GDP 대비 비중 1%p씩 상향 가정
자료: 국방부, IMF

(참고) 2018-2022 국방중기계획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직간접 소요 자원: 5년간 총 238조 원

방위력 개선비: 총 78조 원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2020년대 초~중반)
<p>전력 신규 반영 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 복합유도폭탄 등</p> <p>전력화 시기 및 기간 단축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자항기뢰 등</p> <p>전력의 수량 증가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II 등</p>
현존 및 잠재적 위협 대비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
<p>접적지역 대응능력 보강 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신규 반영</p> <p>전술 지대지유도무기 조기 전력화 등</p> <p>미래 국방환경에 적합한 첨단 전력 확보 K-2 전차, 230mm 급 다련장, 3천 톤 급 잠수함, F-35A(스텔스기) 등</p>
첨단 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R&D 확대
R&D 비중 향상, 신무기 개발 역량 확대, 국방·민간 기술협력 강화

전력운영비: 총 160조 원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보장	사이버공격 및 對테러 대응능력 보강
성과기반군수지원무기체계 확대 F-15K 장비가동률 향상 군 차량 상용화율 향상	사이버공격 대비 대응능력 강화 폭발물탐지기 등 장비 보강
작전 및 지원시설 보강	장병 생활 여건 개선
노후 통합정비고 개선율 향상 K-9 자주포 포상 유개화 완료 이글루 탄약고 신축	기본 급식비 인상 기능성 내의류 추가 보급 GOP 상시 급수지원시스템 구축
실전적 과학화 훈련 여건 조성	장병 복지 향상
소대급 마일즈장비 확보 군단급 과학화 훈련장 확대 사단급 전술종합훈련장 증설	사이버지식정보방 완전 무료화 격오지부대 독서카페 설치 완료 의무 전용 헬기 교체

자료: 국방부

북한 개발재원 '조달방안 논의' 본격화 될 것

소위 '통일세' 논란이 과거에도 있었음

- ▶ 통일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연구 (2011-12, 한국조세연구원)
- ▶ 통일 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연구 (2010-12,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 ▶ 통일세 도입 논란 세미나 (2010-10,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과거 주요 논의 내용
 - 부가가치세 인상 - 간접세로 조세저항이 적고 세원이 넓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직접세 대비 적음, 역진적 구조로 중산/서민층에 불리
 - 소득세/법인세율 인상(또는 누진세율 상향 조정) - 독일은 1991년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7.5%의 통일연대세 도입(1998년 5.5%로 인하)
 - 방위세 부활(1990년 12월 폐지) - 수입물품, 소득/법인세, 상속/증여세, 특소세 등 기존 세액의 세목에 가산해 부과

문재인 정부는 '흡수통일' 보다 연착륙인 '경제통일' 우선 지향

- ▶ 북한의 경제 재건으로 남북한간 격차 및 이질감 완화
- ▶ 열악한 북한의 인프라 등 감안 시 초기 투자는 정부 주도가 불가피

협상 과정 중 위험 - Allison의 제3모델

Decision making Model of G.T. Allison*

▶ 합리적 행위자 모델

국가의 외교정책 결정은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해 최대 이익의 방향으로 결정된다고 가정 (전통 경제학의 가정과 유사)

▶ 조직과정 모델

국가가 완전한 합리성 가지지 못하며, 최적화된 결정대신 한정된 합리성에 의거해 일정 기준 내에서 의사 결정 (경영학적 가정과 유사)

▶ 관료정치 모델 = Allison의 제3모델

관료조직 head들의 정치 게임을 주목. 정치조직 내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그룹의 정책이 한 국가의 대외정책으로 시행

미국 및 북한 지도부의 '합리적 선택' 여부

▶ 미국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를 주장**

미국이 북한에 핵 포기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며, 이에 대한金正은의 선택 주목
북한과 미국 정치 체제는 합리적이며, 관료적이지 않는가?

* 미국 정치 학자인 G.T. Allison 1971년 “결정의 엡센스”를 통해서 제시. Allison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자신의 모델로 적용해 설명

** 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협상 실패 시 위험 - 미국의 제 3자 제재(secondary boycott) 본격화

중국 등에 대한 secondary boycott 제재 시 무역 전쟁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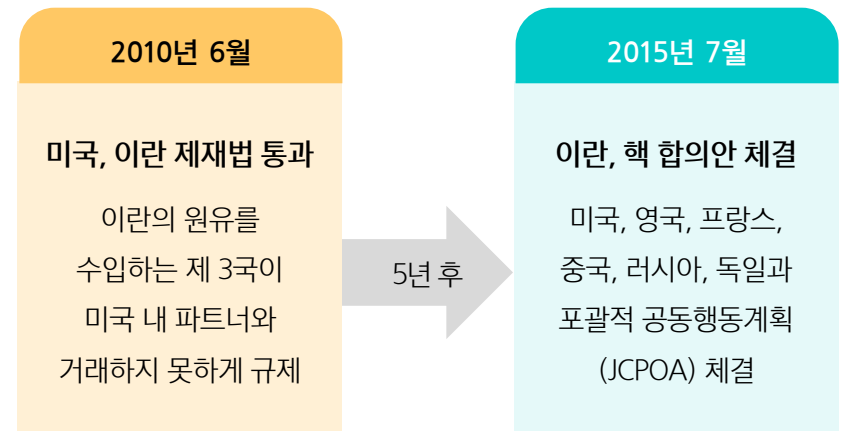
- ▶ 한국, 일본 등 미국 동맹국의 제재 자동 참여로 중국과 갈등 최악 진입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경우 전세계 리세션 진입

행정명령 13810호 대북제재 대상 명단

구분	대상	비고
기관 (북한 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기존 제재 대상인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도 포함
개인	제재 대상 은행의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현지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	

자료: 언론, 삼성증권 정리

이란에 대한 secondary boycott 사례



자료: 언론, 삼성증권 정리

협상 실패 시 위험 - 미국 주도 한반도 전쟁 우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 어려워 전면전으로 비화 가능성*

▶ 북한 내 군사 시설 정보 부족으로 완벽한 초기 제압 여부 논란

한·미 군 당국 북한의 폐쇄성으로 주요 군사시설, 무기체계에 대해 완전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예방공격 초기 북한의 완전 무력화 못해 예상하지 못한 지역과 수단으로 반격할 경우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미국 지원 기지 등 타격

▶ 한국과 일본의 사전 동의와 협조 없이 전쟁 수행 어려움

전시 상황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등 외국인 소개(疏開)에 한국, 일본 정부의 동의와 협조가 절대 필요.

미국의 '예방타격'이 감행되면, 북한 미사일이 일본 본토를 대상으로 보복할 우려

▶ 상기 이유로 역설적이게도 전쟁 발발 시, 예방공격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 높음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이 전쟁 발발 제동 능력 의문

▶ 긴장의 에스컬레이션이 지속돼야 전쟁 발발

중, 일, 러 등 강대국들의 다자간 이해로 에스컬레이션에 제동 가능

▶ 그러나 협상 실패 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미국 정치 일정과 부정적 여론이 더 큰 변수

* Preemptive strike (선제공격) 상대방이 공격하기 전에 상대공격의 징후가 보일 때 먼저 공격하는 전술적 군사행동. 정당방위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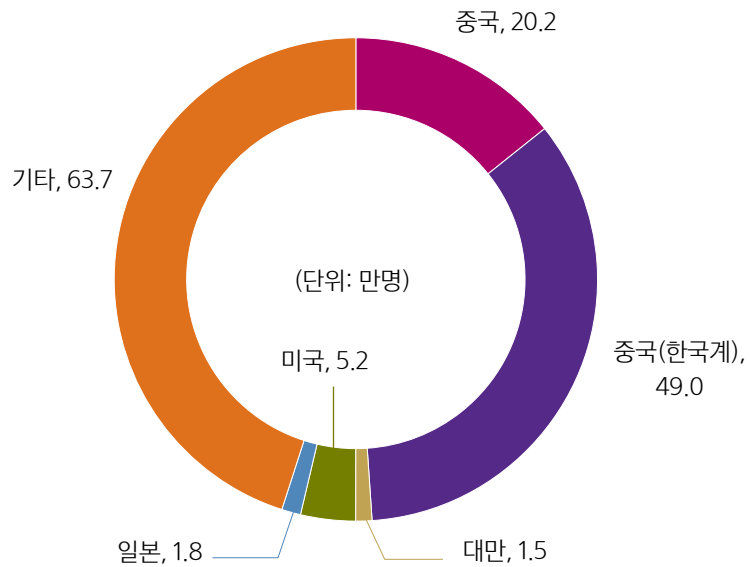
* Preventive strike (예방공격) 상대방의 계획이 달성되기 전에 상대를 공격하는 행동. 전략적 군사행동

(참고) 한국 내 거주 외국인 141만명

2016년 말 현재 한국 내 미국인 약 5.2 만명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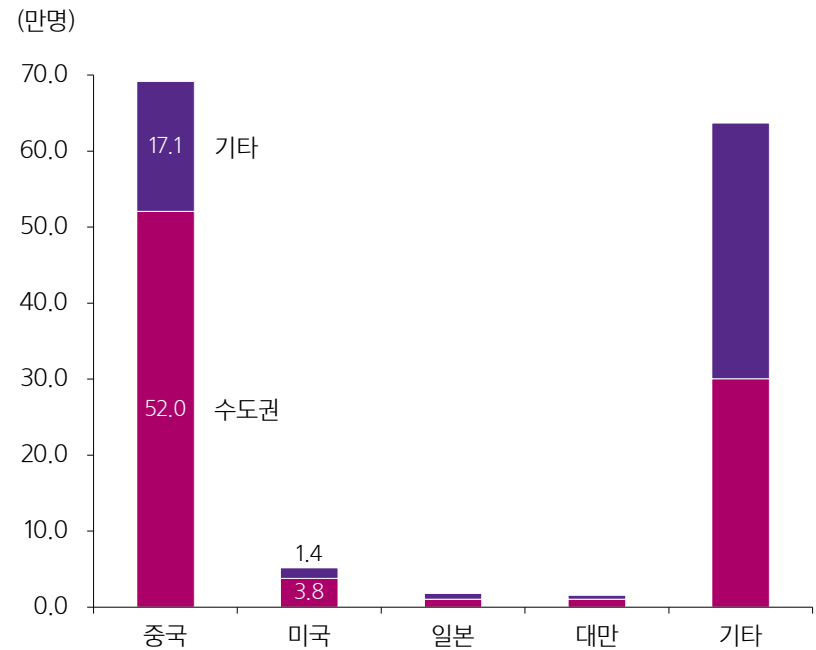
- ▶ 중국(69만명/조선족 49만명 포함), 미국(5.2만명), 일본(1.8만명), 캐나다(1.5만명) 순
수도권 거주 외국인 88만명 (중국 52만명, 미국 3.8만명, 일본 1.1만명 등)

한국 거주 외국인 현황 (2016년)



자료: 통계청

한국 거주 외국인 지역별 현황 (2016년)



자료: 통계청



II. 북한 핵 위기와 경과

II-1. 북한의 경제·핵 병진 노선의 역사와 배경

II-2. 한반도 불신의 시대 끝날 것인가

북한의 경제·핵 병진 노선의 역사와 배경



Summary

- ▶ **한국전쟁과 북한의 핵보유 의지:** 북한의 역대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 있었다. 그 시작은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의 건의에 따라, 북한 지역에서 원자폭탄 사용을 고려하기도 했다. 소련의 후원으로 전쟁을 벌였던 젊은 김일성에게 원자폭탄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컸을 것이다.
- ▶ **김일성의 중국 벤치마킹:** 김일성은 핵무기 보유를 위해 1950년대부터 노력을 했다. 특히 중국이 양탄일성(兩彈一星) 확보에 성공하고 미국과 수교를 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구축하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싶어했다. 그러던 중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에게 불법 핵 활동이 포착되고, 1993년에 NPT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 ▶ **김정일의 이중플레이:** 김정일은 김일성의 사후 非핵화를 유훈으로 표방했다. 때문에 일시적이거나 한국(2000년 남북 정상회담) 및 미국(2000년 북미 공동 코뮌িকে)과 평화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9.11 테러는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강경해진 변곡점이었다. 2002년 연두국정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북한은 2003년 1월 NPT에서 최종 탈퇴하게 된다.
- ▶ **김정은 핵 보유 노골화:** 2006년 1차와 2009년에 2차 핵실험에 성공했지만, 핵무기의 완성을 못보고 2011년 김정일은 사망하게 된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정권의 3대 세습을 한 김정은은 2012년 사회주의헌법을 수정해 스스로를 “핵 보유국”으로 명시하는 등 경제·핵 병진노선을 노골화한다. 그리고 2013년 3차, 2016년 4차, 5차 핵실험에 이어 2017년 9월 6차로 수소폭탄 실험까지 성공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 이후 북한 핵개발 의도 본격화

발생 일시	이벤트	지진규모 (Richter)	핵실험 위력	내용
1993년 03월 12일	NPT 탈퇴 선언			
1994년 07월 08일	김일성 사망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			
2003년 01월 10일	NPT 탈퇴			
2006년 10월 09일	1차 핵실험	3.9	1Kt	플루토늄
2008년 08월 29일	핵 불능화 중단 선언			
2009년 05월 25일	2차 핵실험	4.5	3~4Kt	플루토늄
2010년 0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2013년 02월 12일	3차 핵실험	4.9	6~7Kt	고농축 우라늄
2016년 01월 06일	4차 핵실험	4.8	6Kt	증폭핵 분열탄(수소탄 방식)
2016년 09월 09일	5차 핵실험	5.0	10~20Kt	증폭핵 분열탄(수소탄 방식, 소형화)
2017년 07월 04일	화성-14형 시험 발사			
2017년 08월 29일	화성-12형 정상각 발사			비행거리 2,700km
2017년 09월 03일	6차 핵실험	5.7~6.3 (한국 기상청) 6.1 (미국 지질국)	50~120Kt	수소탄
2017년 09월 15일	화성-12형 정상각 발사			비행거리 3,700km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시험 발사			

자료: 통일부, 주요 언론,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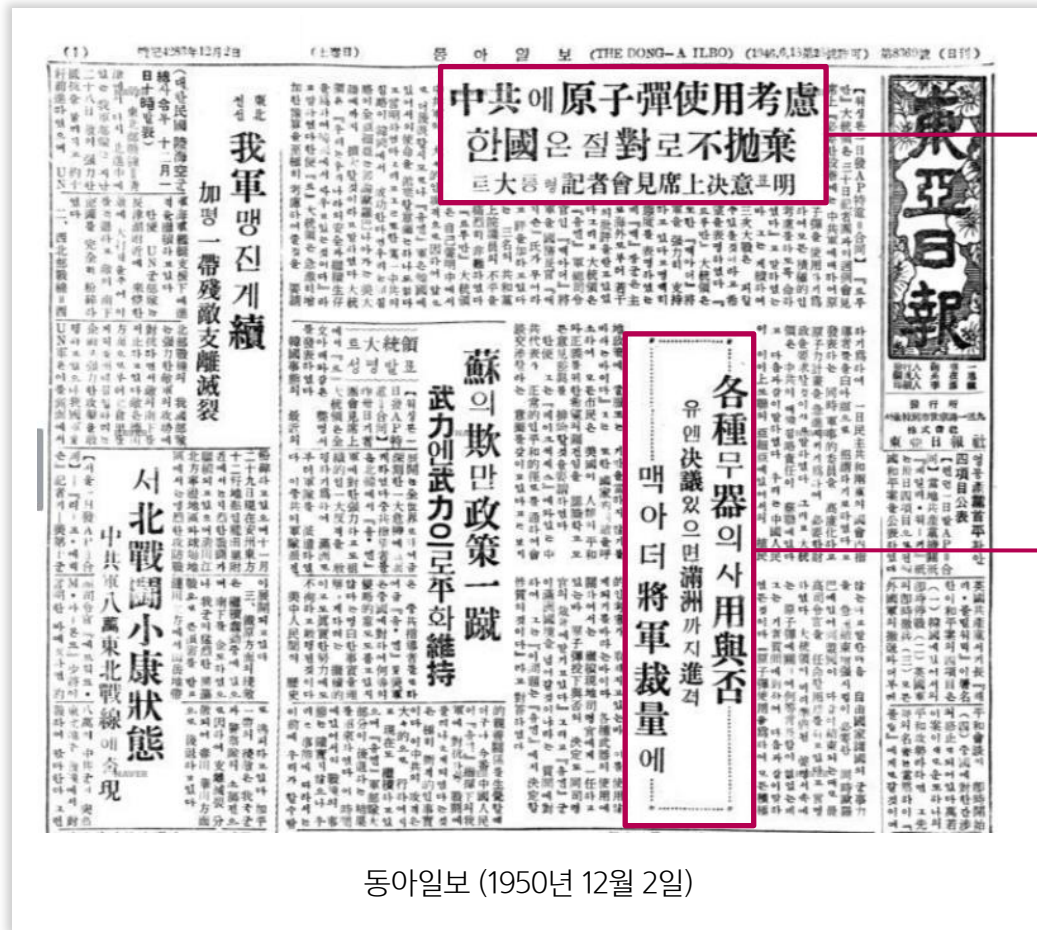
북한의 '통치 이념' 변천사와 핵무기

	조선 노동당 대회	당 이념	투쟁 목표	핵 정책
김일성	1945년 10월 제 1차	마르크스-레닌주의	부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	필요성 인식, 전략적 유연한 태도
	1948년 3월 제 2차			
	1956년 4월 제 3차	+ 혁명전통	공산주의 사회건설	
	1961년 9월 제 4차			
	1970년 11월 제 5차			
1912~1994				
김정일	1980년 10월 제 6차	김일성 주체사상 (유일)	공산주의 사회 건설, 사회전체의 주체사상화	1990년대 보유, 협상용 이중 목적 → 2000년대 체제유지 목적 보유
	1942~2011			
김정은	2016년 5월 제 7차	김일성-김정일 주의	사회주의 강국건설 완성	경제 · 핵 병진노선
1984~				

김일성 시대 - 핵무기 필요성 인식

한국 전쟁 당시 원자탄 공격을 두려워했던 김일성은 핵무기 보유를 갈망

▶ 김일성은 중국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의 양탄일성(兩彈一星)을 벤치마킹 했으나 실현하지 못함



동아일보 (1950년 12월 2일)

중공에 원자탄사용고려
한국은 절대로 불포기
트루먼 대통령 기자회견석상 결의 표명

각종 무기의 사용여부
유엔 결의 있으면 만주까지 진격
맥아더 장군 재량에

* 양탄일성(兩彈一星) - 2개의 폭탄(원자폭탄, 수소폭탄)과 인공위성을 지칭

김일성 시대 - 핵 보유 노력 & 표면적 타협

비밀리 핵 개발 추진과 발각 (1955~89년)

- ▶ 1955년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 설치, 핵 개발에 착수
- ▶ 1974년 '원자력법' 제정,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 ▶ 1984년 영변원자로(5MW 규모) 서방 정보기관에 포착
- ▶ 1985년 소련과 '원전건설을 위한 경제기술협력 협정 체결,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 ▶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 영변 핵 시설에서 불법 핵 활동 포착
- ▶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1992년)
 - 북한, IAEA와 핵 안전조치 협정 서명
- ▶ 1993년 합의 불이행, NPT 탈퇴 선언

북·미 협상 → 적대 관계 해소, 한반도 비핵화 합의 (1993~94년)

- ▶ 1993년~1994년 북·미 협상 (3단계 협상 진행)
- ▶ 1994년 김일성 사망 (7월 8일)
- ▶ 1994년 제네바 합의
 - 미국 대북 중유 공급 (1995년)
 - 한반도 에너지기구(KEDO)와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1995년)

김정일 시대 (2000년 이전) - 핵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

한반도 非핵화가 김일성 유흔 이라고 강조 (1994~2000년)

- ▶ 그러나 북·미 적대 관계가 非핵화의 걸림돌 주장

북·미 적대 관계 해소 시에 핵 포기 가능성 시사

- ▶ 사회주의 붕괴, 냉전 종식으로 '소련 vs. 미국' 구도에서 '조선 vs. 미국' 구도로 변화 주장
- ▶ 초제국주의 패권, 일극(一極)통치에 맞서기 위해 핵 무기 필요성 강조
- ▶ 북·미 양자 / 북·미·중 3자 / 남·북·미·중·러·일 6자 협상 진행
핵 무기를 Negotiation leverage로 활용

남북 정상회담과 화해무드(2000년)

- ▶ 2000년 6월 13~15일 남·북 정상회담,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 ▶ 2000년 10월 12일, 북·미 공동 코뮈니케 발표
적대관계 종식 선언, 평화보장체제 수립, 경제무역전문가 상호교환, 제네바 기본합의문 준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테러반대, 인도적 사업(유해 발굴 포함) 지속 추진, 미 대통령 방북 등
- ▶ 2001년 9.11 테러 발발

김정일 시대 (2000년 이후) - 핵 보유국 전략 본격화

미국 정권 교체 이후, 북한의 핵 관련 합의 파기

- ▶ 2002년 부시 대통령 연두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언급
2002년 10월 북한, 농축우라늄 개발 계획 인정
2002년 12월 KEDO 집행 이사회 대북 중유지원 중단 → 북한 핵 동결 해제, 핵 시설 가동 공표, IAEA 사찰관 추방
- ▶ **2003년 1월 10일 북한 NPT 탈퇴**
2003년 2월 영변원자로(5MW) 재가동, 8월 남·북·미·중·러·일 6자 회담 시작
- ▶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 발발**
2003년 12월 사담 후세인 생포 (2006년 12월 30일 사형 집행)

1차 핵실험과 일시적 봉합

- ▶ 2005년 2월 북한 외무성, 자위를 위해 핵무기 제조 공표
2005년 9월 미국 BDA 금융 조치, 북한 6자 회담 거부
- ▶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플루토늄 방식)**
- ▶ 2007년 2·13, 10·3 합의 채택
2008년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북한 일방적 합의 폐기하며 핵 보유 전략 노골화

- ▶ 2009년 5월 2차 핵실험 (플루토늄 방식)
- ▶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김정은 시대 - 경제·핵 병진노선 채택,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헌법 수정, '핵 보유국' 명시와 6차례의 핵실험 강행

▶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사회주의 헌법 수정

김정일 동지께서는 (중략)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존변시키었으며 <서문 중 발췌>

▶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우라늄 방식)

▶ 2013년 3월 전원회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 채택

(김정은이)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큰 힘을 돌리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로동신문 3월 9일)'

▶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수소탄 방식 - 증폭핵분열탄)

▶ 2016년 9월 5차 핵실험 (수소탄 방식 - 증폭핵분열탄)

▶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수소탄 성공)

▶ 2017년 11월 29일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긍지 높이 선포 (조선 중앙통신)

북한, 경제·핵 병진노선 포기는 아직 불분명

핵 능력을 “만능의 보검(萬能의 寶劍)”으로 인식

- ▶ 2015년 1월 19일 노동신문 논설 “선군의 기치 높이 나아가는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다”
핵 억제력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안전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경제·핵 병진 노선

- ▶ 2016년 1월 8일 조선신보 논설 “무진 막강한 전쟁 억제력을 갖춰야 평화스러운 환경에서 경제건설을 다그칠 수 있다”
(2016년) 수소탄 실험은 “조선식 경제부흥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
- ▶ 2016년 1월 27일 조선신보 논설 “수소탄 시험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이라는 병진노선에 따라 준비되고 단행”
경제건설을 위한 평화적 환경 마련은 강력한 군사력, 핵무력에 의해 담보
병진노선의 방점은 ‘핵’이 아니라 ‘경제’에 있다

2016년 5월 조선로동당 제 7차 대회, 핵 보유국 지위 주장

- ▶ 핵 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 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 가겠다
- ▶ 핵 선제 불사용, 핵확산 방지에 노력 천명

2018년 태도변화 (?)

- ▶ 1월 김정은 신년사 -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 사회주의 경제건설
- ▶ 4월 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 - ‘핵 시험, ICBM 시험발사 중지’ 결정 (경제·핵 병진노선 포기 ?)

II. 북한 핵 위기와 경과

II-1. 북한의 경제·핵 병진 노선의 역사와 배경

II-2. 한반도 불신의 시대 끝날 것인가

한반도, 불신의 시대 끝날 것인가



Summary

- ▶ **역설적이게도, 북핵이 대화의 출발점:** 북한이 핵 문제를 일으키기 이전까지는 미국과 대화 통로가 막혀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산발적인 북·미 접촉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대화 시작은 1989년 북한의 영변 핵 시설이 국제사회에 포착 되면서 부터 이다. 당시는 공산주의 몰락의 시작과 냉전 종식, 한국의 북방정책 등 급변하고 있었던 국제정세의 급변기이었다.
- ▶ **북한의 미국 불신:**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보다 핵 보유로 방향을 정한 이유로 소위 이라크, 리비아 모델의 실패 탓을 들고 있다. 미국이 제시했던 ‘대량살상무기 완전폐기→경제제재 철회 및 내정불간섭→체제 안정과 성장’의 프로세스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북한은 대신, 파키스탄과 같이 암묵적인 핵 무장국 인정의 모델을 택했다.
- ▶ **중국도 불신:** 1960년대 이후 舊소련과 중국은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이는 자주노선을 표방했던 북한이 소련보다 중국으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한·중 수교에 이르게 되자, 북한과 중국과의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다. 이제 북한은 주체·자주 노선에 따라 중국을 ‘대국주의 국가, 제국주의 연합세력 등으로 비판하고 있다.
- ▶ **중국의 딜레마:** 멀어진 북한과의 관계로 중국의 영향력은 과거만 못하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과 패권전략 측면에서 북한을 포기할 수도 없다. 결국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핵 포기를 유도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한반도에서 THAAD가 배치된 이후 중국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소위 자국의 정당한 국가안보이익 보장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 ▶ **북한 핵 보유국 지위 불가:** 북한은 핵 능력을 “만능의 보검(萬能의 寶劍)”으로 인식하고 있다. 핵을 이용해 정권 유지와 생존을 확보할 수 있을 뿐더러 경제재건도 도모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때문에 주요국들의 제제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고집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미·북 정상회담으로 불신의 시대가 끝날 지 주목된다.

핵 이전에는 막혀있던 북·미 직접대화 통로

냉전시대에 북·미 접촉 제한적

- ▶ 1968년 1월 23일 미국 해군함정 푸에블로호 나포, 승무원 83명(사망 13명 포함) 석방
- ▶ 1971년 11월 1~3일 김일성 비공개 중국 방문
한반도 문제 관련 북한 요구에 대한 미국측 입장 확인
- ▶ 1972년 2월 21일 미국 닉슨 대통령 중국 방문
- ▶ 19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 발표
- ▶ 1974년 9월 16일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 ▶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발생
- ▶ 1979년 1월 1일 미국과 중국 수교
- ▶ 1985년 12월 12일 북한 핵확산 금지조약(NPT) 가입

북·미 직접 대화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 제기 이후 본격화

- ▶ 1988년 12월 6일 베이징에서 북·미 사이 대사관 참사급 대화 시작
- ▶ 1989년 9월 프랑스 상업위성 SPOT-2가 영변 핵 관련 시설 촬영 공개
- ▶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UN 동시 가입

북한의 '미국' 불신

미국이 제시했던 'WMD 완전폐기 vs. 경제제재 철회 및 내정 불간섭' 모델의 종말 목도

▶ 이라크

이스라엘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개발 시도. 이스라엘의 폭격, 미국의 1차 침공 등으로 포기
2003년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목표로 미국 침공해서 후세인 정권 몰락. 후세인 체포 후 사형

▶ 리비아

1969년부터 반미 자주적인 정책 고수하며 핵 개발,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핵 개발 포기
2011년 아랍의 봄 사태 당시 카다피 시민군에 체포돼 사망. 이후 리비아 내전 지속 중

▶ 우크라이나

1994년 리스본 의정서 통해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보상 받는 대신 NPT 가입 및 핵 시설/무기의 폐기와 러시아로의 이관 약속
2014년 크림사태 이후 러시아 약속 위반 및 침공

▶ 2016년 4월 17일 조선국제정치문제연구소 “만약 우리가 자위적 핵 보유의 길을 버리고 굴종했다라면 이라크와 리비아,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 피와 눈물, 재난과 불행의 비극이 그대로 재현됐을 것”

북한, 파키스탄 모델에 따른 핵 보유국 인정을 모색 중

- ▶ 파키스탄은 인도의 위협으로부터 영토통합을 유지, 주변국의 우월한 재래식 무기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 목적으로 핵무기 보유 주장
미국 군사적, 재정적 원조 철회하고 제재 부과
- ▶ 부시 정부에서 대 테러 전쟁 위한 협력 등 명분으로 현재 파키스탄은 **암묵적 핵 무장국 용인**

북한은 ‘중국’도 불신

중·소 분쟁 계기로 자주노선 강화한 북한*

- ▶ 국제 공산진영 1960년대 초 이후 소련과 중국 극단적으로 대립
- ▶ 소련의 북한에 대한 군사, 경제 원조로 내정 간섭. 김일성 개인숭배 비판
중소분쟁에서 북한은 중국 지지
- ▶ 흐루시초프 실각 이후 1964~65년 북한과 소련 관계 개선
1950년대와 달리 북한의 자주노선 인정
- ▶ 북한 1970년 제5차 당대회 이후 주체사상의 통치 이데올로기 본격화
- ▶ 김일성 “소련은 믿을 수 없고(cannot rely on), 중국은 믿지 않는다(doesn't rely on)”
최근 비밀 해제된 외교 문서. 1980년대 초 Norodom Sihanouk(전 캄보디아 원수/국왕)와 대화 중

북·중 관계 악화 한·중 수교 이후 본격화

- ▶ 1990년 9월 30일 한·소 수교
- ▶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김일성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한·중 수교 연기 요구 했으나 실패
이후 사회주의 형제국인 중국에 대한 신뢰 붕괴 본격화
- ▶ 북한은 ‘주체·자주’ 노선에 따라 중국을 ‘대국주의’ 국가, ‘제국주의 연합세력’ 으로 비판

* 7페이지 '북한의 통치 이념 변천사와 핵무기' 참고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딜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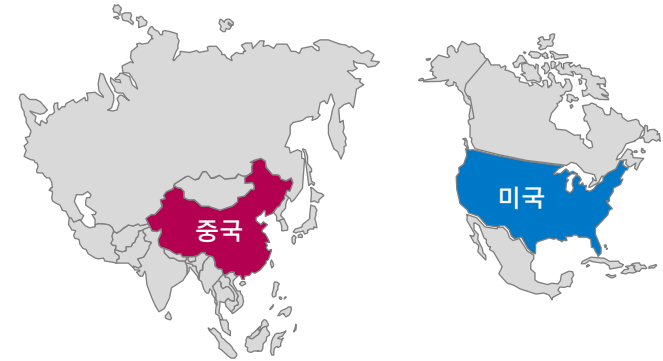
두 마리 토끼 잡기 = '북한 체제 유지 + 핵 포기'

- ▶ 북핵 해결과정에서 정권교체, 체제붕괴 포함을 반대
- ▶ 소원해진 북한과 관계 불구 지정학적 중요성 포기 불가
- ▶ 중국의 지정학적 어려움
미국은 중국의 본토 면적은 비슷하나 우호적 국가들과 접경
반면 중국은 14개국과 접경이며 역사적으로 불편했던 관계
지정학적 완충 역할을 고려할 때, 북한은 포기할 수 없는 동맹국
- ▶ 소원해진 북한과 관계 불구 지정학적 중요성 포기 불가
김정은 방증으로 봉합 국면 진입

THAAD 배치 이후 복잡해진 셈법

- ▶ 중국의 북핵 해결 3+1 원칙
기존 3원칙 = ① 한반도 비핵화 ② 한반도 평화와 안정 ③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한국 내 THAAD 이후 원칙 추가 = ④ 중국의 정당한 국가안보이익 보장
- ▶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북핵 해법
쌍잠정(雙暫停)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 vs.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쌍궤병행(雙軌並行) - 한반도 비핵화 논의 시작 vs.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시작

중국과 미국의 지정학적 차이



(참고) 북·중 외부로부터 침략 받을 경우 상호 자동개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1961년 7월 11일

-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 그리고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 제3조. 어느 체결국도 다른 체결국과 맺은 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집단, 행동,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양국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주권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과 평등 호혜의 원칙, 우호·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가능한 한 경제·기술 원조를 진행하며 양국간의 지속적인 경제, 문화, 과학, 기술 협력을 통해 발전시킨다.
-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것을 원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조선 인민의 이익 및 동아시아의 평화 옹호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인정한다.
- 제7조.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북한의 對 중국 논리

중국의 양탄일성(兩彈一星) 역사

- ▶ 각국 원자탄 개발 (1945년 미국, 1949년 러시아, 1952년 영국, 1960년 프랑스)
- ▶ 1955년 소련과 원자력 평화 이용에 관한 협정 체결
- ▶ 1964년 10월 6일 원자폭탄 실험 성공
- ▶ 1967년 6월 17일 수소폭탄 실험 성공
- ▶ 1970년 4월 25일 중국 인공위성 동방홍 1호 발사 성공, 양탄일성(兩彈一星) 완성
- ▶ 1971년 7월 9일 키신저 미 국무장관 중국 비밀 방문
- ▶ 1972년 2월 21일 닉슨 대통령 중국 방문
- ▶ 1979년 1월 1일 미국과 정식 수교

북한, 핵무기 개발은 중국에서 배운 전략

- ▶ 1999년 9월 19일 장쩌민(江澤民) 前 중국 국가 주석, 과학자 23명 대상 ‘양탄일성’ 훈장 수여식에서
1960년대 이래 중국이 원자탄과 수소탄을 보유하지 않고 위성을 발사하지 못했다면 중국은 결코 지금처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대국이 되지 못하고 지금 같은 국제적 위치도 차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 ▶ 2016년 1월 15일 북한 조선신보
중국이 오늘과 같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양탄일성(兩彈一星) 다시 말하여 원자탄과 수소탄 그리고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개발 소유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조선도 명실공히 강성국가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북한 핵 先 고도화 방지, 後 폐기 정책 실패

핵 실험 횟수가 거듭될 수록 핵무기 보유가 목표임을 천명

▶ 3차 핵실험 이전은 방어차원의 핵 억제력 확보 강조

2006년 10월 9일 조선중앙통신 “(중략)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 (중략) 핵 시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

2009년 5월 25일 조선중앙통신 “(중략)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

2013년 2월 12일 조선중앙통신 “(중략)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일환”

▶ 4차 핵실험 핵 보유국 선언, 선제 불사용

2016년 1월 6일 조선중앙통신 “(중략)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중략)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 5차 핵실험 소량화, 경량화, 규격화 등에 성공

2016년 9월 9일 조선중앙통신 “(중략) 핵탄두를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

▶ 6차 핵실험 병기화 수준 달성

2017년 9월 9일 조선중앙통신 “(중략) 핵탄 위력을 타격 대상에 따라 (중략)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중략)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현실

▶ 북한 핵무기 6~12개 분량 플루토늄 50kg 보유 (2016년 국방백서, 2017년 1월 발간)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

핵무기 소형화 능력 역시 상당한 수준 도달 인정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획득도 불가

핵확산 금지조약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과 북한

▶ 1969년 6월 12일 UN 총회에서 채택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 또는 그에 대한 관리를 제3국에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

비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것을 약속

비보유국은 원자력을 핵무기나 기폭장치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비롯한 안전조치 받아야 함

1970년 조약 발효 후 5년간 평가 회의 개최, 1995년 이후 항구적 조약화

현재 약 190여개국 가입

북한 1985년 가입 → 1993년 탈퇴 선언, 탈퇴요건 미충족으로 보류 → 2003년 탈퇴

▶ 핵무기 보유국 (Nuclear-Weapon State)

NPT 협상에 의한 합법적 핵무기 보유국

5개국(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 NPT 비가입 핵 무장국 (Nuclear-Armed State)

NPT 비회원국으로 핵 무장, 원자력 물자와 기술 그리고 전략물자 등 교역 배제

3개국(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은 불가능

현 NPT 체제하에서 북한은 '불법적 핵 무장국'

핵무장 3개국은 당초부터 NPT 가입하지 않았으나, 북한은 NPT 탈퇴 전력

핵무장국 인정 가능성은 여지 (2015년 미국 국방수권법 개정 시, 의회에서 북한을 핵 무장국* 명시로 의결 → 오바마 대통령 거부권 행사)

* Nuclear-Armed Country

한반도 불신의 시대 끝날 것인가

관계 당사국들이 신뢰 구축 필요

▶ 불신이 큰 경우 Bottom 방식보다 Top down 방식이 문제 해결에 더 유효할 수 있음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젠다	대결에서 대화로 전환	평화공존체제 기반조성	평화공존체제 성숙	평화공존체제 완성
비핵화 단계	핵 동결 예비협상	북핵 동결	북핵 불능화	비핵화 완성
주요 논쟁점	북한 핵·미사일 시험 일시 중지 선언	非핵화 목표 확인 (핵물질 생산중단), 미래 핵 중단 (IAEA 감시)	현재 핵 중단 (북핵 시설 신고, 폐쇄·불능화, 핵무기생산중단, IAEA 감시)	과거 핵 제거 (북핵 폐기, NPT 복귀)
정치 이벤트	남·북/미·북 정상 회담	한반도 평화 선언 등	다자간 정상회담 개최, 평화체제 잠정조치, 예비협정 체결	2+2 한반도평화협정 체결

참고: 국립외교원, 통일연구원, 통일부, 삼성증권



III. 북한 경제의 이해와 대북 제재

III-1. 북한의 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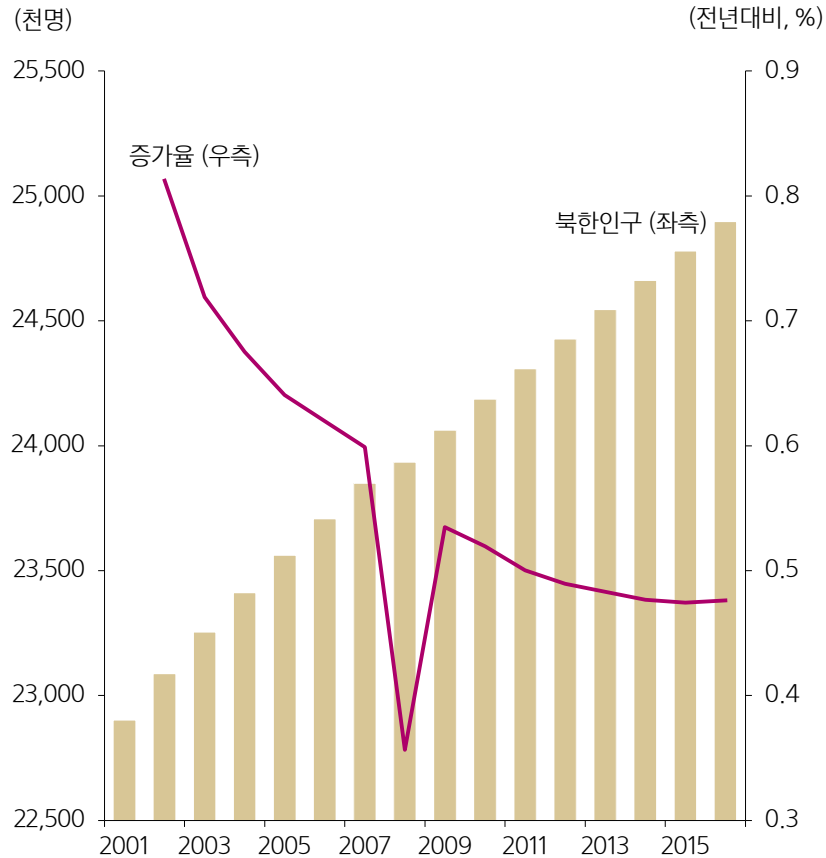
III-2.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 ▶ **국제제재 불구 경제 개선:** 2016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3.9%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및 비공식 부문의 자생적 시장 발전, 전년도 농업생산 및 대외무역 부진의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기준 북한의 경제규모(명목GDNI)는 36조 4천억 원으로 남한의 1/45 수준이다.
- ▶ **1차 산업 중심의 개도국형 산업구조 지속:** 2004년 대비 2016년 북한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부문의 비중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업, 중화학 공업의 비중은 확대되었고, 경공업 부문은 미세 증가하였다. 2016년 전기, 가스, 수도업의 성장은 전년도 가뭄에 따른 수력발전 감소의 기저효과이며, 광공업 부문의 성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 ▶ **무역구조 편중 심화:** 대중 교역 의존도가 2016년 기준 92.7%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그 뒤를 러시아, 인도, 태국이 따르고 있다. 식량 및 에너지로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는 무역 역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 특히 무연탄과 섬유, 금속 등으로 이들의 비중이 전체의 84% 이상을 차지한다. 수입은 품목별로 다변화되어 있으나 최근 들어 섬유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지는 추세다.
- ▶ **자율화 및 시장경제화의 시도:** 1990년대 경제난으로 당국의 계획경제 및 배급제는 상당 부분 와해되고, 시장경제시스템의 도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공동작업농장의 작업반 단위를 세분화하여 작업 효율성을 부여하고, 초과생산물과 기업 유보이익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등이다. 사금융 활성화와 외자유치 방면에서도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으나, 북핵 문제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 지속으로 실질적 투자 유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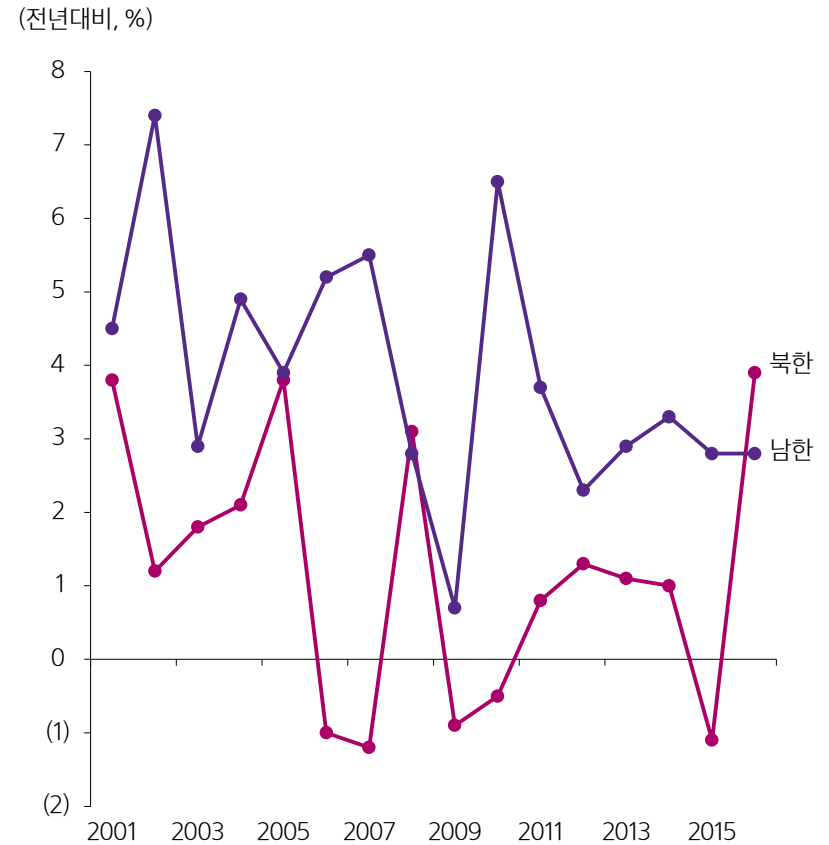
북한의 인구와 경제성장률

북한의 인구



자료: 한국은행

남한과 북한의 경제성장률 (실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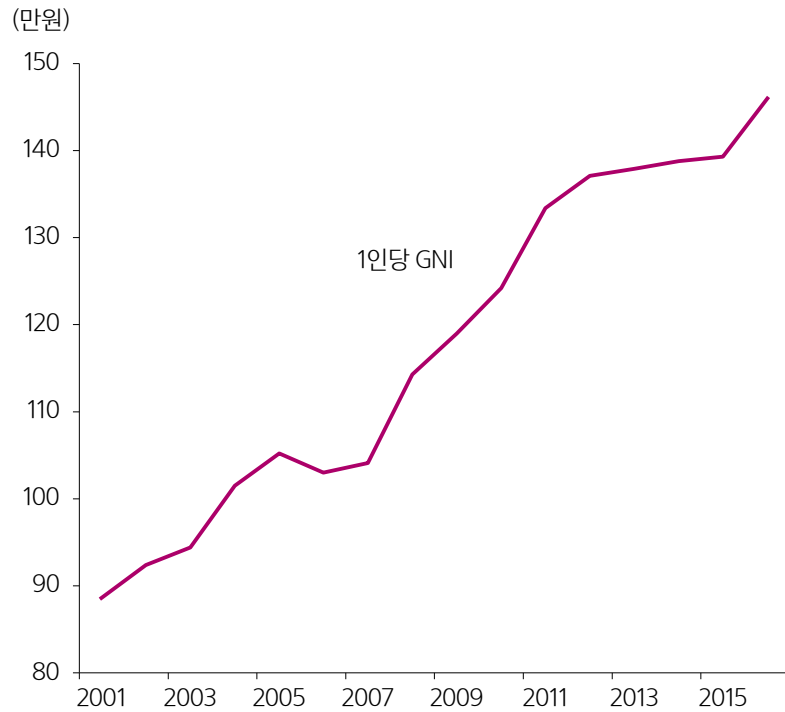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북한의 경제 수준

2016년 기준 북한의 경제규모(명목GNI)는 36조 4천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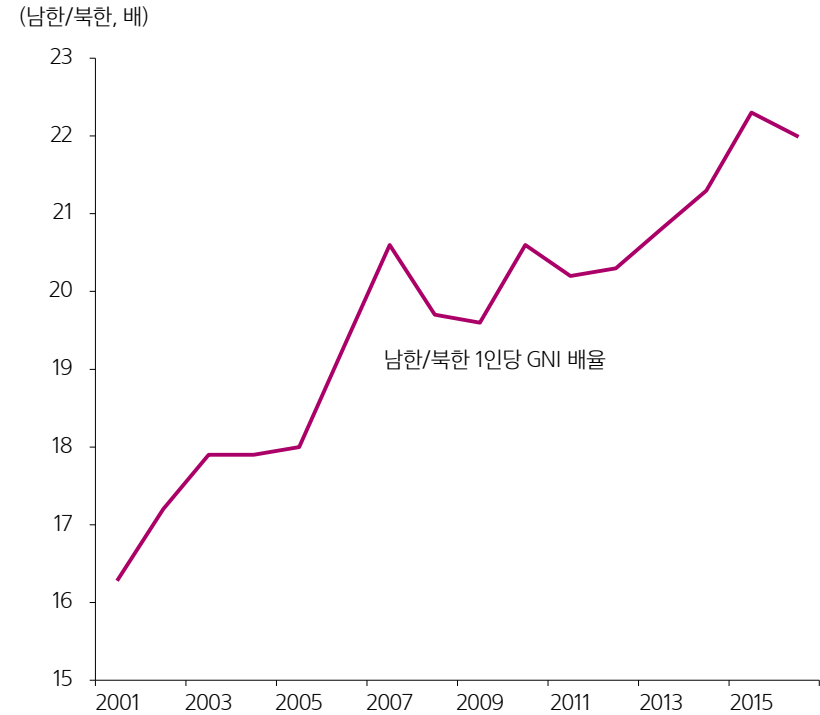
▶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6.1만원으로 남한의 4.6% 수준

북한의 1인당 GNI



자료: 한국은행

남한과 북한의 경제 격차 갈수록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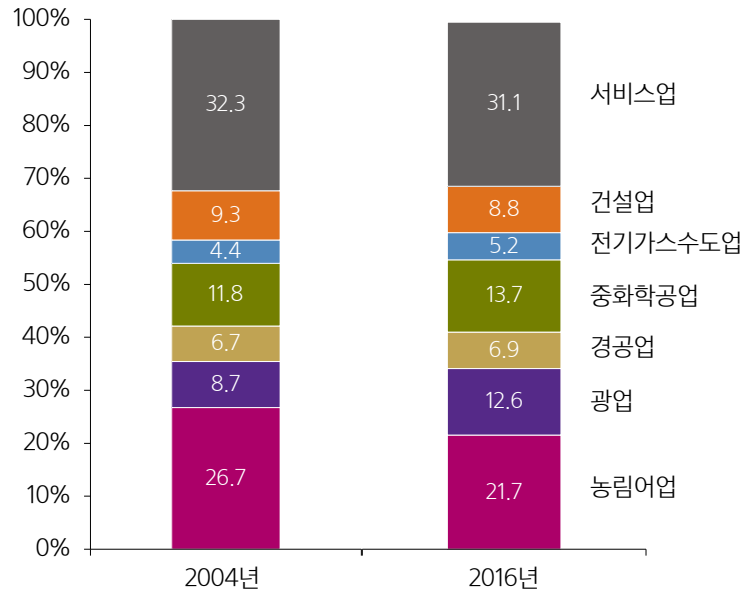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북한의 산업구조

1차 산업 중심의 개도국형 산업구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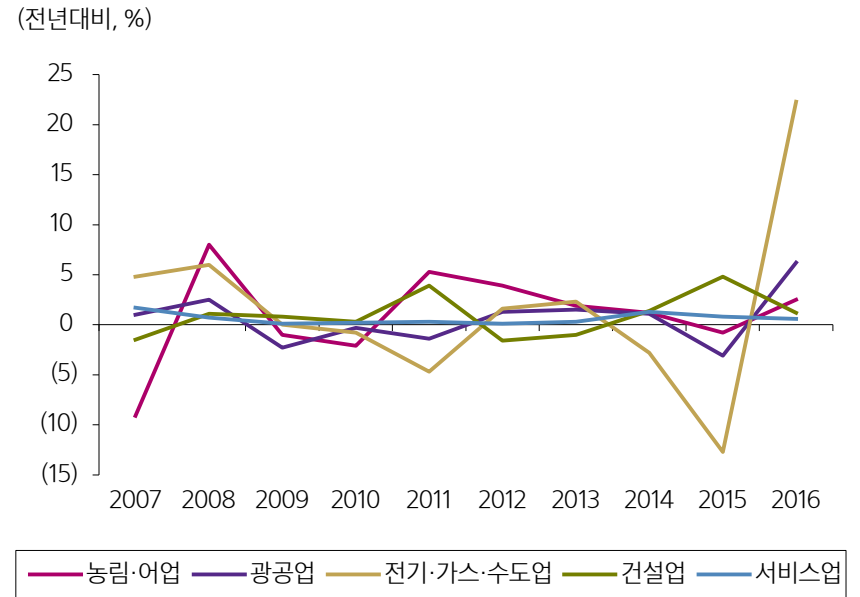
- ▶ 2016년 농림어업 부문 비중 축소, 광업/중화학 공업 부문 확대. 경공업 부문 미세 증가
- 전기·가스·수도업의 성장은 전년도 가뭄에 따른 수력발전량 감소의 기저효과
- 광공업 부문의 성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북한 산업구조의 변화



자료: 한국은행

산업별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북한의 주요 교역 시장과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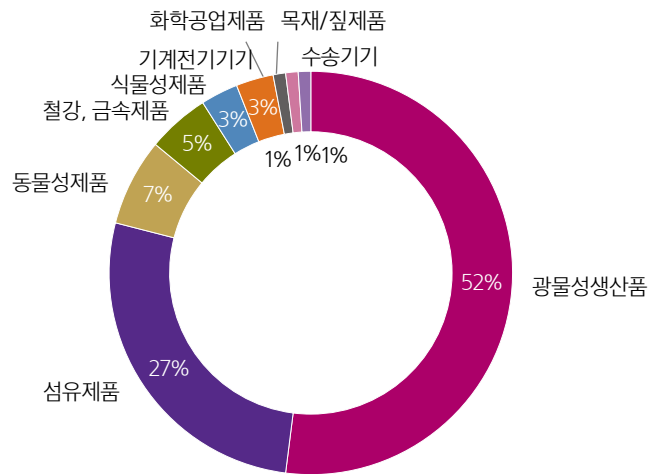
주요 교역 지역은 아시아

- ▶ 국가별로는 중국의 교역 의존도 매우 높음 (2016년 기준 92.7%)

식량 및 에너지난으로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는 무역 역조 현상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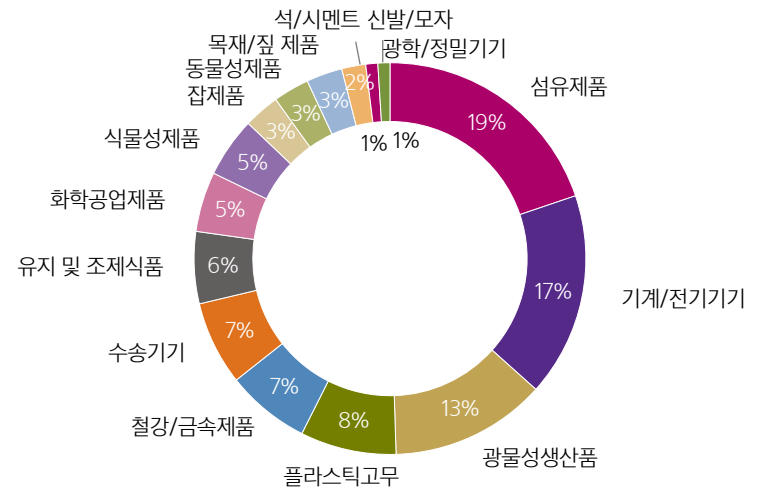
- ▶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특히 무연탄), 섬유, 금속 등으로 이들의 비중이 84% 이상을 차지
- ▶ 수입은 품목별로 다변화 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섬유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지는 추세

북한의 수출 품목 비중 (2016년)



자료: KO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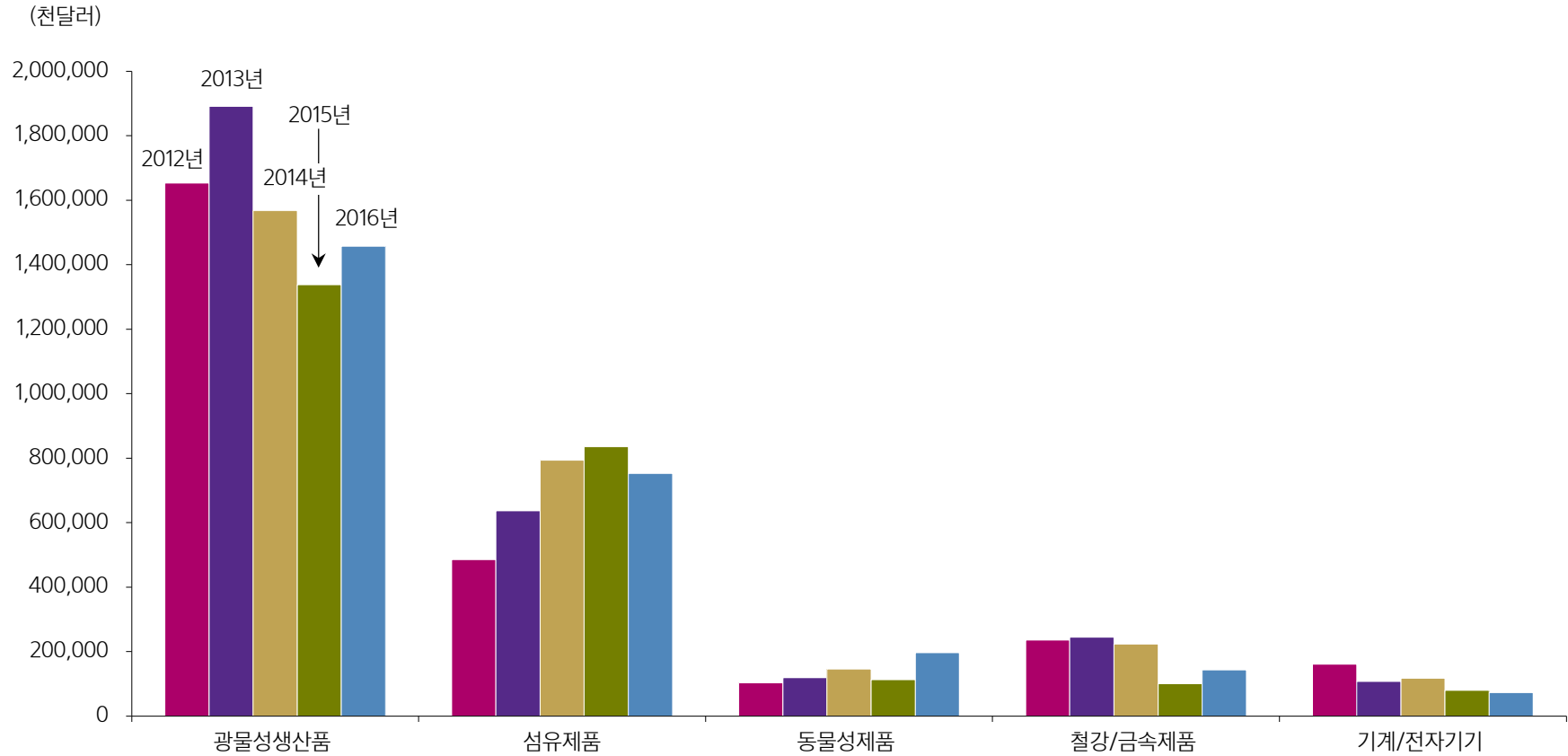
북한의 수입 품목 비중 (2016년)



자료: KOTRA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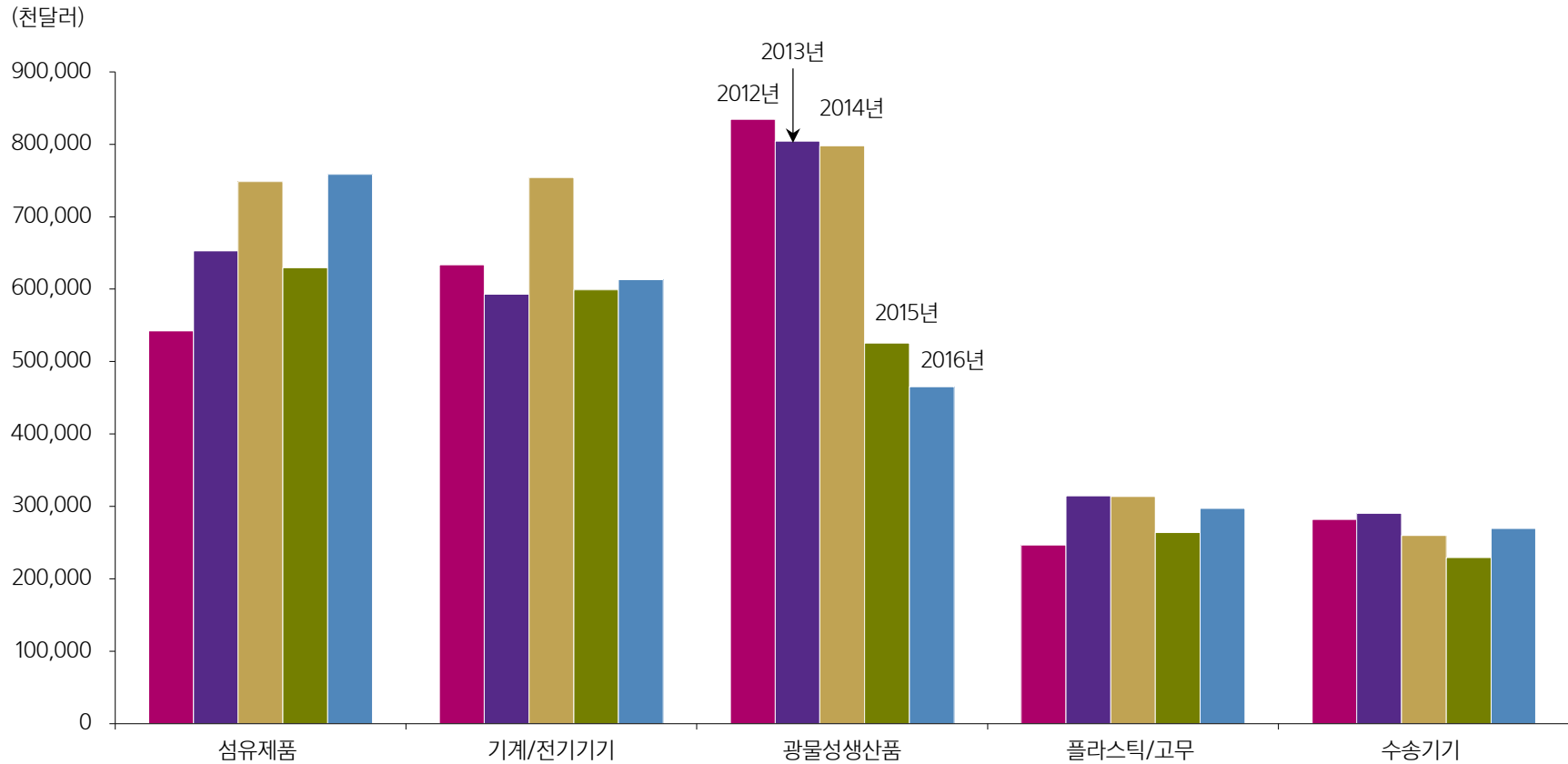
주요 5대 수출 품목 추이



자료: KOTRA

북한의 주요 수입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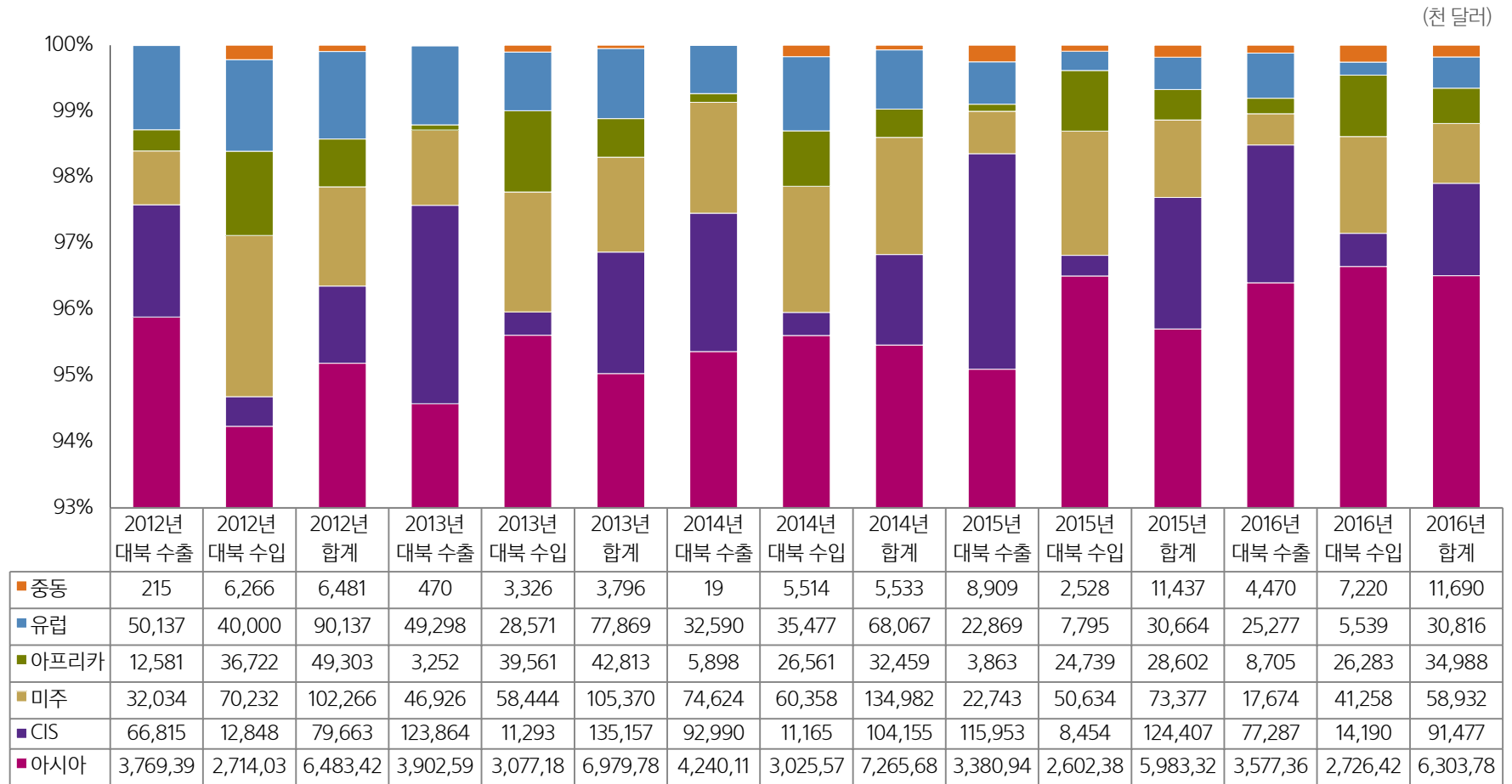
주요 5대 수입 품목 추이



자료: KOTRA

북한의 주요 교역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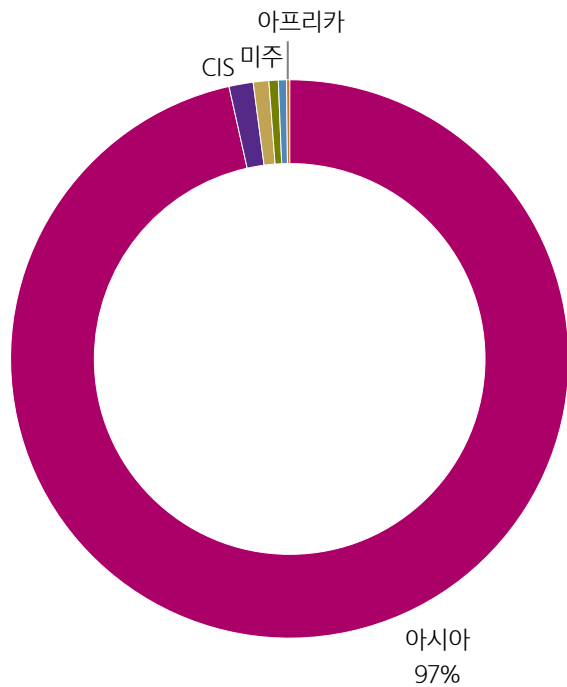
과거 5년간 지역별 대북 교역 추이



자료: KOTRA

북한의 주요 교역 지역 (2016년 기준)

지역별 교역 규모 및 비중



순위	지역명	대북 수출금액 (천 달러)	대북 수입금액 (천 달러)	합계 금액 (천 달러)	비중 (%)	주요 교역국
1	아시아	3,577,365	2,726,424	6,303,789	96.51	중국
2	CIS	77,287	14,190	91,477	1.4	러시아
3	미주	17,674	41,258	58,932	0.9	브라질
4	아프리카	8,705	26,283	34,988	0.54	모잠비크
5	유럽	25,277	5,539	30,816	0.47	독일
6	중동	4,470	7,220	11,690	0.18	터키

자료: KO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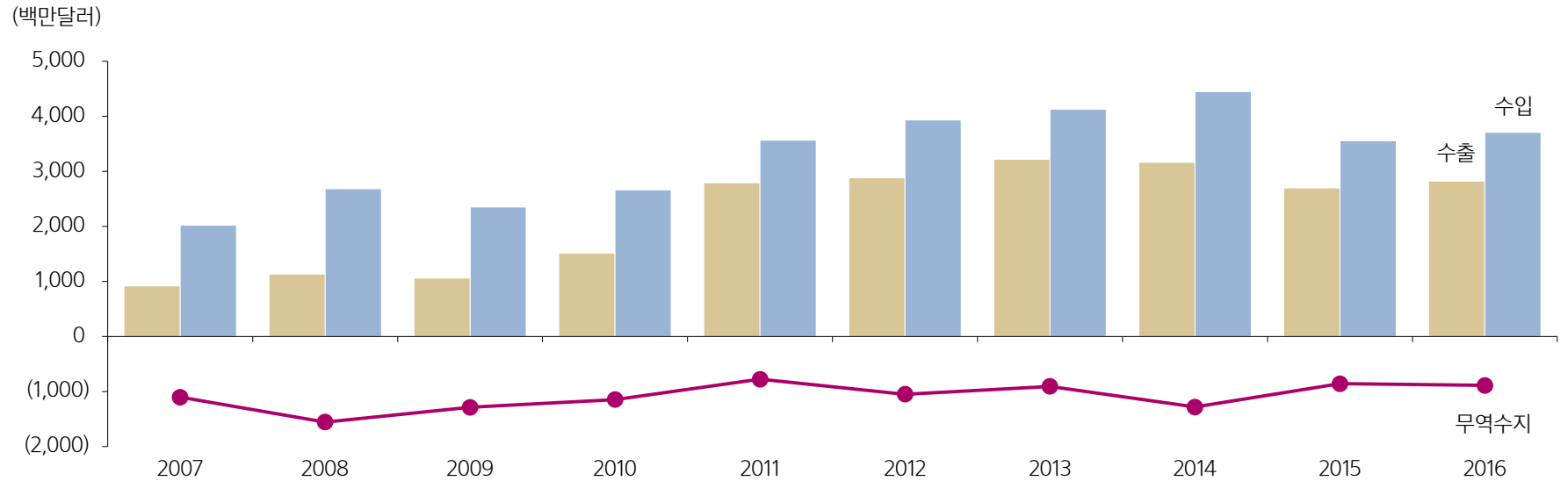
북한의 10대 교역 국가 (2016년 기준)

순위	국가명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수출입 합계		비중 (%)	전년 순위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증감률 (%)		
1	중국	2,634,402	6.1	3,422,035	6.1	6,056,437	6.1	92.7	1
2	러시아	8,853	46.5	68,047	(13.1)	76,900	(8.9)	1.2	2
3	인도	14,678	(35.3)	44,316	(17.7)	58,994	(22.9)	0.9	3
4	태국	2,945	(57.8)	46,795	8.7	49,740	(0.6)	0.8	4
5	필리핀	16,150	170.5	28,821	80.2	44,971	104.7	0.7	8
6	파키스탄	25,691	23.5	0	-	25,691	23.5	0.4	9
7	싱가포르	127	(90.5)	12,865	(54.8)	12,992	(56.4)	0.2	7
8	대만	12,190	(59.2)	507	422.7	12,697	(57.7)	0.2	6
9	스리랑카	8,958	52.8	3,528	160.6	12,486	73.0	0.2	15
10	우크라이나	3,826	89.3	7,685	(77.2)	11,511	(67.8)	0.2	5

자료: KOTRA

북한의 무역수지

수출입과 무역수지



(백만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	918.8	1,130.2	1,062.8	1,513.6	2,789.4	2,880.1	3,218.4	3,164.7	2,696.5	2,820.9
수입	2,022.3	2,685.5	2,351.0	2,660.8	3,567.7	3,931.2	4,126.4	4,446.2	3,555.3	3,710.8
수출입계	2,941.1	3,815.7	3,413.8	4,174.4	6,357.1	6,811.3	7,344.8	7,610.9	6,251.8	6,531.7
무역수지	(1,103.5)	(1,555.3)	(1,288.2)	(1,147.2)	(778.3)	(1,051.1)	(908.0)	(1,281.5)	(858.8)	(889.9)

자료: KOTRA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1) 자유화(liberalization)

김정은 정권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 ▶ 경제계획의 분권화, 가격의 자유화, 기업 무역의 자율화

농업 생산 방식의 개혁, 시장경제 법제 구축 등

- ▶ 초과생산물과 기업 유보이익에 대한 자율성 부여
- ▶ 개인과 기업의 투자, 경영활동 허용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내용

구분	분야	내용
자유화	계획경제의 재정비	독립채산제, 경영 분권화 확대
	가격 자유화	기업 간 시장가격 기준 거래 허용
	무역 자유화	기업에 대한 무역 및 합영·합작권 부여
사경제화	농업 개혁	협동농장의 작업반 단위를 세분화
	국유기업 사유화	초과생산물과 기업 유보이익 활용 자율화
	사적 경제활동	개인이 상점, 식당, 운송 등 투자·경영 가능
법제도 개혁	시장경제 법제 구축	경제개발구법 제정
	재정 개혁	돈주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부활 움직임
	금융 개혁	기업의 현금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허용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재인용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2) 사경제화(privatization)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Privatization

- ▶ 1990년대 경제난으로 당국의 계획경제 및 배급제 사실상 와해되며 시장화 급진전
 신흥부유층(돈주)에 의한 사금융(私金融) 활성화, 토지이용권, 주택시장, 운수업, 통신업 등 사경제화

북한의 부문별 사경제화 진전 현황

구분	배경	현황
소규모 사경제화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 80% 이상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소규모 자발적 사유화 진행 중
토지이용권	식량난 지속으로 농민들의 식량 확보 필요 증대	농민들의 자가 소비 및 시장 판매 목적 토지 경작 확대
주택시장	주택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비공식적 주택 거래 활성화	기존의 주택 이용권 단순 거래에서 돈주에 의한 신규 주택 건설로 확대
운수업	철도 중심의 수송 체계 와해	여객/화물 수송 개인 운수업 확대
통신업	정부의 휴대전화 가입자 확대 의지	북한 인구 9명 중 1명은 휴대전화 사용 추정 (2014년 기준)
금융업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 능력 상실 돈주들의 부상	수요와 공급 구조를 갖추며 체계화·전문화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재인용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3) 외자유치 정책 변화 과정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은 2012년 이후 3차 준비기를 지나고 있음

- ▶ 1984년 합영법 도입 이후 본격 추진
- ▶ 개방 지역 범위의 확대, 특구 형태의 다양화, 투자 유치 대상의 다변화, 관련법 정비 등

북한 외자유치 정책 변화 과정

시기	연도	내용
1차 준비기	1984 ~ 1997	합영법 도입 (1984): 외국인 투자 장려 목적 최초의 경제특구 설치 (1991): 라진·선봉 자유무역지대
2차 준비기	1998 ~ 2011	남북 경험 본격화 (1998):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험 본격화 신의주 특구 실패 (2002): 중국과의 신의주 특구사업 추진 실패 나선·황금평 개발 (2010): 중국과 나선·황금평·위화도 지대 공동 개발
3차 준비기	2012 ~ 현재	5대 중앙 특구 (나선·금강산·신의주·황금평·위화도) 개발 지속 경제개발구 대거 신설: 21개 경제개발구 신설, 기능별로 육성 계획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재인용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4) 외자유치 정책의 성과와 한계

실질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

- ▶ 개방의 지역적 범위 확대, 특구 형태의 다양화, 투자유치 대상 다변화 등의 성과 도출
- ▶ 북핵 문제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 지속, 선진적 법제 미비 등으로 실질적 투자 유치 난망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구분	성과	한계
개방의 지역적 범위 확대	과거 남북 또는 북·중 접경지역 중심이었으나 최근 전국 단위로 확대 움직임	아직은 총 26개 특구 중 11개가 북·중 접경지역에 집중
특구 형태의 다양화	단일형·복합형 특구 개발 병행	실질적 투자 유치로 이어진 사례는 별로 없음
투자 유치 대상 다변화 노력	투자 대상 다양화 노력 지속	북핵 문제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한계
외자유치 관련 법제 구축	외자유치 관련 법제와 인프라 점차 진화	선진적 기업친화 법제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재인용



III. 북한 경제의 이해와 대북제재

III-1. 북한의 경제 현황

III-2.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 ▶ **경제제재의 정의와 방법:** 경제제재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해 제재국의 정책 목표나 대상국의 특정 변화를 달성하려는 외교적 수단이다. 크게 무역제재와 금융제재로 나눌 수 있으며, 무역제재의 경우 일부 품목에 선별적인 제한을 가하며 대상국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출을 통제한다. 무역 대체국을 찾기가 어렵지 않아 대상국이 지불하는 비용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제재의 고통이 일반 기업과 주민에게도 분산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금융제재는 통상 무역제재와 결합하여 사용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무역흐름을 방해하는 효과를 가진다. 대상국의 결제능력을 저하시켜 필요한 물자의 입수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제재가 주는 불확실성 때문에 대체 금융시장을 찾기가 어렵고 제재의 고통이 대상국의 지도층 내지 정부 관리에 미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 ▶ **UN의 대북 경제제재:** UN의 대북 경제제재는 UN 헌장 7장을 근거로 한다. UN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과 관련된 조치를 담고 있으며, 이 중 41조는 UN 안보리의 비군사적 제재 형태 결정 및 회원국에 대한 실행 요구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UN 결의는 이전 제재 결의에 새로운 조치를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2017년 9월 11일, UN 안보리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11번째 결의안(제2375호)을 채택했으며, 이는 대북 유류 제한, 북한의 석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조치들을 도입함으로써 북한의 외화수입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는 행정명령과 의회에 의해 통과되는 법령으로 이루어지며,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국이 대북 제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가장 최근에 채택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9월 21일 발표된 행정명령 13810호로 사실상의 Secondary boycott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은행을 제재할 수 있으며,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선박과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는 등 북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해외교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경제제재의 목적과 유형

경제제재는 경제적 방법을 활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대외정책의 틀

- ▶ 제재의 목적은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에 가까움
대상국의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제재국의 입장을 제고시키고 잠재적인 정책이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

제재의 유형

- ▶ 목적성 경제제재(purposeful economic sanctions)
제재국이 대상국에 경제적 타격을 가해 반대하는 정책을 변경하도록 강요하려는 목적
- ▶ 경고성 경제제재(palliative economic sanctions)
대상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대상국의 정책이나 행동에 대한 제재국의 불만족을 알리기 위한 목적
- ▶ 응징성 경제제재(punitive economic sanctions)
대상국의 정책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대상국에 손해를 입히기 위한 제재
- ▶ 제한적 경제제재(partisan economic sanctions)
기업이나 무역단체 등의 제한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 예를 들어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식되는 것에 보복조치를 취하는 행위

제재의 목표는 범위가 넓고 유형도 다양

- ▶ 목표가 자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시된 목표와 의도된 목표가 상이한 경우 등이 상존

대북 경제제재의 궁극적 목적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정책의 변화

- ▶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반입 차단 및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조성

경제제재의 방법

무역제재 (가장 전형적인 수단)

- ▶ 모든 품목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보통 하나 내지 일부 품목에 제한을 가하는 선별적(selective)인 경우가 일반적
가능한 한 많은 물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거나, 대상국의 주요 외화 획득원이 되는 물자를 규제할 경우 효과적
- ▶ 대상국의 수입제한: 대상국이 필요로 하는 물자가 대상국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수단
- ▶ 대상국의 수출통제: 대상국이 필요로 하는 물자 구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수단
- ▶ 무역 대체국을 찾기가 어렵지 않아 대상국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 제재의 고통이 제재 대상국의 기업이나 주민에게도 분산됨

금융제재 (통상 무역제재와 결합)

- ▶ 대상국의 결제능력을 저하시켜 필요한 물자의 입수를 어렵게 하는 것
- ▶ 통상 무역제재와 결합하여 활용하나, 무역제재가 수반되지 않아도 상당 범위의 무역흐름 방해 가능
- ▶ 가장 보편적 형태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지이며, 가장 강력한 수단은 제재국 내 대상국 소유의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것
- ▶ 제재가 주는 불확실성 때문에 대체 금융시장을 찾기 어렵고 상당한 신용확보가 필요해 대체 시장을 찾아도 높은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
- ▶ 제재의 고통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층이나 정부관리에 더 큰 영향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과 여론을 제재국에 유리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UN (다자제재)

- ▶ 북한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채택
- ▶ WMD 및 핵실험과 관련된 무역/금융/여행을 제약하는 것에 초점

미국 (양자제재)

- ▶ 안보위협, 공산주의, 테러지원국, WMD 확산 등 4가지 이유로 1950년대부터 시작
- ▶ 대북 금수조치, 원조 및 금융지원 금지, 북한 관련 자산 동결, 무기 수출입 금지, 관련자 입국 금지 등

일본 (양자제재)

- ▶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시작
- ▶ 2006년 대북 수입금지 및 관련 항공/선박 입항 금지, 관계자 입국 금지, 2009년 대북 수출 금지

한국 (양자제재)

- ▶ 2008년 금강산 민간인 피격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전면 중단
- ▶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2016년 개성공단 중단 등

UN의 대북 경제제재 (1)

UN 헌장 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과 관련된 조치

- ▶ 7장 41조는 UN 안보리의 비군사적 제재 형태 결정 및 회원국에 대한 실행 요구 가능성을 명시

2017년 10월 15일 기준, UN 안보리는 북한을 대상으로 총 11번의 결의안을 채택

- ▶ 본격적인 대북 경제제재는 2006년 결의 1718호부터 시작
- ▶ UN 결의안은 이전 제재 결의에 더해 추가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강화됨

	825호 (1993.5.11)	1695호 (2006.7.15)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핵확산 금지 조약(NPT) 탈퇴 ●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7월 5일, 북한이 대포동 2호를 포함한 미사일 발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T 탈퇴를 재고할 것을 요구 ● NPT 조약 이행을 재확인 ● IAEA의 안전조치 이행을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 ● 미사일과 미사일관련 물품 및 기술이 북한에 이전되는 것에 대한 주의 요청 ● 북한의 미사일과 이와 관련된 물품조달 및 미사일,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융자산 이전에 대한 주의 요청

UN의 대북 경제제재 (2)

	제1718호 (2006.10.14)	제1874호 (2009.6.12)
주요 목표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핵무기 프로그램 및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포기 촉구 ● NPT와 IAEA 안전규정 복귀 요구 ● 6차 회담 복귀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도미사일,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포기 촉구 ● NPT와 IAEA 안전규정으로 복귀 요구 ● 6자 회담 복귀 촉구 ●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동참 요구 ● 1718호 이행 촉구
무기 금수 관련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대한/북한으로부터 아래 품목의 이전 금지, 관련 용역 제공 금지;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 전차, 장갑차,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등 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8호의 금수품목을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로 확대 ● 다만 북한의 소형무기 및 경화기 수입 예외 인정, 북한에 소형무기 및 경화기를 이전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최소 5일 전 위원회에 통보
화물 검색 및 해운,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유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 가는 북한 유출입 화물 회원국 영토 내에서 검색 ● 공해상에서 의심 선박 검색 강화, 금지 품목 적발 시 압류 및 처분
운송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 등 지원 제공 금지
금융, 무역 등 경제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들은 북한 핵,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 내 자금과 금융 자산, 경제적 자원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MD,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가능성 있는 금융거래 및 무역관련 공적 금융지원 제공 금지 ● 인도주의, 개발, 비핵화 등 목적의 무상원조 등만 허용 ● 이외의 무상원조, 양허성 차관 등의 신규 북한 제공 금지
제재대상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대상 개인/단체에 대한 출입국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단체 5개와 개인 5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

UN의 대북 경제제재 (3)

	제2087호 (2013.1.23)	제2094호 (2013.3.7)
주요 목표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제재 확대 강화 ● 북한 추가 도발 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 ●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 제재위원회 업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세밀화 ●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최초 명시 ● 미사일, 핵 실험 시 추가적 중대 조치 취할 것을 강력 표명
무기 금수 관련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tch 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안보리 결의가 지정한 대북 금수품목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 미사일, 화학무기 관련 금수 품목 7개 추가 ● 모든 회원국에 대해 금지활동, 결의 위반, 제재회피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 유출입 품목의 공급, 판매, 이전을 막도록 하는 Catch-all 촉구
화물 검색 및 해운,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해상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영토 내에서 북한 유출입 금수 품목 적재 의심 화물 검색 의무화 ● 공해상에서 검색에 불응 시 회원국 항구 입항 불허
운송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수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촉구
금융, 무역 등 경제관련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금융기관(지점, 대표자, 대리인, 해외 자회사 포함)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bulk cash) 이용 수법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대량 현금 이전 통제 포함하여 WMD 및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 관련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의무화 ● UN 결의 반하는 북한 은행의 회원국 내 신규 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 활동 금지 촉구 ● 결의안 위배 대북 무역관련 공적금융지원서비스 제공 금지
제재대상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4명, 단체 6개 제재 대상 추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3명, 단체 2개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

UN의 대북 경제제재 (4)

	제2270호 (2016.3.2)	제2321호 (2016.11.30)
주요 목표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자금줄 차단 통해 제재 실효성 확보 모든 북한 수출입 화물 검색 의무화 북한산 광물 수출입(민생목적 제외) 금지 전면적 무기 금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 결의안 틈새 보완을 통해 제재 실효성 증대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및 수출 금지 품목 추가 북한 내 제3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WMD 연관성 조항 삭제)
무기 금수 관련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성발사, 우주발사체,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협력 금지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전면적 무기 금수조치 회원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금지 (WMD 기술 습득 원천 차단 목적)
화물 검색 및 해운,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국의 모든 북한 유출입 화물검색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인 여행용 수하물 검색 의무화 및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 강조 북한에 대한 선박, 항공기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
운송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선박, 항공기 등록, 보험 제공 금지
금융, 무역 등 경제관련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거래 시 북한 외교관 및 대표 추방 회원국 내 북한 은행 지점, 사무소 신규 개설 금지 회원국 금융기관 북한 내 신규활동 금지 WMD 관련 노동당 소속단체 자산 동결 북한산 석탄, 철광석, 희토류 등 수출, 공급, 이전 금지 (민생목적 제외) 대북 항공유 판매, 공급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탄 수출액 4억불 또는 수출량 750만톤 초과 금지 (낮은 기준 적용) 수출 금지 품목 추가(은, 동, 아연, 니켈 등 광물 및 조형물) 모든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 금지 및 90일 내 기존 사무소, 계좌 폐쇄 (이전 결의안의 WMD 연관성 조항 삭제)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 외화벌이 착취 우려 제거
제재대상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16명, 단체 12개 제재대상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WMD 개발 또는 무기 조달 관여 북한 인사 11명 및 단체 10개 추가 지정

UN의 대북 경제제재 (5)

	제2356호 (2017.6.2)	제2371호 (2017.8.5)
주요 목표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9월 9일 이후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무기 개발 활동 규탄 자산동결과 국외 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블랙리스트 명단 확대에 초점 새로운 내용을 담기 보다는 기존 결의 강화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7월 4일, 7월 28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 석탄 등 수출 규제로 상당량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 발생 예상
무기 금수 관련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WMD 및 재래식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통제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로 WMD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 차단
화물 검색 및 해운,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제재위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지정 선박의 입항 불허 의무화
금융, 무역 등 경제관련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탄, 철, 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 금지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 도입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제재대상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 활동 및 이를 위한 자금원 확보 등에 관여해온 단체 4개, 개인 14명 신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개인 9명, 단체 4개 신규 제재대상 지정

UN의 대북 경제제재 (6)

제2375호 (2017.9.11)	
주요 목표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 조치 도입 ● 이번 결의로 북한의 외화수입원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유류공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유제품: 올 4분기 50만 배럴, 내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 (현재 북한에 공급되는 양의 55% 감축 전망) ● 원유: 결의안 채택 시점의 現 수준 유지 (現 원유 공급량 400만 배럴로 추산) ●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
제재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1명, 단체(노동당 소속) 3개 추가: 개인은 여행금지과 자산동결, 단체는 자산동결 ● 김정은, 김여정 남매는 직접 제재대상에 지명되지 않음
해상 검색 및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품목 적재의심에 대해 기국 동의 하에 공해상에서 검색 가능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 ● 공해상 밀수를 막기 위해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북한 해외 노동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 신규 허가 금지 ● 기존 노동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 연장 안됨
북한 섬유제품 수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직물, 의류 완제품/부분품 수출 금지
북한과 합작사업 전면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합작 사업체는 120일 내에 폐쇄해야 함 ● 공공 인프라 사업은 제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 법적 기반 (1)

- ▶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의회에 의해 통과되는 법령(statutes)으로 이루어짐
- ▶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이 대북제재의 중심적 역할 수행
미국의 대외정책이나 국가 안보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테러리스트, 국제마약단체,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활동에 대한 제재 관리 및 집행

제재 배경	제재 내용	법적 기반
	물품 및 서비스 수출 제한	수출 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북한에 유입되는 자금 증가로 이어지는 국제기구에 대한 비례적 분배 제한	대외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일반 대외 정책	양자간 지원 금지	대외활동수권법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
	경제지원기금 금지	대외활동수권법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
	국방부 기금 금지	국방예산법 (Department of Defense Appropriations 2016)
외교 관계 단절	대부분의 대외지원 및 농작물 판매 금지	대외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국가안보통제, 공산주의	수출 물품 및 서비스 제한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대외지원 금지	대외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마르크스 레닌주의 국가에 수출입은행 기금 제공 금지	수출입은행법 (Export-Import Bank Act of 1945)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지원 금지	브레튼우즈 협정법 (Bretton Woods Agreements)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 법적 기반 (2)

제재 배경	제재 내용	법적 기반
공산주의	수출 물품 및 서비스 제한	수출 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공산주의	무역 특혜 조항 금지	무역법 (Trade Act of 1974)
비시장경제와 이주통제	무역특혜 조항 금지	무역법 (Trade Act of 1974)
비시장경제와 이주통제	무역특혜 조항 금지	무역법 (Trade Act of 1974)
공산주의와 시장 교란	무역특혜 조항 금지	무역법 (Trade Act of 1974)
공산주의	외교 목적으로 미국에 자산획득 금지	국무부 기본 권한법
테러리즘, 미국에 비협조	국방 물자나 서비스 관련 거래 금지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과도한 군비사용 및 인권침해	특정 부채 감면 금지	기타 예산법 (Miscellaneous Appropriations)
국가비상, 대량살상무기 확산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하여 지정된 개인 및 기관 자산 동결	대외경제비상조치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가비상법 (National Emergencies Act)
국가비상	교통 관련 수출입 및 거래 금지	대외경제비상조치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가비상법 (National Emergencies Act)
국가비상,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천안함 사태, 핵 및 미사일 발사 시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물품 및 화폐 위조, 돈세탁, 밀수, 마약 거래, 지역 안보 위협	자산 동결 제재 대상과 이들을 대신한 개인 및 기관의 자산 동결	대외경제비상조치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가비상법 (National Emergencies Act) 유엔참가법 (United Nations Participation Act of 1945)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 법적 기반 (3)

제재 배경	제재 내용	법적 기반
유엔 안보리의 수입 제한 실시	행정명령 13570에 규정된 경우 제외, 북한으로부터의 상품, 서비스, 기술의 직간접적 수입 금지	대외경제비상조치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가비상법 (National Emergencies Act) 유엔참가법 (United Nations Participation Act of 1945)
사이버 테러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인권침해 등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위	북한 당국이나 노동당 관계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	대외경제비상조치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가비상법 (National Emergencies Act) 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52)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미사일	다양한 거래 금지-미국 정부 계약, 수출 라이선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핵농축 이전	대외 지원 및 군사 원조 금지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핵재처리 이전, 핵 발사	인도지원을 제외한 대외 지원, 군사 원조, USG 방어 판매 및 이전, USML 물품 및 서비스의 수출 라이선스, 미국 정부의 신용 제공, 국제은행에서의 지원, 농업관련 신용 및 금융, 미국 상업은행 금융, 특정물품 및 서비스의 수출관련 라이선스 금지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핵 발사	수출입 은행 금융 금지	수출입은행법 (Export-Import Bank Act of 1945)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핵 발사	수출입 은행 금융 금지	대외활동수권법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 법적 기반 (4)

제재 배경	제재 내용	법적 기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미사일	다양한 거래 금지 미국 정부 계약, 수출 라이선스, 미국으로의 수입 등	수출 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다양한 거래 금지 무기 판매 및 수출, 이중용도 수출, 계약조달, 국제은행에서의 지원, 수입, 신용, 대여권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of 2000)
인신매매	인도지원이 아닌 대외지원, 문화 교류,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지원 금지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
위조, 돈세탁	특정 상업은행 거래 금지	미국 애국법 (USA Patriot Act)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 행정명령

행정명령	일자	내용
13382호	2005년 6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및 지원자들의 자금 동결
13466호	2008년 6월 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정부 소유 자산 동결
13551호	2010년 8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466호를 확대 미국 내 혹은 국민이 소유한 북한 개인에 대한 자산 동결
13570호	2011년 4월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551호 확대 UN 결의 1718호, 1874호와 관련된 수입 금지 실시
13687호	2015년 1월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정부 및 노동당 관리와 산하 단체, 북한 정부를 재정적/물질적/기술적으로 지원한 개인 등의 자금 동결, 입국 금지
13722호	2016년 3월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북제재강화법 시행령 성격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보완
13810호	2017년 9월 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美 재무장관의 재량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선박,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드나들 수 없음 건설, 에너지, 어업, 정보기술, 의료, 광업, 섬유, 운송 활동까지 제재 분야 확대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강화에도 지난 해 북한 경제는 성장

국제사회는 2005년 이래로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여 왔으나, 북한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시현

▶ 북한 경제성장률은 대북제재 外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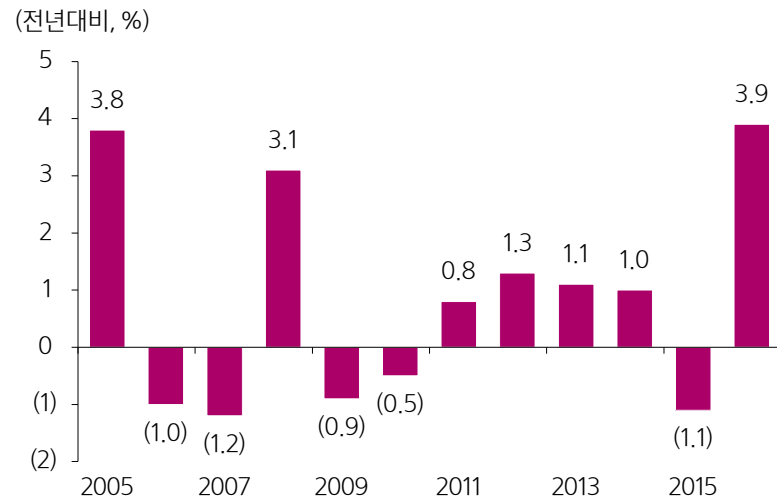
2006~7년 성장률 하락은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림어업 생산 감소 영향

2009년은 시장통제와 화폐개혁, 남북교역 감소 등으로 성장률 하락하였으나 줄어든 남북교역을 북중무역이 대체하며 성장세 회복

2015년의 마이너스 성장은 원자재 가격 하락, 가뭄에 따른 농업생산성 저하, 수력발전량 감소에 따른 전력난, 공적 부문의 대규모 노력 동원 등이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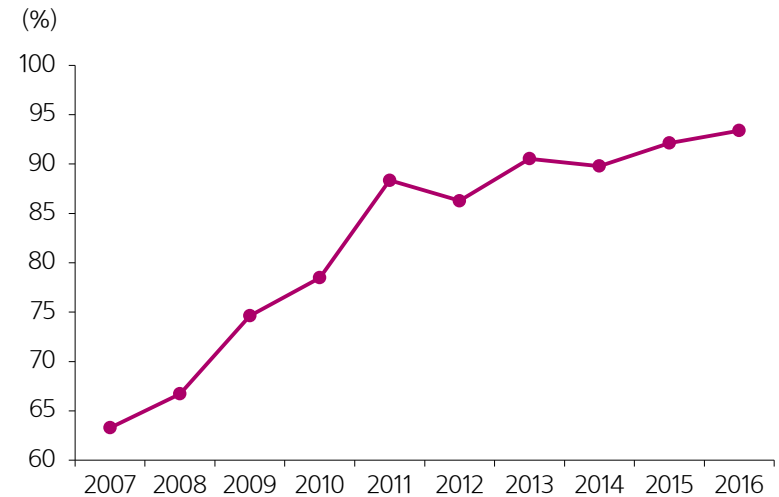
▶ 견조한 대중 수출과 비공식 부문의 자생적 시장 발전이 경제성장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북한 경제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북한의 對중국 수출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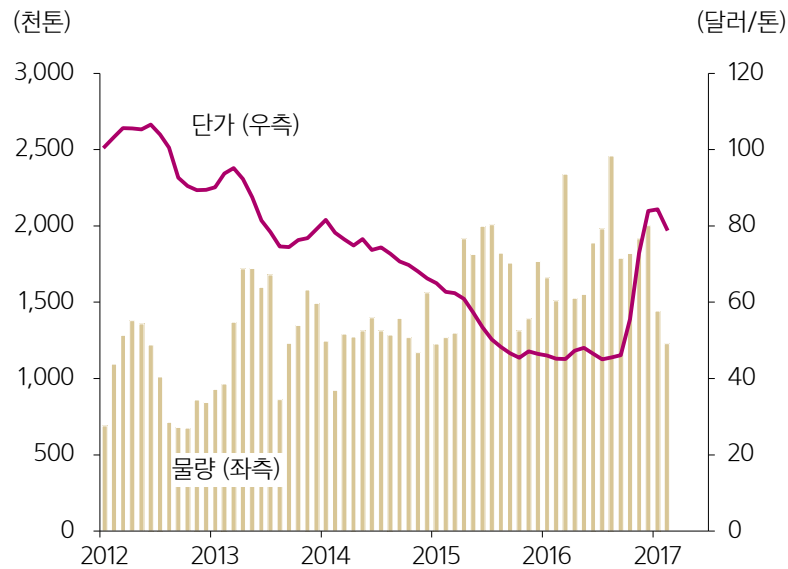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KOTRA, KDI

북한에 대한 흑기사 역할을 수행해온 중국

북한의 대중 수출은 2016년까지 견조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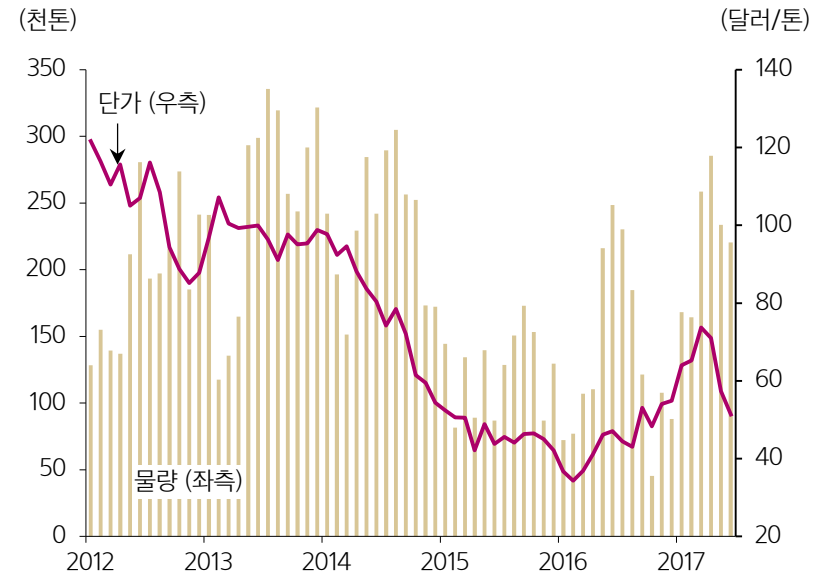
- ▶ 광물 수출 금지를 포함한 UN 결의 제2270호 발표 이후 대중 무연탄 수출물량 감소하기 시작
- ▶ 이후 남한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대중 수출 물량 재차 증가. 여기에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며 2016년 대중 무연탄 수출 큰 폭 증가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 물량과 단가



참고: 2017년 3월 이후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의 중국 向 무연탄 수출 중단
 자료: 한국은행, KOTRA, KDI

북한의 대중 철광석 수출 물량과 단가



자료: 한국은행, KOTRA, KDI

북미간 직접적 경제관계 미미

미국은 독자적 대북제재를 시행함과 동시에 UN의 다자제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 그러나 북미간 교역이 매우 미미하여 미국의 대북제재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

북미간 교역액은 매우 적으며 연도별로 추세적인 패턴을 보이지 않음

미국의 대북 수입은 거의 없으며, 주요 대북 수출 품목은 인도적 차원의 곡물과 구호품이 대부분

미국의 대북 무역

(천달러, %, kg)	수출				수입				무역 수지
	금액	전년대비 증감	중량	전년대비 증감	금액	전년대비 증감	중량	전년대비 증감	
2006년	3	(100)	0	0	0	(100)	0	0	3
2007년	1,728	57,500	0	0	0	0	0	0	1,728
2008년	52,151	2,918	0	0	0	0	0	0	52,151
2009년	903	(98)	0	0	0	0	0	0	903
2010년	2,867	217	0	0	8	0	0	0	2,859
2011년	9,406	228	4,501	0	0	(100)	0	0	9,406
2012년	11,952	27	1,461	(68)	0	0	0	0	11,952
2013년	6,583	(45)	2,550	75	0	0	0	0	6,583
2014년	24,029	265	1	(100)	0	0	0	0	24,029
2015년	4,752	(80)	0	(100)	0	0	0	0	4,752
2016년	139	(97)	0	0	0	0	0	0	139
2017년 1~7월	3	(98)	0	0	0	0	0	0	3

자료: KOTRA

북한의 무기 수출 제재 효과 존재

UN은 2006년 결의 제1718호부터 북한의 무기류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

- ▶ 북한의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방지하고 외화 획득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함임
- ▶ 제재 범위는 점차 확대되었으며 2016년에는 UN 결의 제2270호를 통해 재래식 무기를 비롯한 전면적인 무기 금수를 결정
 제1718호 이후 무기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소
 특히 제2270호가 나온 2016년 무기수출액은 0원으로 기록되며 제재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
 그러나 무기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0.6% 수준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외화 획득 통로 차단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

북한의 무기 수출액 (2000~2010년)

(달러, %)	북한 무기수출액 (A)	북한 총수출액 (B)	비중 (A/B)
2000년	2,125	1,041,829,630	0.00
2001년	740,781	960,685,600	0.08
2002년	294,214	1,064,158,930	0.03
2003년	3,965	963,217,095	0.00
2004년	7,477,333	1,280,591,909	0.58
2005년	1,396,499	1,428,764,172	0.10
2006년	3,117,064	1,872,711,310	0.17
2007년	45,500	1,724,191,456	0.00
2008년	574,901	2,259,415,899	0.03
2009년	3,500,007	1,449,753,080	0.24
2010년	1,730,098	2,024,110,373	0.09

자료: KDI, UN Comtrade

북한의 무기 수출액 (2011~2016년)

(달러, %)	북한 무기수출액 (A)	북한 총수출액 (B)	비중 (A/B)
2011년	10,000	2,788,590,000	0.00
2012년	88,000	2,880,104,000	0.00
2013년	282,000	3,218,382,000	0.01
2014년	32,000	3,164,650,000	0.00
2015년	244,000	2,696,538,000	0.01
2016년	0	2,820,914,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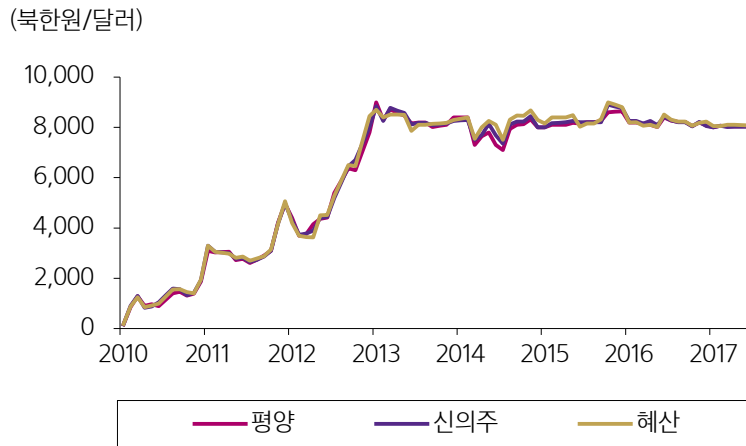
자료: KOTRA

경제제재의 북한 시장환율 및 상품 가격 영향 제한적

경제제재 강화에도 북한의 쌀 가격 및 시장 환율은 안정적인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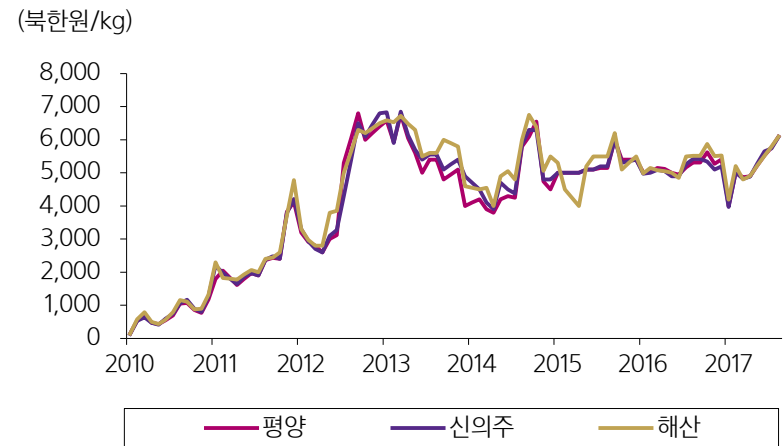
- ▶ 북한의 쌀 가격 및 시장 환율은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급등했으나 2012년 4분기를 정점으로 안정화
- ▶ 가격 안정의 원인
 - ① 화폐개혁 이후 북한 주민들이 원화보다는 달러화나 위안화를 선호하면서 필수품 구매 시에도 외화를 사용
 - ② 북한의 곡물 생산 증가
 - ③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장마당을 비롯한 비공식 부문에 대한 국가 개입이 감소하면서 시장 거래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에 도달
- ▶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쌀 가격의 경우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모습

북한의 시장환율 추이



참고: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 단행
 자료: 데일리NK, KDI

북한의 시장 쌀 가격 추이



참고: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 단행
 자료: 데일리NK, KDI

대북 경제제재 평가 및 전망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

- ▶ UN 제재의 경우 회원국들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회원국들의 실행 의지가 강하지 않고 이해관계도 달랐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 특히 제재의 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이 대북 제재의 실행에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
- ▶ 미국 제재의 경우 미국과 북한의 직접적인 경제 교류가 적었던 점이 한계로 작용. Secondary boycott만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 ▶ 오랜 제재로 북한의 저항력이 높아짐; 전력수급 다변화, 자생적 시장 발달 등

최근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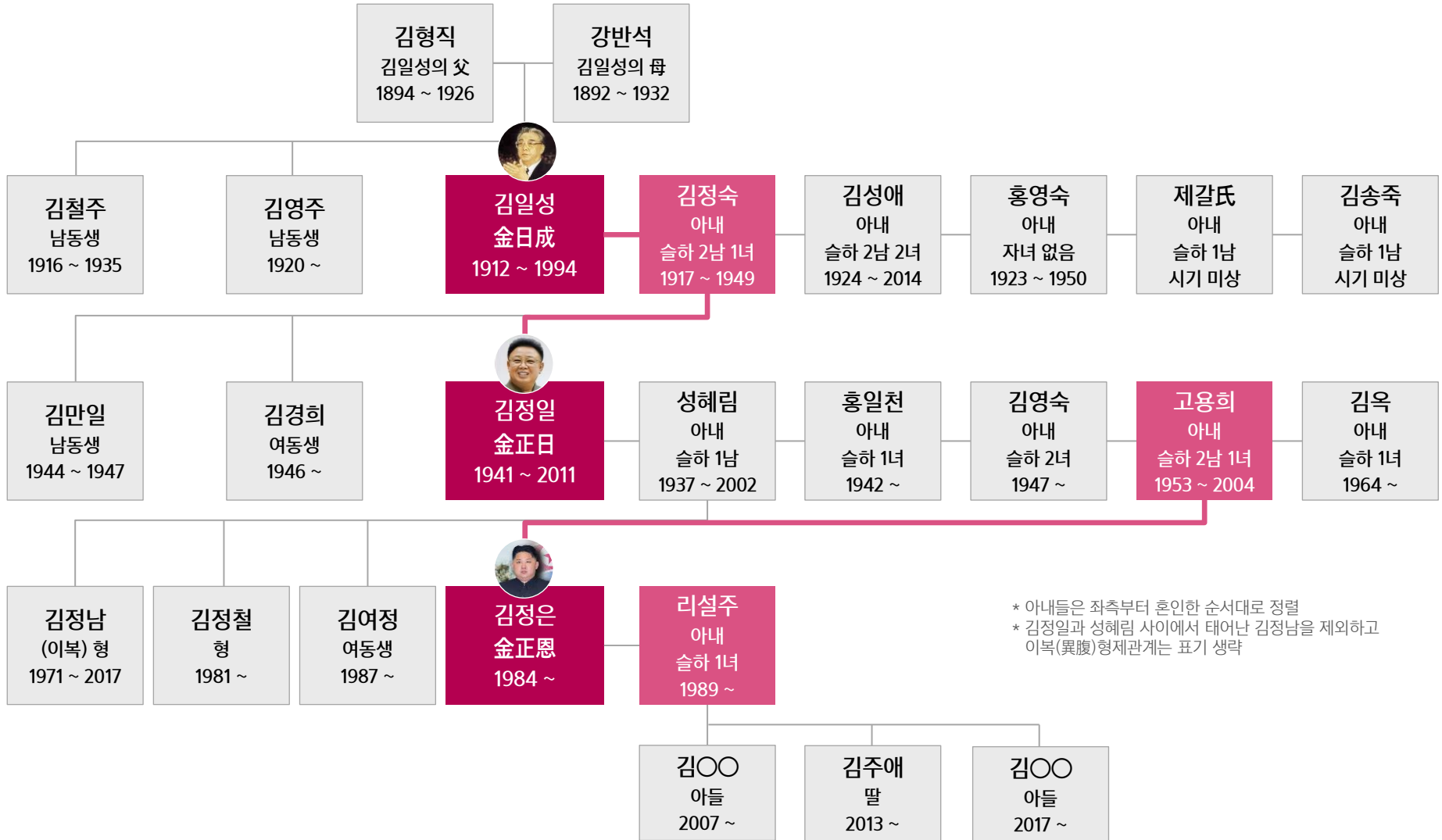
- ▶ 미국의 Secondary boycott 도입 이후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본격화
9월 23일 대북 석유제품 수출 제한, 북한산 섬유제품 금수 조치 발표
9월 28일 현존하는 모든 북중 합작, 합작기업을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토록 통보
→ 북한의 수출물량 70%가 막히면서 외화수입의 급감이 예상됨
- ▶ UN 결의 제2375호 채택 이후 북한 내 석유가격 급등
휘발유 가격 연초대비 3배까지 급등
식량 가격에는 아직 큰 변동이 없으나 연료 가격이 오르면서 운임 상승, 식량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강도가 높아지자,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도 심해짐

- ▶ 미국의 Secondary boycott 도입 이후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본격화
- ▶ 경제제재 강화 후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
- ▶ 결국 북한이 대화로 나오게 됨

IV. 참고 자료

김일성 ~ 김정은 주요 가계도



김일성(金日成) 인물 연표

시기	내용
1912. 4. 15	부(父) 김형직과 모(母) 강반석의 장남 김성주(金成柱)로 평양에서 출생
1919. 가을	만주로 이주하여 소학교 입학
1923. 4	평양으로 귀국
1925. 1	다시 만주로 이동
1926. 6. 5	부친 김형직 사망
1927. 1. 17	만주 길림성에서 육문(毓文)중학교 진학
1929. 가을	반일(反日) 조선공산청년회 활동 중 체포되어 구금
1930. 5	감옥에서 석방. 수감 중 중학교 퇴학 처분
1930 전후	김성주(金成柱)에서 김일성(金日成)으로 개명
1932. 4. 25	만주에서 항일 빨치산 부대를 조직 (북한 조선인민군 창건일)
1932. 7. 31	모친 강반석 사망
1933	만주에서 한인과 중국인 혁명가가 이끄는 소규모 유격대 활동에 참가
1936. 2	중국인 양징위를 사령관으로 동북항일연군 결성
1937. 6. 4	김일성이 이끄는 유격부대가 압록강변의 한국마을 보천보를 공격
1938. 11	동북항일연군 2방면군 군장
1938. 12	일본 토벌대를 피해 압록강 연안 북부국경일대로 이동 (고난의 행군)
1940. 2. 23	일본 토벌대에 의해 양징위 피살
1941. 3	소련으로 피신. 소련 극동군 산하 88여단 입대. 아내 김정숙과 혼인

시기	내용
1941. 9	스탈린과의 면접 후 북한 지도자로 내정
1945. 9. 19	해방 후 소련에서 북한으로 귀국
1945. 10. 14	소련점령군, 평양군중대회에서 김일성을 항일혁명 민족 영웅으로 소개
1945. 12. 17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위원장
1946. 2. 8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1946. 8. 28	북조선노동당 창당 (위원장 김두봉, 부위원장 김일성·주병하)
1946. 10. 1	김일성대학 개교
1947. 2. 22	북조선인민위원회 성립 (위원장 김일성)
1948. 9.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1949. 6. 30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 조선노동당으로 합당
1949. 9. 22	아내 김정숙 분만 중 사망
1963	두 번째 아내 김성애와 재혼
1972. 12. 27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 공포. 국가주석 취임
1984. 6	동독 방문
1989. 1. 1	신년사에서 남북정치협상 제의. 김수환 추기경과 문익환 목사 등을 초청
1992	개방 의사 공식 표명. 미국, 유럽 등과 적극적인 외교협상 추진
1993	김정일에게 국방위원장직 이양
1994. 7. 8	집무실에서 사망

김정일(金正日) 인물 연표

시기	내용
1941. 2. 16	부(父) 김일성과 모(母) 김정숙의 장남으로 소련에서 출생*
1942. 7	김일성의 소련군 88여단 입대로 거주지 이주
1945. 11	소련에서 북한으로 귀국
1949. 9. 22	모(母) 김정숙 사망
1950	중국 지린학원에서 유학
1953 ~ 1954	평양 삼석인민학교 및 제 4 인민학교
1954 ~ 1960	평양 제 1 초급중학교 및 남산고급중학교
1961. 7	조선노동당 입당
1964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 졸업
1964. 6. 19	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활동 시작
1967	노동당 선전선동부 문화예술지도과 과장
1970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
1971. 5	아내 성혜림과의 사이에 장남 김정남 출생
1973. 9	당 조직 및 선전 담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
1974. 2	노동당 정치위원회 위원 임명.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 확정
1980. 10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
1981	아내 고영희와의 사이에 차남 김정철 출생
1982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시기	내용
1984	중국 비공식 방문
1984	아내 고영희와의 사이에 삼남 김정은 출생
1990. 5	국방위원회 제 1 부위원장
1991. 12	인민군 최고사령관
1992. 4.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원수 등극
1993. 4. 9	국방위원회 위원장
1994. 7. 8	부(父) 김일성 사망
1995. 1	'다박술 초소' 시찰로 선군정치 시작
1997. 10	조선노동당 총비서 추대
1998. 9. 5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1차 회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2000. 5	중국 방문, 장쩌민(江澤民) 주석과 정상회담
2000. 6	김대중 전 대통령과 평양에서 첫 남북정상회담
2000. 7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2000. 10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면담
2002. 9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2004. 4	중국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정상회담
2006. 1	중국 방문, 우한(武漢)과 광저우(廣州) 등 경제특구 시찰
2011. 12. 17	현지 지도 중 열차에서 사망

참고: * 당시 소련에서 유리 이르세노비치 김(Юрий Ирсенович Ким)이라는 이름으로 출생한 기록이 남아있으나, 북한에서는 량강도 산지연군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함

김정은(金正恩) 인물 연표

시기	내용
1984. 1. 8	부(父) 김정일의 삼남으로 모(母) 고용희와의 사이에서 강원도 원산 출생
1996 ~ 2000	스위스 거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 이수
2000	북한으로 입국
2002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군사학 특설반 입학
2006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
2009. 1	김정일로부터 후계자 지명
2009. 5	북한, 해외 공관에 김정은 후계자 지명 통보
2009. 5	150일 전투, 100일 전투*
2010. 9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2010. 9. 28	조선인민군 대장 등극. 공식 정치무대 등장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
2011. 2. 21	군부대 시찰 사진 공개
2011. 12. 17	부(父) 김정일 사망
2011. 12. 30	김정일 공식 추도기간 종료 직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등극
2012. 4. 11	제 4차 조선노동당 대표회의에서 제 1 비서로 취임. 당권 장악 공식화

시기	내용
2012. 4. 13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으로 취임
2012. 4. 15	김일성 100번째 생일 맞이 군사 열병식에서 최초 대중 연설
2012. 7. 16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 공직 해임, 후임으로 현영철 임명
2012. 7.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원수 등극
2012. 7. 25	북한 언론에서 리설주(李雪珠)를 김정은의 아내로 공식 보도
2013. 12. 12	장성택 처형.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사형 판결 후 즉시 집행
2014. 4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해임, 후임으로 황병서 임명
2014. 3. 10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출
2014. 4. 9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 유임
2015. 4. 30	인민군 총참모장 현영철을 불경죄로 처형
2015. 5. 8	SLBM 북극성 1호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 시찰
2016. 5. 9	조선노동당 제 7차 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직 신설 후 취임
2016. 6. 29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회 신설. 위원장직 신설 후 취임
2016. 5. 6 ~ 9	조선노동당 제 7차 대회
2016. 7. 6	미 국무부, 김정은 등 15명에 대해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조치 발표

참고: * 북한의 대규모 대중동원 경제증산 운동. 70일 전투, 100일 전투, 200일 전투 등 수 차례 이용되어 온 방법 (통칭 '속도전'). 당에서 시행 날짜와 목표를 발표하면 노동자들은 이를 달성해야 함

북한의 정치사 (1945~1991)

시기	내용
1945. 8. 15	해방
1945. 8. 17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 결성
1945. 8. 26	소련군 평양 입성
1945. 9. 19	김일성 북한으로 귀국
1945. 12. 16	모스크바 3상회의
1946. 2. 8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발족
1946. 3. 20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
1946. 8. 28	북조선노동당 창당
1947. 2	북조선인민위원회 성립
1948. 2. 8	조선인민군 창건
1948. 8. 25	조선 최고인민회의 선거 실시
1948. 9.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포, 김일성 수상 취임, 내각 조직
1949. 6. 30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 조선노동당으로 합당
1950. 6. 25	6·25 전쟁 발발
1951. 7. 10	정전회담 개시
1953. 7. 27	정전협정 정식 조인
1960. 8. 14	김일성 7개년 계획 발표. 남북 연방제 통일 방안 제의
1961. 7	조·소 /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 체결

시기	내용
1962. 10. 12	조·중 국경조약 체결
1962. 12. 10	노동당 제 4기 5차 전원회의에서 4대 군사노선* 채택
1967. 5. 8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갑산파 숙청. 사상 단속
1968. 1. 21	북한 무장 게릴라부대 청와대 기습 (김신조 사건)
1972. 7. 4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971. 11. 20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에서 남북 당국자 최초 접촉
1972. 12. 27	새로운 사회주의헌법 공포 (주석제 신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법제화)
1973. 6. 23	김일성, 조국통일 5대 방침 발표, 고려연방공화국 제안
1974. 2. 19	김정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선포
1974. 9. 16	국제원자력기구 (AEA) 가입
1975. 1. 1	김정일, '전군의 주체사상화' 선포
1976. 8. 18	판문점 도끼살인사건
1980. 10. 10	조선노동당 제 6차 대회.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제시
1985. 12. 12	핵확산금지조약 (NPT) 가입
1987.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 3차 7개년 계획 채택
1988. 9. 3	서울올림픽 불참 공식 선언
1991. 9. 17	남북한 UN 동시 가입
1991. 12. 11	남북고위급회담.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참고: * 전인민의 무장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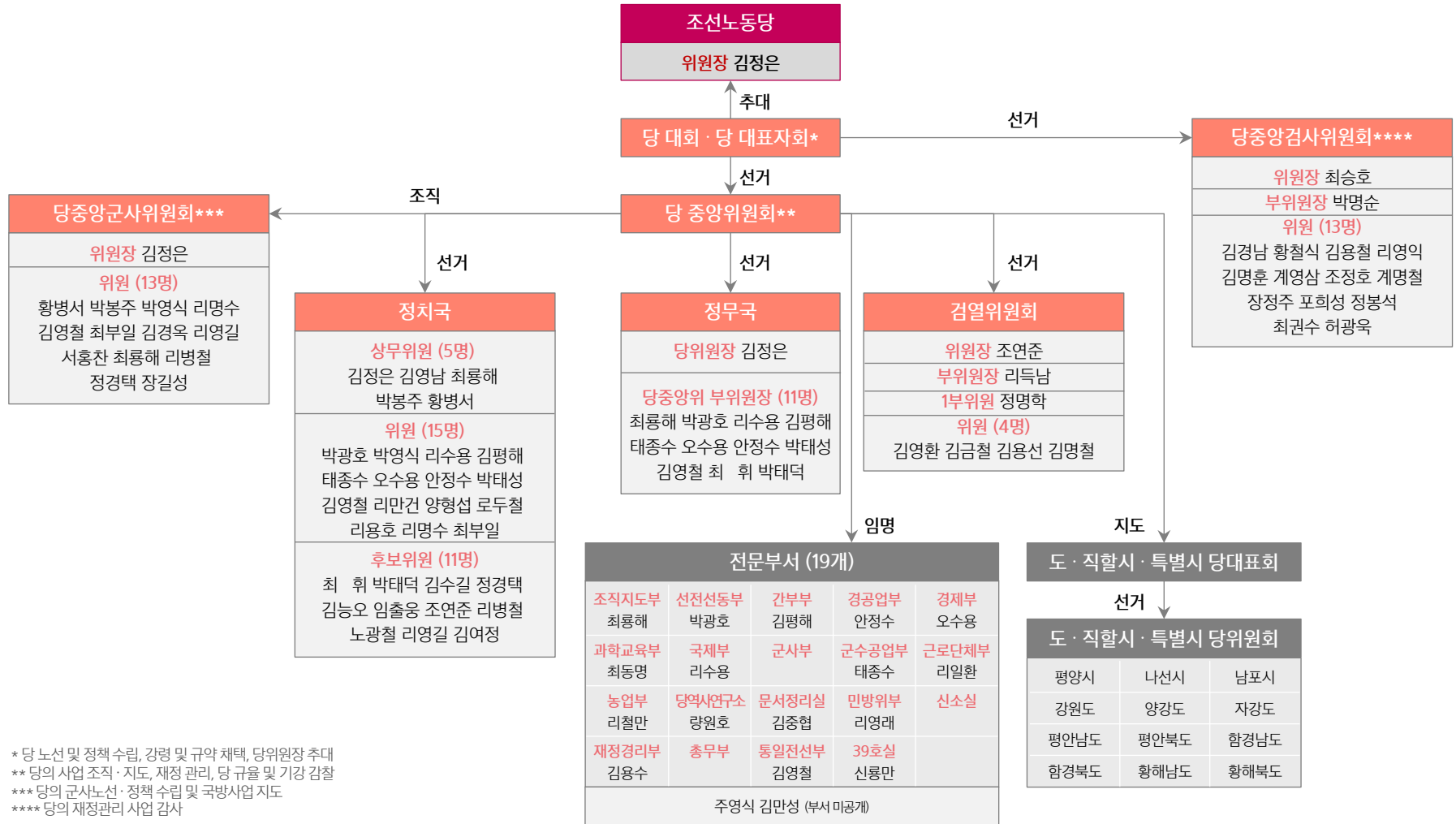
북한의 정치사 (1992~2017)

시기	내용
1992. 4. 18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원수 등극
1993. 3. 12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선언 → 그 해 6월 10일 탈퇴 유보
1994. 7. 8	김일성 사망
1995. 9. 10	남북, UN 군축회의 동시 가입
1997. 2. 12	황장엽 망명
1997. 12. 9	4자회담 제 1차* (제네바)
1998. 9. 5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1차 회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1999. 6. 15	서해교전 발생 (1차 연평해전)
2000. 4. 8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남북합의서 서명 (4. 10 발표)
2000. 6. 13	1차 남북정상회담. '6. 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000. 6. 30	제 1차 남북적십자회담 (금강산여관)
2000. 7. 27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공식 가입. 이탈리아 주재 대사관 개관 (로마)
2002. 6. 29	북한 경비정 북방한계선 침범. 남북교전 발생 (2차 연평해전)
2003. 1. 10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2003. 8. 27	6자회담 제 1차** (베이징)
2004. 5. 22	북·일 정상회담 (평양)
2004. 8. 13	아테네올림픽 참가. 남·북한 개폐회식 공동입장
2004. 10. 22	외무성 대변인, 남한 핵문제 우선 논의 등 6자회담 개최조건 발표

시기	내용
2006. 10. 9	1차 핵실험 실시
2007. 10. 2	2차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발표
2008. 8	베이징올림픽 참가
2008. 10	국제원자력기구 영변 핵시설 접근 허용. 핵시설 불능화 작업 재개
2009. 4	국제원자력기구 검증팀 추방
2009. 6. 13	외무성 대변인, 핵 포기 불가 입장 공식 천명
2010. 11. 23	연평도 포격
2011. 12. 17	김정일 사망
2012. 4. 11	제 4차 당 대표자회의. 김정은을 당 제 1 비서로 추대
2012. 4. 13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5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개정. 핵 보유국 명시
2012. 7. 18	김정은 국가원수 칭호 수여
2013. 1. 1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 육성 신년사 발표
2013. 3. 31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핵·경제 병진노선 채택
2013. 4. 3	개성공단 통행 금지 조치. 입경만 허용
2013. 8. 25	선군절을 국가명절로 지정
2013. 12. 12	장성택 처형.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사형 판결 후 즉시 집행
2016. 5. 6~9	조선노동당 제 7차 대회
2017. 10. 7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2차 전원회의

참고: * 이후 4자회담(한국-북한-미국-중국)은 1999년 8월까지 약 2년 동안 6차례 실시
 ** 이후 6자회담(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은 2007년 10월까지 약 4년 동안 6차례 실시

북한의 권력구조 : 조선노동당



* 당 노선 및 정책 수립, 강령 및 규약 채택, 당위원장 추대
** 당의 사업 조직 · 지도, 재정 관리, 당 규율 및 기강 감찰
*** 당의 군사노선 · 정책 수립 및 국방사업 지도
**** 당의 재정관리 사업 감사

2017년 10월 7일 조선노동당 제 7기 2차 전원회의의 기준 (출처: 통일부)

북한의 권력구조 :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5명

김정은
(1984년생)



현직

조선노동당 위원장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주요경력

2009. 후계자 지명
2010. 당 중앙위 위원
2011.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2012. 조선노동당 제비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2014.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2016. 당 정치국, 중앙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조선노동당 위원장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1928년생)



현직

당 정치국 상무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요경력

1972. 최고인민회의 제5기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1974. 당 정치국 후보위원
1978. 당 정치국 위원
1980.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
1994. 김일성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0. 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위 위원
2011.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 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위 위원

최룡해
(1950년생)



현직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위 부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 조직지도부장(추정)

주요경력

199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1996.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2003. 조선노동당 총무부 부부장
2006. 황해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2010. 당 중앙위, 중앙군사위 위원
인민군 대장
2011.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3. 인민군 차수
2014. 당 비서국 비서
2016.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1939년생)



현직

당 정치국 상무위원
내각 총리

주요경력

1993. 당 경공업부 부부장
1994. 당 경제정책검열부 부부장
1998.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2003. 내각 총리
2010.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011.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3. 당 정치국 위원, 내각 총리
2016. 당 중앙위, 군사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항병서
(1949년생)



현직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주요경력

2005.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부부장
2010. 당 중앙위 후보위원
2011.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4.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인민군 차수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인민군 대장
인민군 총정치국 국장
2016. 당 중앙위, 중앙군사위 위원
당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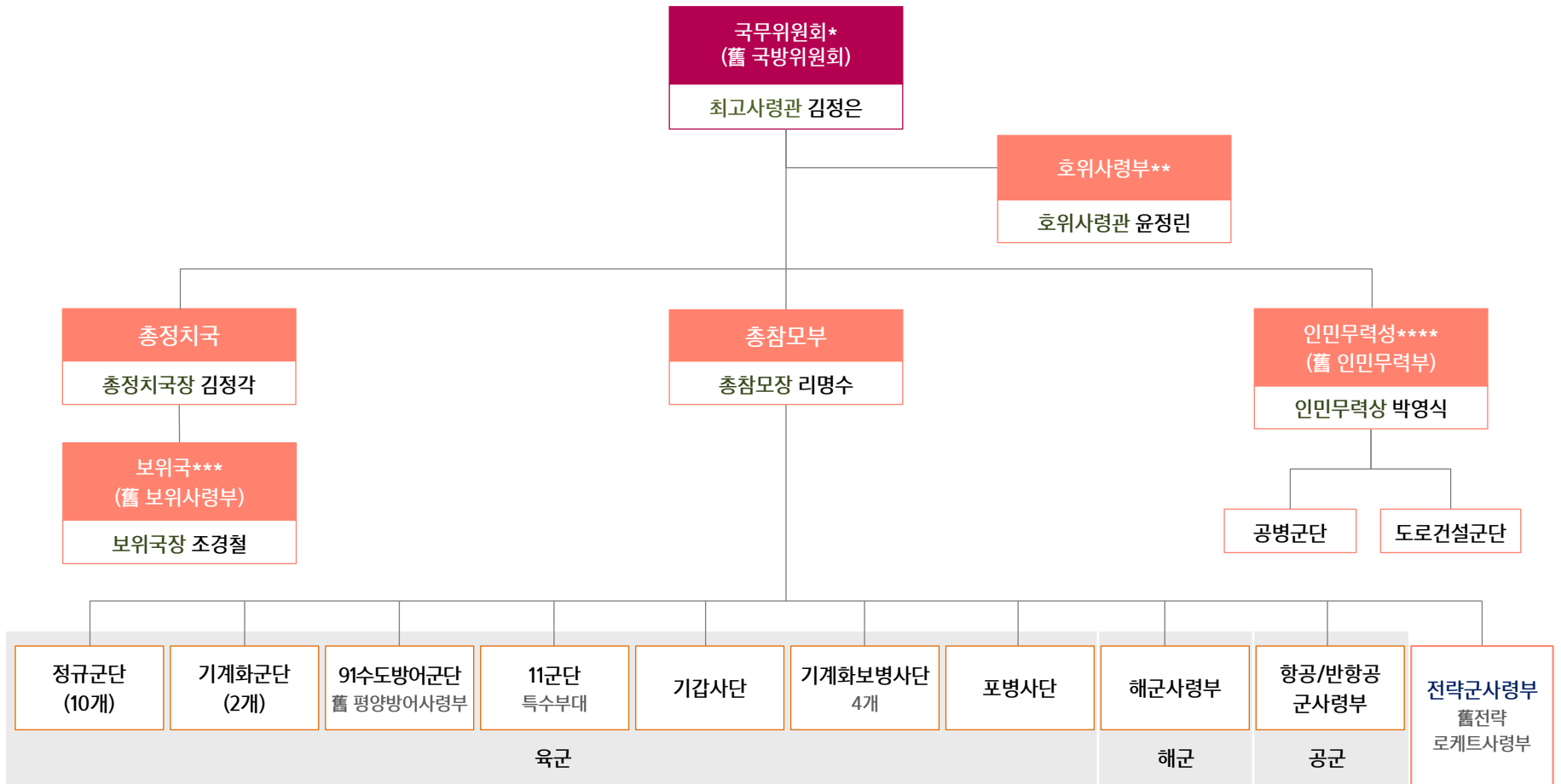
* 2017년 10월 7일 조선노동당 제 7기 2차 전원회의 기준

북한의 권력구조 : 의회, 내각, 사법기관



참고: * 2016년 6월 헌법개정.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 ** 국가 사업 지도, 간부 임명, 조약 비준, 비상/전시 동원령 선포 등; *** 의회에 해당. 헌법과 법률 제정; **** 국가 정책 시행, 예산 편성 등 행정업무 전반 수행

북한의 권력구조 : 군부



참고: *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 ** 김정은 일가와 노동당 고위 간부의 경호, 평양 내 주요 시설 경비 임무
 *** 총정치국의 지도로 반체제세력을 단속하는 군 내 비밀경찰 역할; **** 국방부에 해당하는 조직, 군 관련 외교·군수·행정·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

조선노동당대회 및 당 대표자회

당대회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기구. 실질적으로는 당 노선·정책·전략에 관한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공식 확인하는 기능

차수	개최일	주요 의제 및 이슈
1차	1945. 10. 10 ~ 13	당 창건 선포, 당 정치 노선 및 조직 노선 채택
2차	1948. 3. 27 ~ 30	부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 목표 재확인, 당중앙위원회를 통한 김일성의 입지 공고화
3차	1956. 4. 23 ~ 26	전후 경제 복구를 위한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 시작 (1957 ~ 1961)
4차	1961. 9. 11 ~ 18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1961 ~ 1967)
5차	1970. 11. 2 ~ 13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 (1971 ~ 1976)
6차	1980. 10. 10 ~ 14	사회주의건설 10대 전망 목표 제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안, 김정일을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
7차	2016. 5. 6 ~ 9	주체사상의 유일지도이념화, 김정은을 당위원장으로 추대, 공식 후계자로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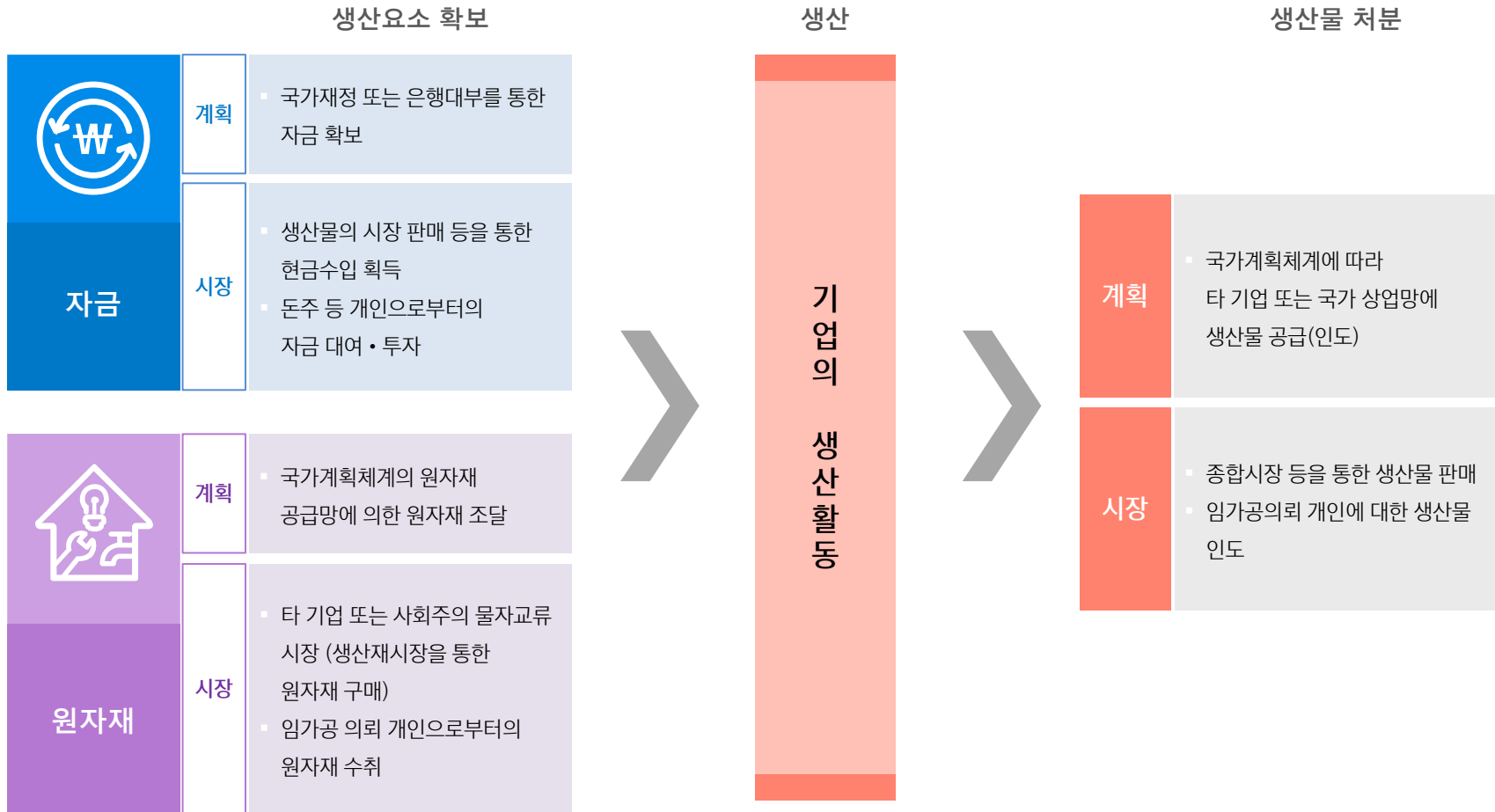
당대표자회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중앙지도기관 구성원을 소환·보선하기 위해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회의

차수	개최일	주요 의제 및 이슈
1차	1958. 3. 3	인민경제발전 1차 5개년 계획 (1957 ~ 1961)
2차	1966. 10. 5	국방·경제 병진 정책,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3년 연장 (~1970)
3차	2010. 9. 28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
4차	2012. 4. 11	김일성과 김정일을 각각 영원한 수령과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명문화, 김정은을 제 1비서,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자료: 통일부, 삼성증권 정리

북한의 경제 구조: 계획과 시장의 공존



자료: 양문수(2013), 삼성증권 정리

북한의 종합 시장

종합시장

- ▶ 2003년 이후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 허가된 시장
기존의 장마당을 대대적으로 정비(신축, 개축, 증축)하여 '○○시장'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
- ▶ 2016년 12월 기준 약 404개 존재
- ▶ 시장을 市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대표적인 북한의 종합시장



자료: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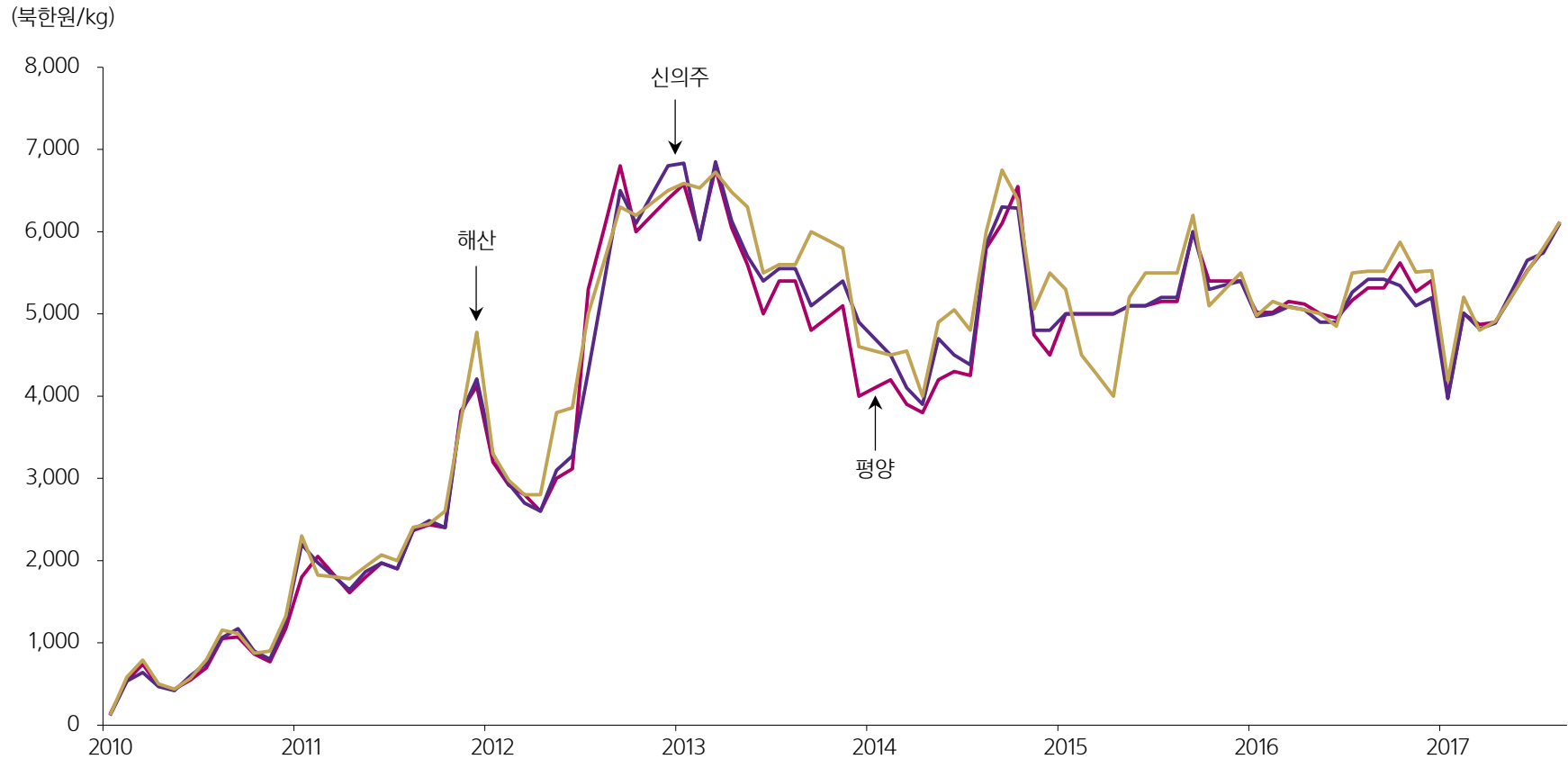
평양 종합시장



자료: 통일부, 언론보도

북한의 시장 쌀 가격

북한의 시장 쌀 가격 추이



참고: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 단행
자료: 데일리NK, KDI, 검색일: 2017.10.8

북한의 시장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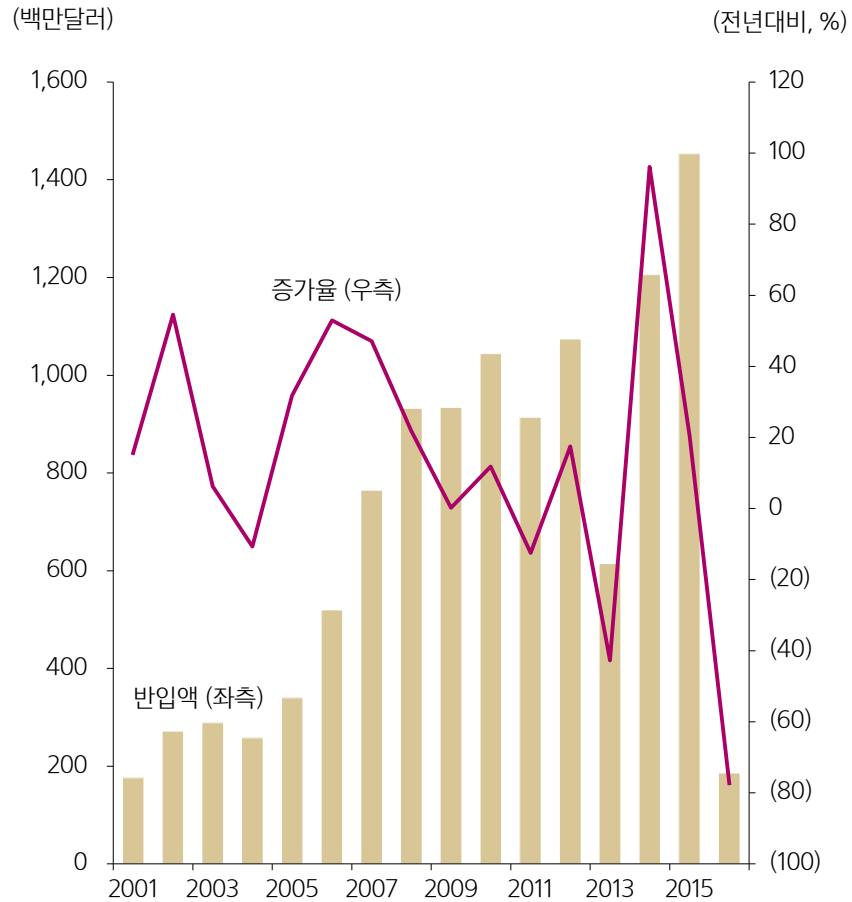
북한의 시장환율 추이

(북한원/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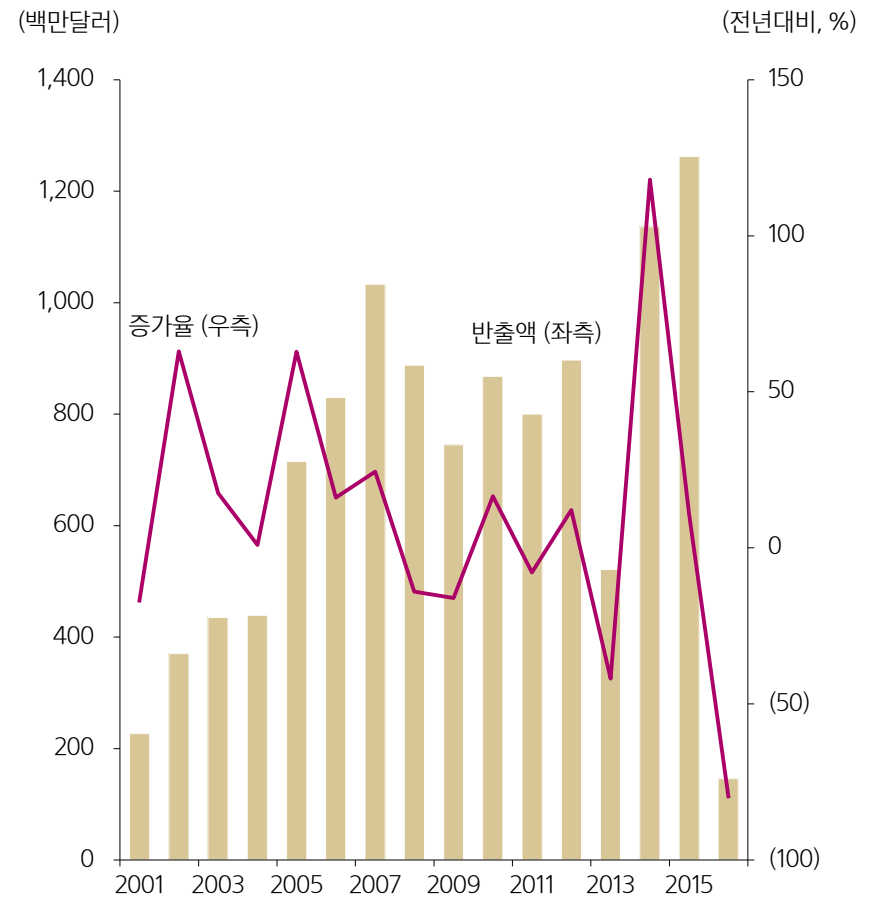
참고: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 단행
자료: 데일리NK, KDI, 검색일: 2017.10.8

반입액 및 증가율



참고: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간 내부거래로 보고 관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수입/수출이라는 용어 대신 반입/반출이라는 용어를 씀
자료: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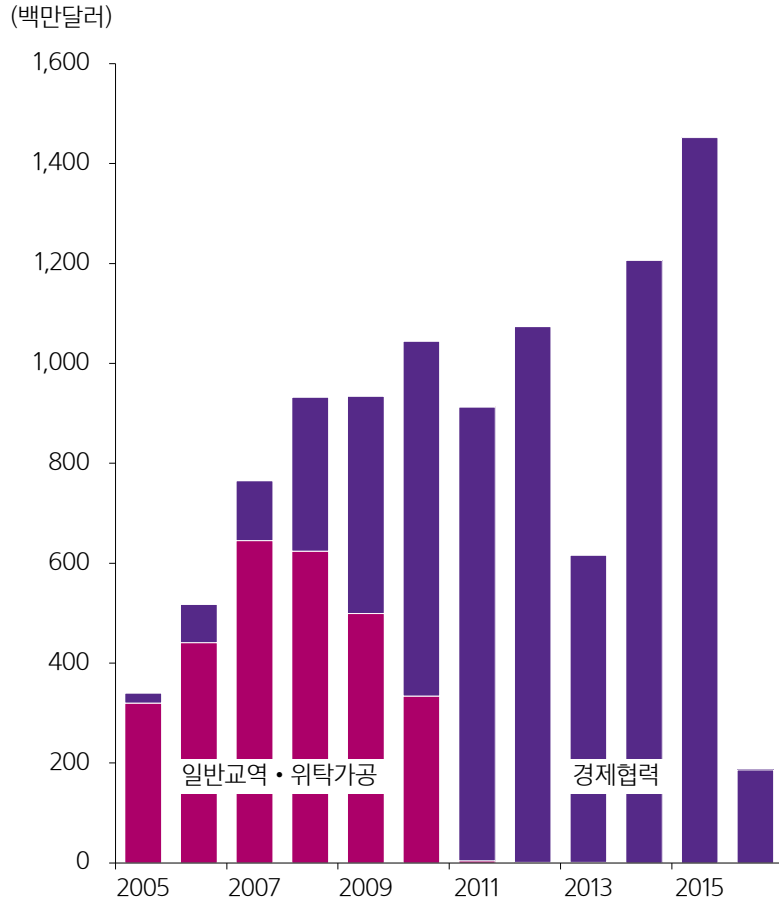
반출액 및 증가율



참고: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간 내부거래로 보고 관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수입/수출이라는 용어 대신 반입/반출이라는 용어를 씀
자료: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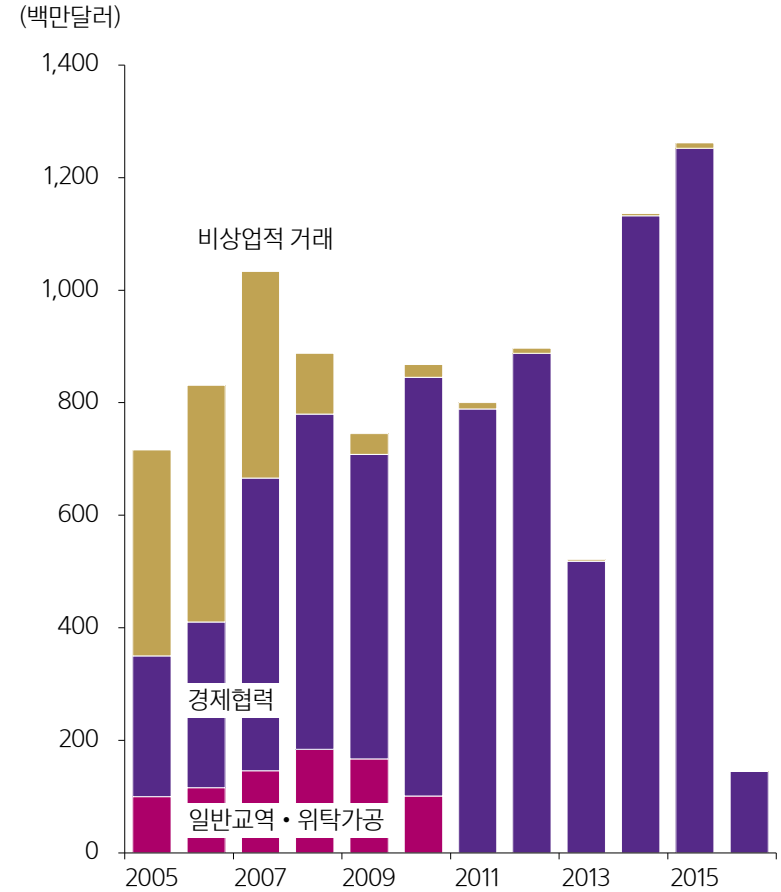
형태별 남북교역

반입



참고: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및 기타 경제협력을 의미함
 자료: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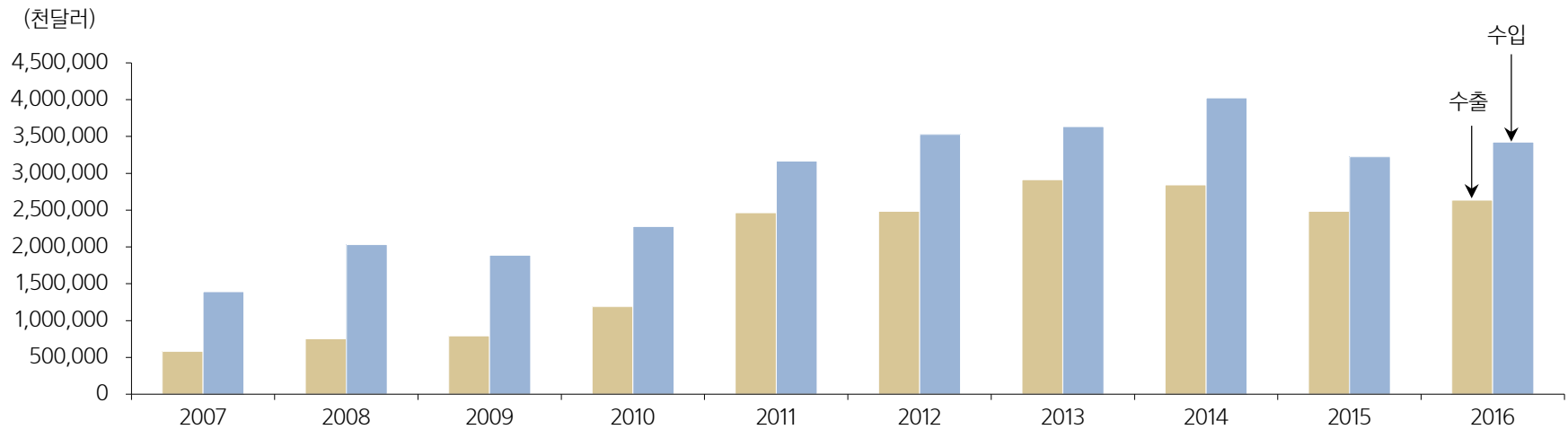
반출



참고: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및 기타 경제협력을 의미함
 자료: 통일부

북중 수출입

과거 10년간 對중국 교역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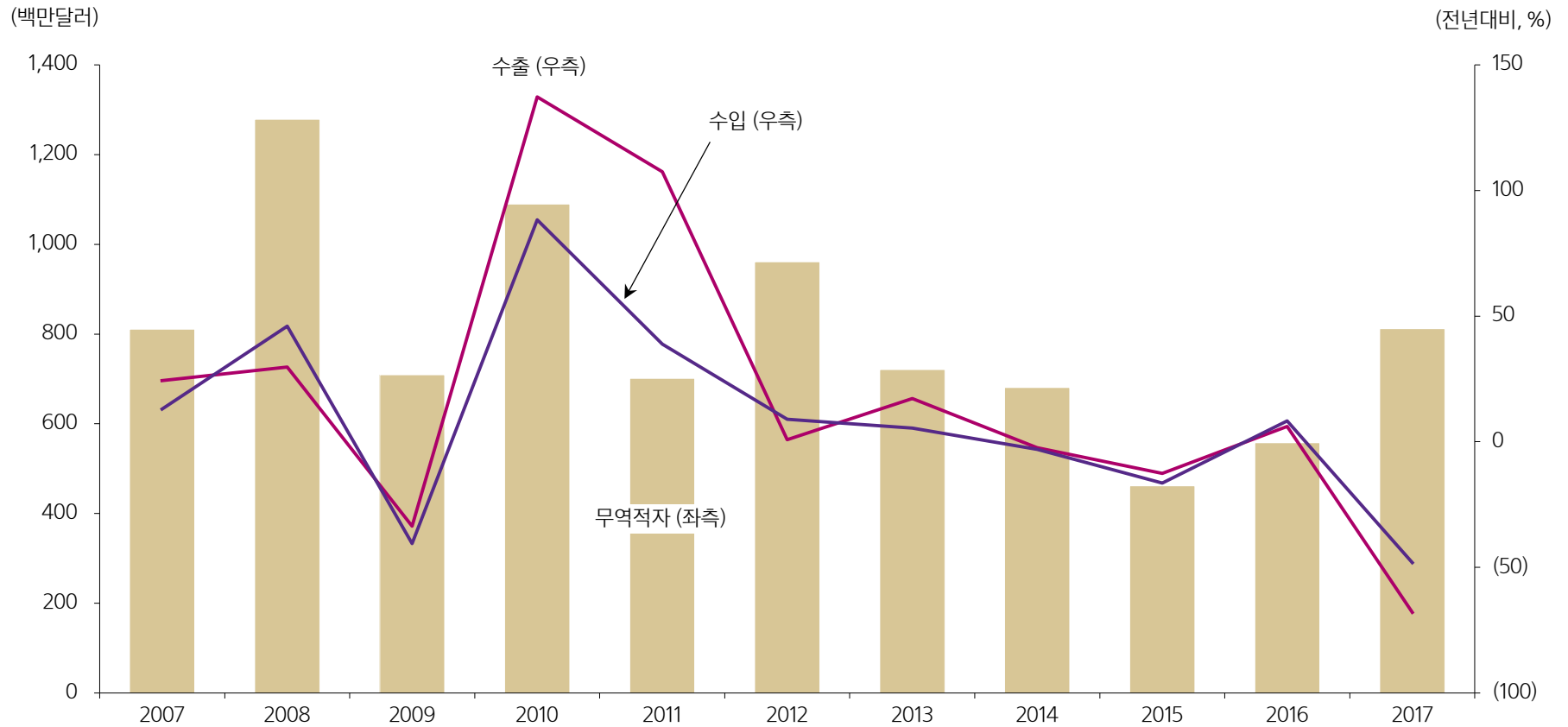


(천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	581,521	754,046	793,048	1,187,861	2,464,188	2,484,699	2,913,624	2,841,476	2,483,944	2,634,402
수입	1,392,453	2,033,233	1,887,686	2,277,816	3,165,181	3,527,843	3,632,909	4,022,515	3,226,464	3,422,035
수출입계	1,973,974	2,787,279	2,680,734	3,465,677	5,629,369	6,012,542	6,546,533	6,863,991	5,710,408	6,056,437

자료: KOTRA

북중 무역수지

북중 무역적자와 수출입 증가율



참고: 중국 해관은 2009년 8월부터 11월 사이 북한과의 무역통계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2009년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2017년의 경우 1-6월
 자료: KITA, 중국 해관, KDI

북중무역 : 수출

북한의 대중국 수출상위 5개 품목 (HS 4단위 기준, 백만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석탄	201.3	석탄	208.6	석탄	390.4	석탄	1,140.90	석탄	1,198.50
철광	172.3	철광	48.5	철광	194.3	철광	324.5	철광	248.6
연체동물	36.1	선철	20.6	선철	64.4	남성재킷	111.4	남성재킷	95.2
선철	35	연체동물	19.3	연체동물	53.2	선철	105.8	연체동물	91.4
페로얼로이	31	남성재킷	18.1	아연의 괴	47.7	남성코트	85.3	남성코트	88.8

2013		2014		2015		2016		2017 (1~6월)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석탄	1379.8	석탄	1,135.70	석탄	1,049.80	석탄	1,180.90	석탄	219.5
철광	298.7	철광	221.9	남성코트	168.5	남성재킷	157.7	철광	85.95
남성코트	126.7	남성코트	157.3	남성재킷	151.3	남성코트	152.2	남성재킷	55.3
남성재킷	122.2	남성재킷	152.9	여성코트	130.5	연체동물	140.7	납광	51.5
여성코트	116.5	여성코트	137.1	여성재킷	96.9	여성코트	135.5	연체동물	50.9

참고: 중국 해관은 2009년 8월부터 11월 사이 북한과의 무역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2009년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자료: KITA, 중국 해관, KDI

북중무역 : 수입

북한의 대중국 수입 상위 5개 품목 (HS 4단위 기준,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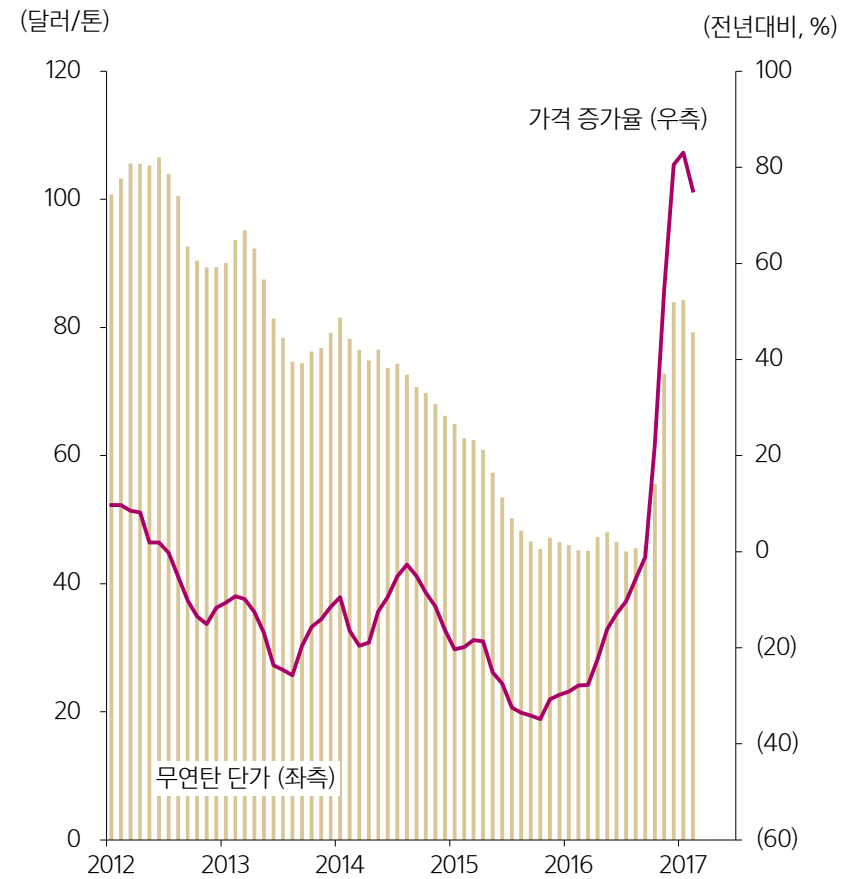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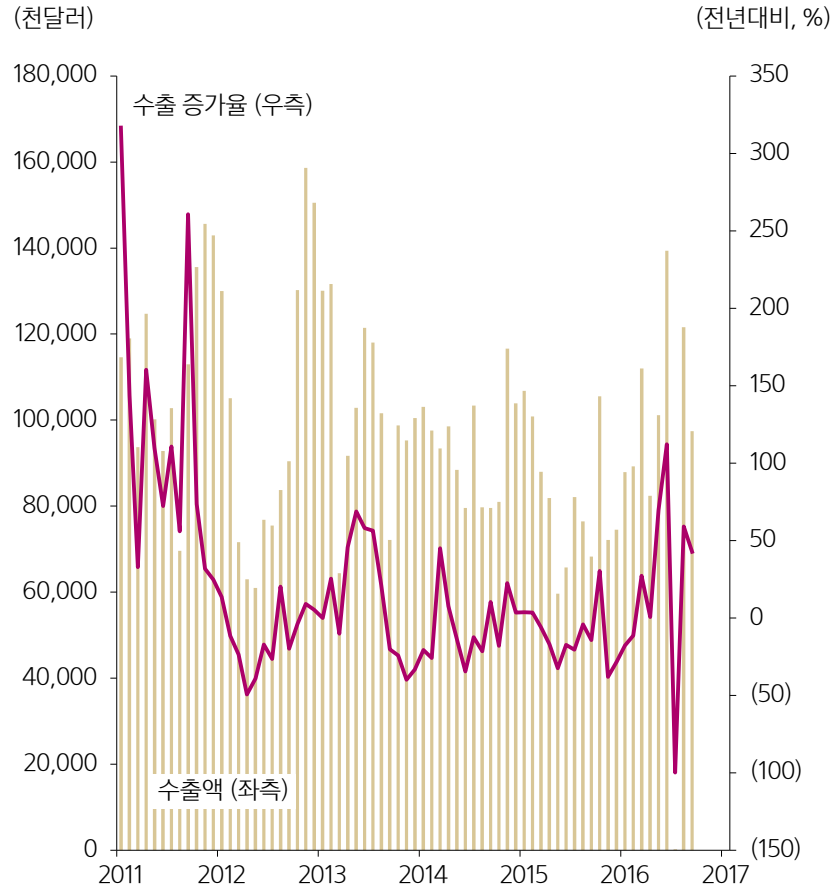
2008		2009		2010		2011		2012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원유	413.3	원유	164.2	원유	325.8	원유	518.40	원유	577.90
석유제품	120.1	석유제품	46.4	석유제품	104.9	석유제품	192.4	석유제품	161.9
합성필라 멘트사의 직물	52.4	화물자동차	41.8	화물자동차	88.3	화물자동차	146.2	화물자동차	141.2
대두유	45.1	합성필라 멘트사의 직물	33.2	합성필라 멘트사의 직물	71.7	합성필라 멘트사의 직물	99.3	합성필라 멘트사의 직물	120
석탄	44.4	대두유	26.1	전화기	62.8	원유	518.40	전화기	93.2

2013		2014		2015		2016		2017 (1~6월)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원유	598.1	석유제품	154.80	합성필라 멘트사의 직물	138.20	합성필라 멘트사의 직물	175.70	합성필라 멘트사의 직물	116.6
화물자동차	143.3	합성필라 멘트사의 직물	152.8	석유제품	116.5	화물자동차	147.2	전화기	40.6
합성필라 멘트사의 직물	136.8	전화기	112.3	화물자동차	108.1	석유제품	115	대두유	37.3
석유제품	104.5	대두유	112.2	대두유	104	대두유	98.1	기타직물	34.2
대두유	85	화물자동차	108.7	전화기	73.5	사과, 배	82	화물자동차	28.3

참고: 중국 해관은 2009년 8월부터 11월 사이 북한과의 무역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2009년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자료: KITA, 중국 해관, KDI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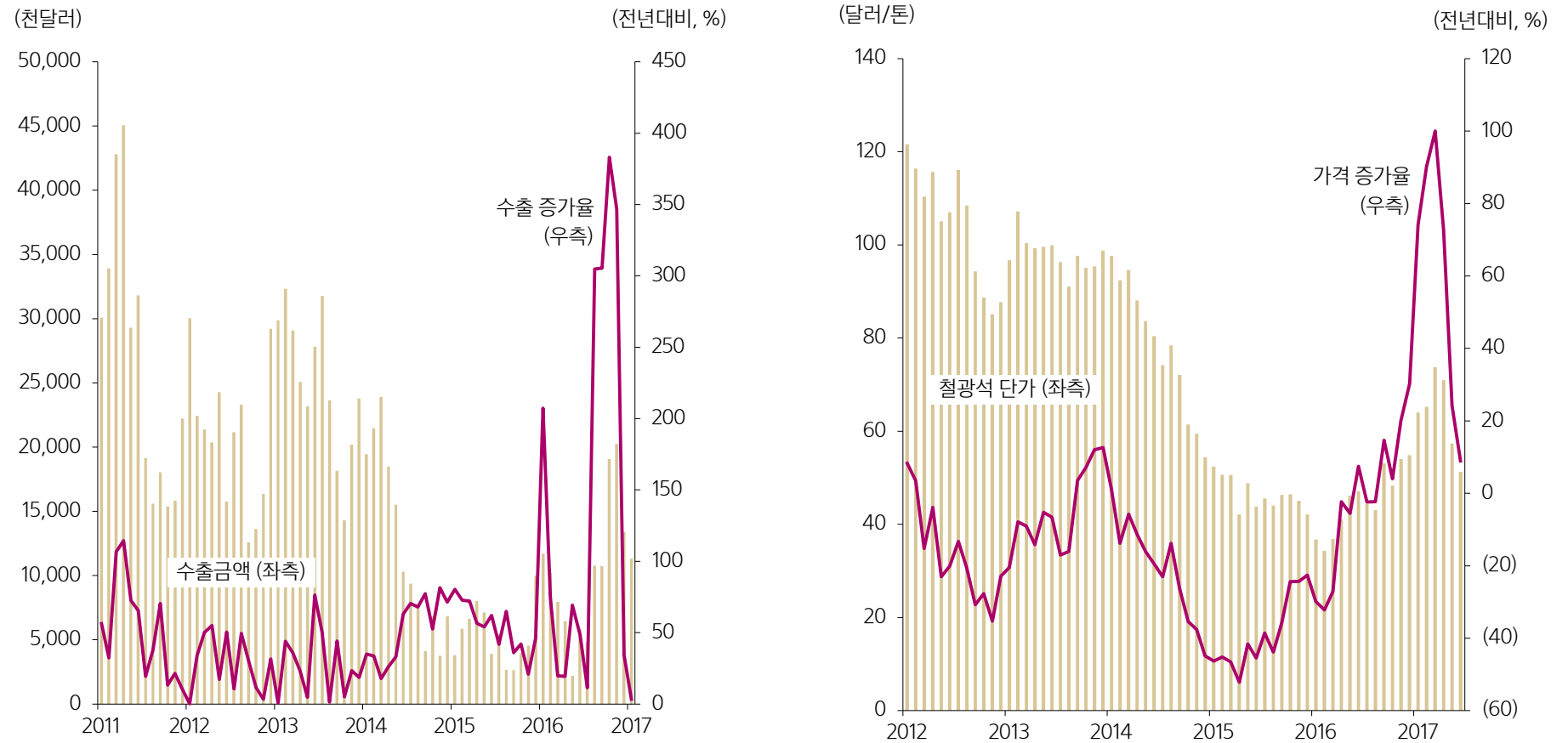
1. 무연탄



참고: 2017년 3월 이후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의 중국 向 무연탄 수출 중단
 자료: KITA, 중국 해관, KDI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상품

2. 철광석



자료: KITA, 중국 해관, KDI

북한의 대미 무역

(천달러, %, kg)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전년대비 증감	중량	전년대비 증감	금액	전년대비 증감	중량	전년대비 증감	
2000년	(2,737)	76	0	0	(154)	(425)	0	0	(2,583)
2001년	(650)	76	0	0	(26)	83	0	0	(624)
2002년	(25,012)	(3,748)	0	0	(15)	42	0	0	(24,998)
2003년	(7,977)	68	(68)	0	(59)	(293)	(1,252)	0	(7,918)
2004년	(23,750)	(198)	0	100	(1,495)	(2,434)	(6,676)	(433)	(22,255)
2005년	(5,757)	76	0	0	(3)	100	0	100	(5,754)
2006년	(3)	100	0	0	0	100	0	0	(3)
2007년	(1,728)	(57,500)	0	0	0	0	0	0	(1,728)
2008년	(52,151)	(2,918)	0	0	0	0	0	0	(52,151)
2009년	(903)	98	0	0	0	0	0	0	(903)
2010년	(2,867)	(217)	0	0	(8)	0	0	0	(2,859)
2011년	(9,406)	(228)	(4,501)	0	0	100	0	0	(9,406)
2012년	(11,952)	(27)	(1,461)	68	0	0	0	0	(11,952)
2013년	(6,583)	45	(2,550)	(75)	0	0	0	0	(6,583)
2014년	(24,029)	(265)	(1)	100	0	0	0	0	(24,029)
2015년	(4,752)	80	0	100	0	0	0	0	(4,752)
2016년	(139)	97	0	0	0	0	0	0	(139)
2017년 1~7월	(3)	98	0	0	0	0	0	0	(3)

자료: KITA

북한의 대 EU 무역

(천유로, %, 톤)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전년대비 증감	중량	전년대비 증감	금액	전년대비 증감	중량	전년대비 증감	
2003년	(226,014)	0	(77,123)	0	(44,438)	0	(40,923)	0	(181,576)
2004년	(136,639)	40	(43,714)	43	(109,424)	(146)	(70,087)	(71)	(27,215)
2005년	(159,330)	(17)	(41,039)	6	(48,265)	56	(31,086)	56	(111,066)
2006년	(124,581)	22	(27,560)	33	(149,298)	(209)	(118,256)	(280)	24,717
2007년	(57,675)	54	(11,101)	60	(62,295)	58	(82,382)	30	4,620
2008년	(95,358)	(65)	(91,339)	(723)	(110,764)	(78)	(67,263)	18	15,406
2009년	(72,537)	24	(59,482)	35	(50,534)	54	(47,002)	30	(22,003)
2010년	(67,883)	6	(36,333)	39	(98,822)	(96)	(146,145)	(211)	30,939
2011년	(42,068)	38	(11,326)	69	(116,333)	(18)	(140,534)	4	74,265
2012년	(45,135)	(7)	(8,308)	27	(23,543)	80	(17,729)	87	(21,592)
2013년	(26,668)	41	(4,816)	42	(115,492)	(391)	(152,525)	(760)	88,824
2014년	(17,440)	35	(3,771)	22	(32,281)	72	(6,536)	96	14,841
2015년	(19,069)	(9)	(4,130)	(10)	(11,186)	65	(3,988)	39	(7,883)
2016년	(20,281)	(6)	(6,182)	(50)	(5,578)	50	(3,198)	20	(14,703)
2017년 1~3월	(2,988)	52	(580)	58	(1,218)	50	(536)	56	(1,769)

자료: KITA

북핵문제 관련 주요 사건 일지 (1961~2000)

시기	내용
1961	영변 원자력연구센터 착공 (1964. 4 가동)
1963	IRT-2000 실험용 경수로 착공 (1965 부분가동, 1967 정상가동)
1979	영변 흑연감속로 착공 (1986 가동, 1994 동결, 2003 재가동)
1985. 12	북한 핵확산방지조약 (NPT) 가입
1987	방사화학실험실 (재처리시설) 착공
1991. 9	남북 UN 동시 가입
1991. 9	부시 미 대통령, 전술핵무기 철수 선언
1991. 11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결정
1991. 12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991. 12. 31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채택
1992. 1	북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협정 정식 서명 (1992. 4 발효)
1993. 2	국제원자력기구 (IAEA) 대북 특별사찰 결의안 채택
1993. 3	북한 준전시상태 선포
1993. 3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1993. 3. 12	북한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선언 → 그 해 6월 10일 탈퇴 유보
1993. 4. 9	김정일 국방위원장 취임
1993. 5	북한 첫 탄두미사일인 노동미사일 (MRBM) 시험발사
1994. 5	북한 8,000개 연료봉 교체작업 시작

시기	내용
1994. 6	미 카터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회담 → 대화 국면 조성
1994. 7. 8	김일성 사망
1994. 10. 21	북·미기본합의 (제네바합의) 체결
1995. 1	미국, 대북 중유 제공 개시
1995. 3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설립
1995. 12	북한-KEDO 간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1996	전병호 노동당 군수비서 파키스탄 방문 (미사일-HEU* 커넥션 구축)
1996. 4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1997. 8	경수로공사 착공
1997. 9	노동미사일 실전배치 포착
1997. 12	4자회담 (1998. 8 까지 총 6차례 본회담 개최)
1998	미 클린턴 행정부, 북한 HEU 원심분리기 구입 시도 포착
1998. 5	인도 및 파키스탄 핵실험
1998. 8	뉴욕타임즈,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 보도**
1998. 8. 31	대포동미사일 시험발사
1999. 5	일본, 신가이드라인 관련법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통과
1999. 9	베를린 북·미고위급회담
2000. 6. 15	남·북 정상회담

참고: * 고농축 우라늄; ** 1999년 5월과 2000년 5월 사찰 결과 빈 공간으로 확인됨

북핵문제 관련 주요 사건 일지 (2000~2017)

시기	내용
2000. 10	조명록 특사 워싱턴 방문. 북·미 공동 커뮤니케 발표
2000. 10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북
2001. 3	한·미 정상회담. 부시 미 대통령, 김정일에 대한 '상당한 회의감' 표출
2001. 6	부시 미 대통령, 미사일 검증 등 대북정책 검토 내용 발표
2001. 9. 11	9·11 테러. 이후 10월 미국은 아프간전쟁 돌입
2001. 11	북한, 2개의 반테러협약 서명
2002. 1. 29	부시 미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
2002. 6	부시 미 대통령, 선제공격 독트린 발표
2002. 9	북·일 정상회담. 평양선언 발표
2002. 10	제임스 켈리 동아태차관보 방북. HEU 문제 제기
2002. 12	미사일 선적 이동 중 북한선박, 미국과 스페인 공동작전으로 나포
2003. 1	북한,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2003. 6	미국 주도의 PSI* 발족
2003. 7	북한, 미국에 8,000개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통보
2003. 7	미 하원, 경수로 지원 중단 세출예산 통과
2003. 8	1차 6자회담
2004. 2	2차 6자회담
2004. 6	3차 6자회담

참고: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시기	내용
2005. 2. 10	북한, 핵보유선언 및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선언
2005. 6	김정일, 정동영 의원과 회담에서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
2005. 9. 19	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에서 <9. 19 공동성명> 채택
2005. 10	미국, 대북 금융제재 개시
2006. 7	대포동 2호 시험발사
2006. 10	북한 외무성 성명, "앞으로 핵실험을 하게 된다"
2006. 10. 9	1차 핵실험
2007. 2. 13	5차 6자회담 3단계 회담에서 <2. 13 합의문> 채택
2008. 8. 29	북한, 핵불능화 중단 및 원상복구 선언
2009. 5. 25	2차 핵실험
2013. 2. 12	3차 핵실험
2016. 1. 6	4차 핵실험
2016. 8	북극성 - 1호 (SLBM*) 시험발사
2016. 9. 9	5차 핵실험
2017. 2. 12	북극성 - 2호 (SLBM) 시험발사
2017. 7. 14	화성 - 14호 (ICBM**) 고각 시험발사
2017. 9. 3	6차 핵실험
2017. 9. 4	한·미 간 한국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합의

참고: *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핵문제 관련 주요 사건과 금융시장 반응 (2006~2011)

일시	이벤트	구분	시장동향 (이벤트 발생일 대비 등락)		
			1개월	2개월	3개월
2006.10.9	1차 핵실험	증시 (EM 대비 상대성과, %pt)	0.52	(4.40)	(5.70)
		국채금리 (3년물, %pt)	0.11	0.15	0.31
		CDS 프리미엄 (%pt)	(3.57)	(9.00)	(6.33)
		원/달러 (%)	(2.83)	(4.52)	(2.63)
		원/엔 (%)	(1.85)	(2.23)	(2.85)
2008.8.29	핵불능화 중단선언	증시 (EM 대비 상대성과, %pt)	13.16	4.42	8.00
		국채금리 (3년물, %pt)	0.21	(1.23)	(0.90)
		CDS 프리미엄 (%pt)	54.64	461.35	252.95
		원/달러 (%)	9.14	31.03	34.88
		원/엔 (%)	13.97	46.38	53.61
2009.5.25	2차 핵실험	증시 (EM 대비 상대성과, %pt)	(1.17)	(1.28)	1.87
		국채금리 (3년물, %pt)	0.36	0.35	0.53
		CDS 프리미엄 (%pt)	45.77	(3.78)	(12.03)
		원/달러 (%)	3.20	0.06	(0.05)
		원/엔 (%)	2.00	0.09	0.63
2010.3.26	천안함 침몰사건	증시 (EM 대비 상대성과, %pt)	1.04	1.48	4.87
		국채금리 (3년물, %pt)	(0.09)	(0.23)	0.06
		CDS 프리미엄 (%pt)	1.09	70.78	44.87
		원/달러 (%)	(3.07)	9.96	6.71
		원/엔 (%)	(4.57)	13.15	10.65
2010.11.23	연평도 포격사건	증시 (EM 대비 상대성과, %pt)	2.98	5.37	2.67
		국채금리 (3년물, %pt)	(0.19)	0.46	0.47
		CDS 프리미엄 (%pt)	(4.40)	(1.44)	0.54
		원/달러 (%)	1.01	(1.44)	(1.19)
		원/엔 (%)	1.30	(0.68)	(0.41)
2011.12.17	김정일 사망	증시 (EM 대비 상대성과, %pt)	(2.76)	(3.08)	(2.74)
		국채금리 (3년물, %pt)	0.02	0.10	0.26
		CDS 프리미엄 (%pt)	5.12	5.12	(43.94)
		원/달러 (%)	(0.33)	(2.31)	(2.84)
		원/엔 (%)	0.93	(3.77)	(9.46)

자료: Thomson Reuters, WiseFn, 삼성증권

북핵문제 관련 주요 사건과 금융시장 반응 (2013~2017)

일시	이벤트	구분	시장동향 (이벤트 발생일 대비 등락)		
			1개월	2개월	3개월
2013. 2. 12	3차 핵실험	증시 (EM 대비 상대성과, %pt)	2.24	2.06	0.84
		국채금리 (3년물, %pt)	(0.10)	(0.04)	(0.14)
		CDS 프리미엄 (%pt)	(3.74)	11.75	(2.06)
		원/달러 (%)	0.40	3.51	1.92
		원/엔 (%)	(2.30)	(1.60)	(6.13)
2016. 1. 6	4차 핵실험	증시 (EM 대비 상대성과, %pt)	2.19	(1.48)	(1.07)
		국채금리 (3년물, %pt)	(0.13)	(0.14)	(0.18)
		CDS 프리미엄 (%pt)	8.44	1.45	5.70
		원/달러 (%)	(0.04)	0.29	(3.49)
		원/엔 (%)	1.56	4.83	4.40
2016. 9. 9	5차 핵실험	증시 (EM 대비 상대성과, %pt)	0.20	(1.43)	0.83
		국채금리 (3년물, %pt)	0.01	0.07	0.41
		CDS 프리미엄 (%pt)	0.66	7.72	1.83
		원/달러 (%)	0.91	4.65	6.15
		원/엔 (%)	(0.09)	2.02	(5.45)
2017. 7. 4	화성-14호 시험발사	증시 (EM 대비 상대성과, %pt)	(4.22)	(8.26)	(8.23)
		국채금리 (3년물, %pt)	0.00	0.04	0.15
		CDS 프리미엄 (%pt)	1.56	8.73	13.92
		원/달러 (%)	(2.22)	(1.53)	(0.45)
		원/엔 (%)	0.13	1.31	(0.30)
2017. 9. 3	6차 핵실험	증시 (EM 대비 상대성과, %pt)	1.09	-	-
		국채금리 (3년물, %pt)	0.14	-	-
		CDS 프리미엄 (%pt)	13.42	-	-
		원/달러 (%)	2.01	-	-
		원/엔 (%)	(0.11)	-	-

자료: Thomson Reuters, WiseFn, 삼성증권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국가 및 인원 추정치

연도	관련 보고서	기관	국가 및 인원 추정치
2012	The conditions of the North Korean Overseas Labor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Human Rights of NK Overseas Labor	40개국, 60,000~65,000명
2013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 현황	외교부	40개국, 46,000명 중국(19,000), 러시아(20,000), 몽골(1,800), 아프리카 등
2014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그 이후의 북한 인권	아산정책연구원	16개국, 52,300~53,100명 러시아(20,000), 중국(19,000), 몽골(1,300~2,000), 쿠웨이트(5,000), UAE(2,000), 카타르(1,800), 앙골라(1,000), 폴란드(400~500), 오만(300), 말레이시아(300), 리비아(300), 미얀마(200), 나이지리아(200), 알제리(200), 적도기니(200), 에티오피아(100)
2015, 2016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 북한 밖의 북한	북한인권정보센터	러시아, 중국(19,000), 쿠웨이트(3,500~5,000), UAE(2,000), 카타르(1,800, 매년 680명 신규인력), 오만(300), 폴란드(800~1,000), 몰타(40),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400~500), 알제리, 리비아,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앙골라, 적도기니
2016	North Korean Forced Labor in the EU, the Polish Case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아시아 센터	폴란드(2008~2015년, 총 2,783건 취업허가증 발급) 오스트리아(104~111)
2016	인신매매 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미국 국무부	러시아, 중국(송출 규모 가장 큰 국가)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국가
2016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세미나 주제 발표	통일연구원	20~40개국, 110,000~123,000명 중국(70,000~80,000), 러시아(30,000), 쿠웨이트(4,000~5,000), UAE(2,000), 카타르(1,800), 몽골(1,300~2,000), 폴란드(400~800), 말레이시아(400), 리비아(300), 오만(300)

자료: KDI

북한 주요 공휴일 및 기념일

명칭	사유	일자	내용
설날	설날	1월 1일	1989년 지정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	조선인민군 창건	2월 8일	1948년 2월 8일 김일성의 인민군 창건 (2017년부터 시행)
민족 최대의 명절	김정일 생일	2월 16일	1976년 지정, 1992년 민족 최대 명절 지정(50회 생일)
태양절	김일성 생일	4월 15일	1968년 지정, 1974년 민족 최대 명절 지정(60회 생일)
조선인민군 혁명군 창건기념일*	항일 유적대 창건	4월 25일	1996년 지정, 1932년 4월 25일 항일유격대 조직일 기준
국제노동절	노동절	5월 1일	
*	김일성 사망	7월 8일	
전승기념일	한국전 휴전	7월 27일	1996년 지정
조국 광복의 날	2차대전 종전	8월 15일	
9.9절	정권창건기념일	9월 9일	1997년 9.9절에 김일성 출생해인 1912년을 주체연호로 사용시작
추석		음력 8월 15일	1988년 지정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		10월 10일	1945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기념
*	김정일 사망	12월 17일	

참고: * 휴식일이 아닌 기념(추모)일

참고자료

- 국방부, 『국방백서』, 2016
- 권헌철,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비용 추정”, 『국방연구 2011년 8월』,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11
- 김경술,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북한 에너지 수급 영향”,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11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 김계환, “독일 통일과 산업구조조정: 남북산업협력에 대한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8
- 김상기,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정책연구시리즈 2007-09』, 한국개발연구원, 2007
- 김석진, “독일 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10년 9월』, 산업연구원, 2010
- 김성학, 『전갈의 절규: 북한의 대미 불신의 기원과 내면화』, 선인, 2017.
- 김슬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 김중호,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와 대북 정책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2012년 여름호』, 수출입은행, 2012
- 남진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추가 대북제재 관련 언론보도”,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0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6 북한 대외무역 동향』, 2017
- 박병광,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대응방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0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 변진석, “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 - 법제와 실행”, 『국제정치논총 2016-12』, 한국국제정치학회, 2016
- 손한별, “미국의 선택적 비확장정책 분석: 중국과 인도의 핵무기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15
- 신성원, “이란 핵 합의와 북한 핵 문제”, 『IFANS FOCUS 2015-05K』,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5
- 안준호, 『핵무기와 국제정치』, 열린책들, 2011.
- 양운철·하상섭, “UN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한계: 강제성의 제한과 전략적 선택의 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세종연구소, 2012
- 이상숙,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하의 북한경제와 북·중 경험 현황 및 평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7
- 이재호 외, “UN 대북경제제재의 효과분석: 결의안 1874호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11-12』, 한국개발연구원, 2011

참고자료

- 이종규,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과 대북제재”,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 이종규, “2016년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 동향 평가 및 2017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7
- 이종학, 『6.25전쟁이란 무엇인가』, 충남대학교 출판부, 2011
- 이해정 외, 『통일경제의 현재와 미래』, 현대경제연구원, 2016
- 이헌경,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와 북한에의 적용”, 『통일문제연구 2004년 하반기호』, 평화문제연구소, 2004
- 임강택, “2016년 상반기 북한의 시장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 최장호 외,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 추부길, 『북한 급변사태와 한반도 통일』, 에듀팩토리, 2016.
-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일지』, 2005~2017
- 통일부,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 2017
- 통일부, 『북한이해』, 2017.
- 통일부, 『통일백서』, 2017.
- 한국정치학회, 『통일편익연구』, 2013
- 한바란,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대북 경제제재의 2차체제 도입에 주는 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0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 한재진 외, “한중수교 25주년, 무엇이 달라졌나?”, 『경제주평 2017-33』, 현대경제연구원, 2017
- 홍민, “북한 종합시장의 지역별 분포와 운영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3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7
- Dianne E. Rennack, “North Korea: Legislative Basis for U.S. Economic Sanc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6
- Khalid, “Brasstacks Crisis 1986-87”, 『South Asian Studies』, 2012.
- Norris & Kristensen, “Global nuclear weapons inventories, 1945-2010”,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2010



삼성증권주식회사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10층 리서치센터

02 2020 8000

지점 대표번호

1588 2323 / 1544 1544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samsungPOP.com

신뢰에 가치로 답하다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RobecoSAM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